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김문길

김기태·정세정·김성아·김기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자 | 김문길 |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공동연구진 | 김기태 |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 정세정 |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 김성아 |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 김기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출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관과 용역계약(2020. 6. 8.)한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 | |
|--|------------|
| 요약 | 1 |
| 제1장 서론 | 29 |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31 |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33 |
| 제2장 청년정책 현황 | 35 |
| 제1절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37 |
| 제2절 취약계층 대상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50 |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58 |
| 제3장 다차원 빈곤 접근 적용과 현황 분석 | 61 |
| 제1절 다차원 빈곤 접근의 이해와 적용 | 63 |
| 제2절 다차원 빈곤의 현황과 추이 | 70 |
| 제3절 청년 집단별 다차원 빈곤 현황 | 72 |
| 제4절 소결 | 89 |
| 제4장 다차원 빈곤 접근을 통한 취약청년 발굴 | 93 |
| 제1절 차원별, 지표별 빈곤청년 특성 | 95 |
| 제2절 청년 다차원 빈곤의 심도와 취약집단 | 105 |
| 제3절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과 취약집단 | 109 |
| 제4절 소결 | 120 |
| 제5장 정책대응 검토 및 정책제언 | 123 |
| 제1절 경제력 | 125 |
| 제2절 주거 | 128 |



| | |
|--------------------|------------|
| 제3절 건강 | 130 |
| 제4절 고용 | 134 |
| 제5절 사회문화적 자본 | 137 |
| 제6절 안정성 | 139 |
| | |
| 참고문헌 | 143 |
| | |
| 부록 | 145 |

표 목차



| | |
|---|-----|
| 〈표 2-1〉 청년기본법에 제시된 청년정책 관련 정의 | 38 |
| 〈표 2-2〉 청년정책의 범위, 목적, 수단, 추진주체에 따른 정의 | 39 |
| 〈표 2-3〉 청년기본법에 제시된 청년정책의 영역 | 40 |
| 〈표 2-4〉 국제기구 및 주요국 청년정책영역 비교 | 43 |
| 〈표 2-5〉 청년정책 포괄 범위와 정책과제 구분(안) | 44 |
| 〈표 2-6〉 청년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제시된 취약계층 관련 조항 | 51 |
| 〈표 2-7〉 20대 국회 청년기본법안 취약계층 관련 조항 | 52 |
| 〈표 2-8〉 취업성공패키지 취약계층 지원대상자 | 53 |
| 〈표 2-9〉 중앙부처 저소득 청년 지원 사업 소득 기준 및 지원금액(2020년) | 56 |
| 〈표 2-10〉 중앙부처 인적숙성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원 기준 및 대상규모, 지원금액 | 57 |
| 〈표 3-1〉 다차원 빈곤을 개발을 위한 Alkire & Foster(2011)의 질문 | 64 |
| 〈표 3-2〉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별 내재적 가중치 | 65 |
| 〈표 3-3〉 김문길 외(2017)의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 내용과 빈곤선 | 66 |
| 〈표 3-4〉 청년의 연령구분 | 69 |
| 〈표 4-1〉 차원별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96 |
| 〈표 4-2〉 경제력 차원이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97 |
| 〈표 4-3〉 주거 차원이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98 |
| 〈표 4-4〉 건강 차원이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00 |
| 〈표 4-5〉 고용 차원이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01 |
| 〈표 4-6〉 사회문화적 자본 차원이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03 |
| 〈표 4-7〉 안정성 차원이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04 |
| 〈표 4-8〉 2018년 다차원 중첩빈곤 현황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108 |
| 〈표 4-9〉 2008~2018년 청년 차원 간 상관계수 | 110 |
| 〈표 4-10〉 2008년 청년 차원 간 상관계수 | 111 |
| 〈표 4-11〉 2018년 청년 차원 간 상관계수 | 111 |
| 〈표 4-12〉 200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 현황 | 113 |
| 〈표 4-13〉 200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115 |
| 〈표 4-14〉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 현황 | 117 |
| 〈표 4-15〉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119 |

부표 목차

| | |
|---|-----|
| 〈부표 3-1〉 연도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 145 |
| 〈부표 3-2〉 2008~2018년 연령집단별 소득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 비율 | 146 |
| 〈부표 3-3〉 2018년 청년 연령집단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 146 |
| 〈부표 3-4〉 연도별 청년 성별 분포 | 147 |
| 〈부표 3-5〉 연도별 청년 성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 147 |
| 〈부표 3-6〉 연도별 청년 교육수준 분포 | 148 |
| 〈부표 3-7〉 연도별 청년 교육수준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 148 |
| 〈부표 3-8〉 연도별 청년 가구 내 지위 분포 | 149 |
| 〈부표 3-9〉 연도별 청년 가구 내 지위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 149 |
| 〈부표 3-10〉 연도별 청년 혼인상태 분포 | 150 |
| 〈부표 3-11〉 연도별 청년 혼인상태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 150 |
| 〈부표 3-12〉 연도별 청년 종사상 지위 분포 | 151 |
| 〈부표 3-13〉 연도별 청년 종사상 지위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 151 |
| 〈부표 3-14〉 연도별 청년 주거 점유형태 분포 | 153 |
| 〈부표 3-15〉 연도별 청년 주거 점유형태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 153 |
| 〈부표 3-16〉 연도별 청년 가구 소득수준 분포 | 154 |
| 〈부표 3-17〉 연도별 청년 가구 소득수준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 154 |
| 〈부표 3-18〉 연도별 청년 거주지역 분포 | 155 |
| 〈부표 3-19〉 연도별 청년 종사상 지위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 155 |
| 〈부표 4-1〉 연도별 청년 중첩빈곤 분포 | 157 |
| 〈부표 4-2〉 연도별 차원별 청년 빈곤율 | 157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연구 사업추진체계 | 34 |
| [그림 2-1] 중앙부처 청년정책 영역별 과제 수 및 예산 비중(2020년) | 45 |
| [그림 2-2] 청년정책 과제 수 상위 10개 중앙부처(2020년) | 46 |
| [그림 2-3] 청년정책에 대한 분야별 청년들의 인지도 분포(2019년) | 46 |
| [그림 2-4] 청년정책에 대한 분야별 청년들의 수혜율 분포(2019년) | 47 |
| [그림 2-5] 청년정책에 대한 분야별 청년들의 필요하다는 응답 분포(2019년) | 47 |
| [그림 2-6] 청년정책에 대한 분야별 청년 수혜자들의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분포(2019년) | 48 |
| [그림 2-7] 청년정책 정책유형별 과제 수 및 예산 비중(2020년) | 49 |
| [그림 2-8] 중앙부처 청년정책 지원 대상별 과제수(2020년) | 50 |
| [그림 2-9] 청년 취약계층 정의 유형 | 52 |
| [그림 2-10] 중앙부처 청년정책 취약계층별 과제수(2020년) | 55 |
| [그림 3-1] 김문길 외(2017)의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률 | 64 |
| [그림 3-2] 2008~2018년 다차원 빈곤의 현황과 추이 | 70 |
| [그림 3-3] 2008~2018년 연령집단별 소득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 비율 | 71 |
| [그림 3-4] 2018년 청년 연령집단별 다차원 빈곤 | 72 |
| [그림 3-5] 성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 73 |
| [그림 3-6] 2018년 청년 성별 다차원 빈곤 | 74 |
| [그림 3-7] 교육수준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 75 |
| [그림 3-8] 2018년 청년 교육수준별 다차원 빈곤 | 76 |
| [그림 3-9] 가구 내 지위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 77 |
| [그림 3-10] 2018년 청년 가구 내 지위별 다차원 빈곤 | 78 |
| [그림 3-11] 혼인상태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 79 |
| [그림 3-12] 2018년 청년 혼인상태별 다차원 빈곤 | 80 |
| [그림 3-13] 종사상 지위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 81 |
| [그림 3-14] 2018년 청년 종사상 지위별 다차원 빈곤 | 83 |
| [그림 3-15] 주거 점유형태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 84 |
| [그림 3-16] 2018년 청년 주거 점유형태별 다차원 빈곤 | 85 |
| [그림 3-17] 가구 소득수준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 86 |
| [그림 3-18] 2018년 청년 가구 소득수준별 다차원 빈곤 | 87 |
| [그림 3-19] 거주지역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 88 |
| [그림 3-20] 2018년 청년 거주지역별 다차원 빈곤 | 89 |



| | |
|---|-----|
| [그림 4-1] 연도별 청년 다차원 중첩빈곤 추이 | 107 |
| [그림 4-2] 연도별 차원별 청년 빈곤 추이 | 110 |
| [그림 4-3] 2008년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잠재집단모형 적합도 | 112 |
| [그림 4-4] 200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의 차원 빈곤 확률 | 114 |
| [그림 4-5] 2018년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잠재집단모형 적합도 | 116 |
| [그림 4-6]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의 차원 빈곤 확률 | 118 |



요약

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급물살을 탄 청년정책 형성 과정에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세 가지의 목적으로 세분할 수 있음.
- 먼저, 다차원 빈곤 접근을 통해서 취약청년은 빈곤청년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애 중요한 조건들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혹은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 둘째, 청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청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취약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음. 각 영역별, 지표별 취약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취약청년 정책대상을 가려내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셋째, 목적은 다양한 청년정책의 선정기준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2. 청년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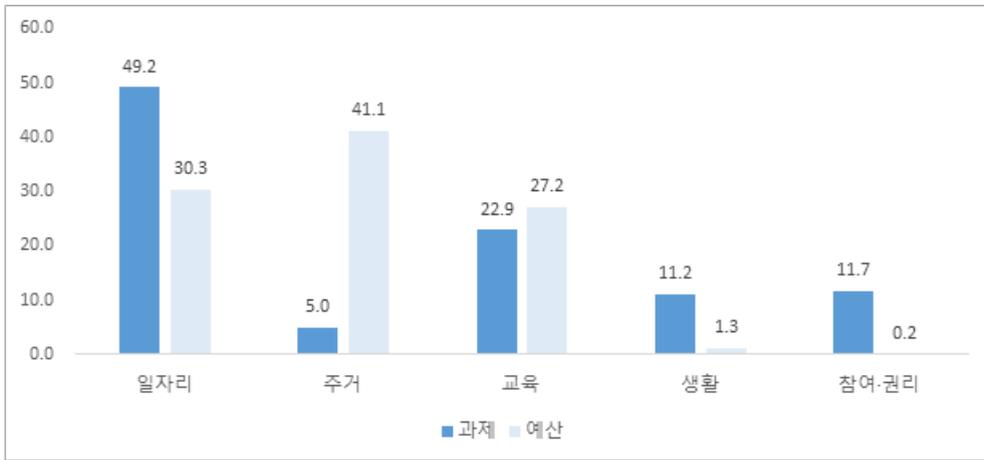
- 청년기본법 제정을 배경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30개 부처 및 처, 청에서 총 179개 사업이 있음.
- 전체 사업 예산은 16조 8천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서 2조 9백억 원이 증가하였음.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의 정책영역 구분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과제는 일자리 분야가 88개로 전체 과제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서 교육 분야가 41개, 참여·권리 분야가 21개, 생활 분야가 20개, 주

2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거 분야가 9개 순임.

- 청년정책 예산은 주거 분야가 6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자리 분야가 5조 1천억 원, 교육 분야가 4조 5천억 원, 생활 분야가 2조 1천억 원, 마지막으로 참여 및 권리 분야가 2천 7백억 원임.

[요약그림 1] 중앙부처 청년정책 영역별 과제 수 및 예산 비중(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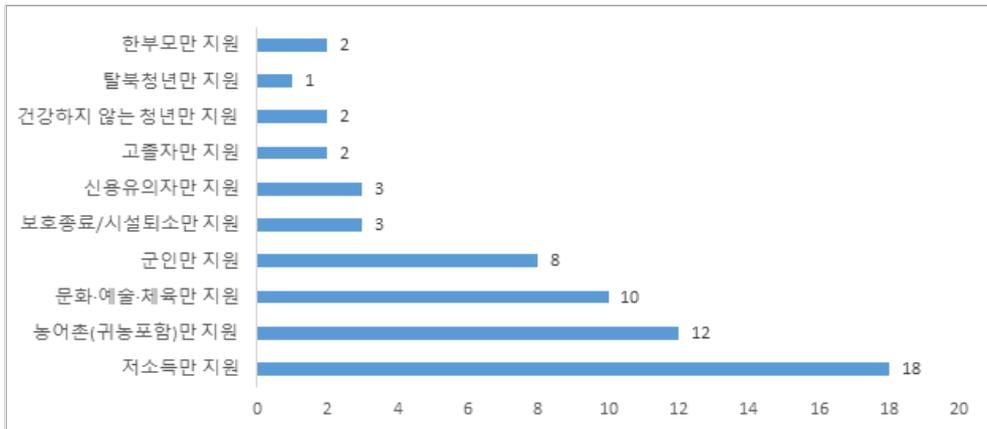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 내부자료(2020).

- 인적 속성이나 다차원 빈곤에 따른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살펴 보면, 빈곤 중 저소득 청년만을 지원하는 정책과제는 총 18개로 취약계층 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대표적인 사업은 일자리 분야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교육 분야의 장학금 지원, 주거 분야의 전, 월세 지원 등임.
 -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과제는 과제 수가 많지 않지만 청년정책의 대표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제외하거나 차등 지원을 하고 있음.
- 인적 속성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은 농촌, 어촌의 청년과 귀농을 포함한 예비 농부나 어부 등을 지원하는 과제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 예술인이나 예비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과제가 10개, 의무 복무 중인 장병이나 직업군인을 돕거나 제대나 퇴역 후를 지원하는 과제가 8개로 많음.

- 주로 해당 부처나 청, 처가 있는 정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정책대상인 장애인, 건강하지 않은 청년, 저학력자, 다문화 및 탈북청년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많지 않음.

[요약그림 2] 중앙부처 청년정책 취약계층별 과제수(2020년)



자료: 국무조정실 내부자료(2020).

3. 다차원 빈곤 접근과 현황

가. 분석 개요

- 다차원 빈곤은 빈곤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인 소득 빈곤의 한계에서 출발하였음.
 - 소득 빈곤은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개인화하여 가구 내 가구원 간 사적이 전이나 개인의 소득 자체를 포착하지 못함. 또한 소득 이외의 생활영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빈곤 경험이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할 수 있음.
 -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적 방식의 빈곤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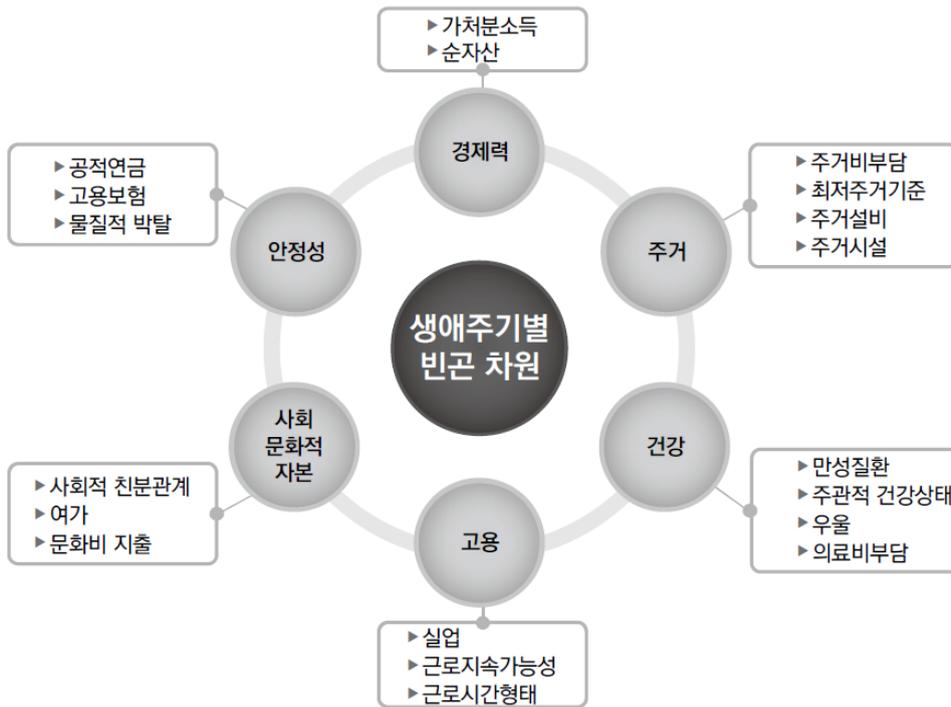
4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을 비화폐적 범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 등장하였음.

□ 김문길 외(2017)는 청년 등 세대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틀을 제안하였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6개 차원과 19개 지표로 구성됨.

○ 여기에서는 김문길 외(2017)의 다차원 빈곤틀을 준용하되, 6개 차원 및 19개 지표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설정하는 내재적 가중치를 활용함.

[요약그림 3] 김문길 외(2017)의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틀



자료: 김문길 외(2017), p.257.

○ 각 지표를 기준으로 최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을 빈곤한 것으로 가정하고, 전체 청년 대비 빈곤한 청년의 비율을 빈곤율로 산정한 후, 내재적 가중치를 적용하여 차원 빈곤 점수(d_{ij})와 다차원 빈곤 점수(mp_i)를 산출함. 구체적인 차원 빈곤 점수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1) \quad d_{ij} = \sum m_k w_k$$

- 차원 빈곤 점수에 차원별 내재적 가중치를 고려한 다음의 산식을 활용해 다차원 빈곤 점수를 산출함. 최종적인 다차원 빈곤 점수는 비빈곤한 0점부터 모든 차원과 지표가 빈곤한 1점까지의 범위에서 계산됨.

$$(2) \quad mp_i = \sum d_{ij} w_j$$

- 다차원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자료는 3~14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임(이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 한국복지패널은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구와 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가구 단위 분석과 개인 단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짐.
 - 또한,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하였으므로, 다른 패널조사에 비해 저소득 빈곤 집단의 유효표본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빈곤 연구에 용이함.
-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청년 다차원 빈곤 분석에서 청년은 다음과 같이 연령을 고려하여 정의함.
 -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2020.2.4., 제정)」 제3조(정의)에 의해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청년의 연령구분을 세분화하여 만 19~24세 청년은 초기 청년으로, 만 25~29세 청년은 중기 청년으로, 만 30~34세 청년은 후기 청년으로 조작적 정의함.

6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요약표 1〉 청년의 연령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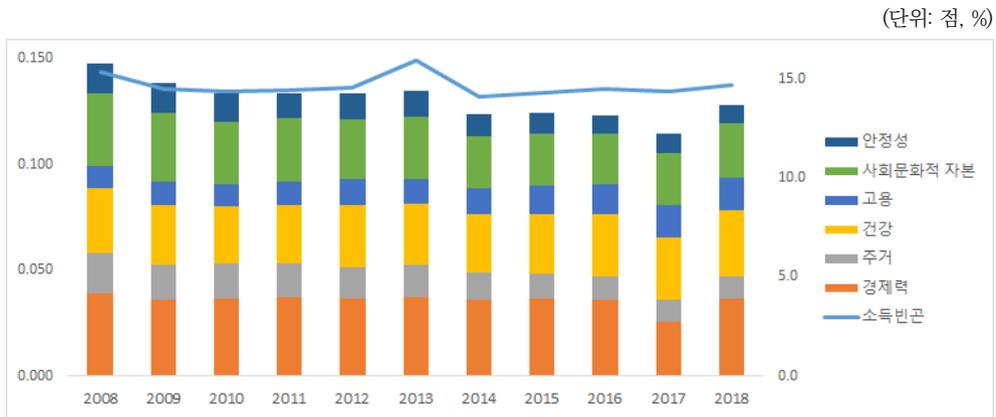
| 청년 (19~34세) | | | 중장년 35~64세 | 노인 65세 이상 |
|-----------------|-----------------|-----------------|---------------|--------------|
| 초기 청년 19~24세 | 중기 청년 25~29세 | 후기 청년 30~34세 | | |

나. 다차원 빈곤의 현황과 추이

□ 다음 그림은 최근 10년 19세 이상 성인의 다차원 빈곤 추이임.

- 그림에서 막대그래프의 총 높이는 다차원 빈곤 점수이고, 개별 요소는 다차원 빈곤의 개별 차원의 점수임. 선그래프는 분석표본의 소득빈곤 수준임.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다차원 빈곤은 2017년까지 정체와 완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다소 악화됨.

[요약그림 4] 다차원 빈곤의 현황과 추이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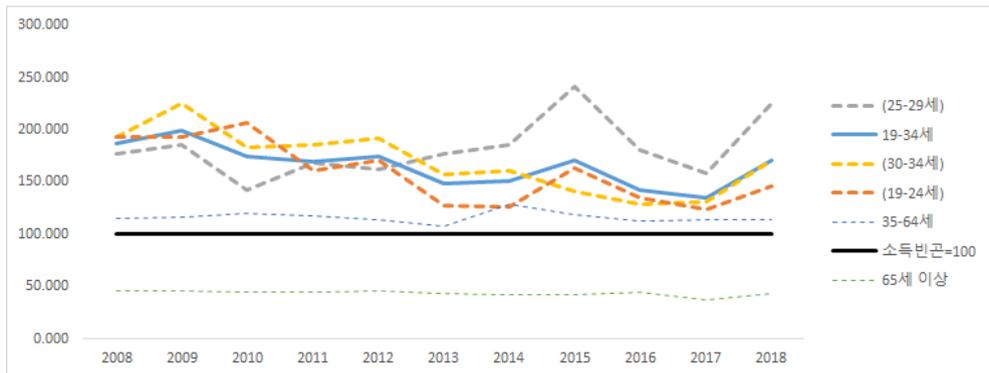
□ 19~34세 청년, 35~64세 중장년,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의 배율임.

- 전통적인 방식인 소득 빈곤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나 다차원 빈곤 접근에서 식별이 가능한 취약계층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득 빈곤의 관점에서 취약 집단인 65세 이상을 차지하고, 35~64세 중장년의 다차원 빈곤 배율은 지난 10년간 110~120 정도를 유지함.
- 반면, 청년은 소득 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 점수의 배율이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높으며 그 등락도 선명한 편임. 이는 청년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다차원적인 취약성 뿐 아니라 기존의 소득 빈곤 접근으로는 청년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 다차원 빈곤 접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청년의 취약성은 특히 2012년 이후부터 고등학교를 마치고 독립을 시작하는 25~29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요약그림 5] 연령집단별 소득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 배율

(단위: 배율)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임.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소득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 배율은 다차원빈곤 점수를 소득빈곤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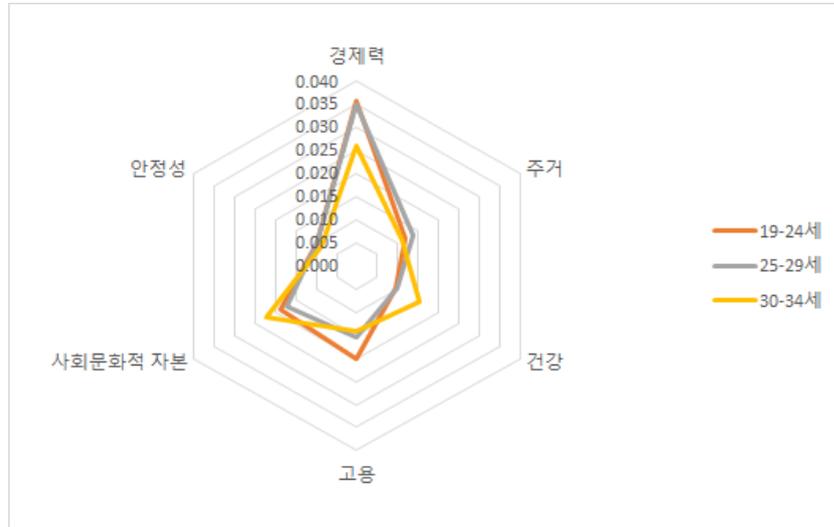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다음은 청년의 연령집단별 다차원 빈곤 수준임.
 - 19~24세 초기 청년 및 25~29세 중기 청년은 경제력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특히 초기 청년은 고용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높음.
 - 30~34세 후기 청년은 상대적으로 경제력과 고용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낮고, 건강과 사회문화적 자본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높음.

8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요약그림 6] 2018년 청년 연령집단별 다차원 빈곤

(단위: 점)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다. 청년 집단별 다차원 빈곤 현황

□ 여기에서는 19-34세 청년의 다차원 빈곤의 현황을 집단에 따라 분석함.

○ 분석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현황을 분석하되, 중간 시점인 2010년과 2015년의 추이를 함께 확인함.

○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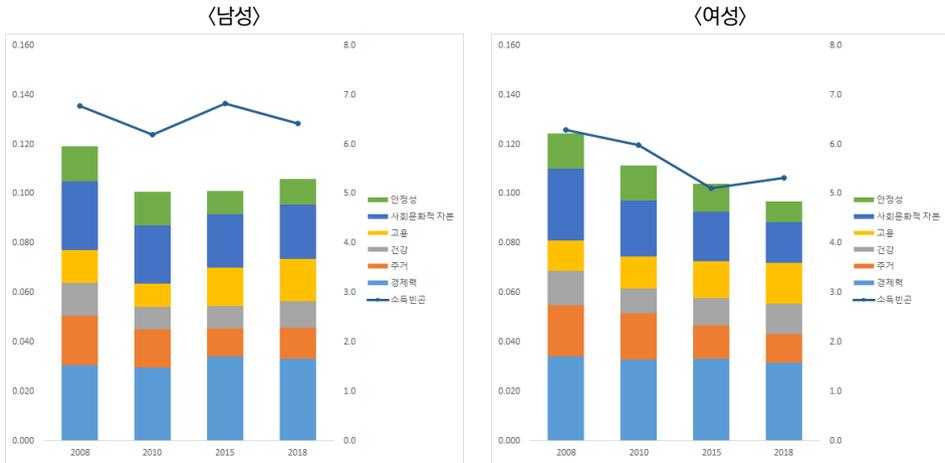
□ 성별에 따라 2008년에는 여성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0.124점으로 남성에 비해 높았으나 지난 10년간 0.097점까지 지속적으로 완화된 반면, 남성의 다차원 빈곤 점수는 2008년 0.119점에서 2010년 0.1점으로 완화된 이후 2018년까지 지속됨.

○ 남성: 0.119('08) → 0.100('10) → 0.101('15) → 0.105('18) △

○ 여성: 0.124('08) → 0.111('10) → 0.105('15) → 0.097('18) ▽

[요약그림 7] 성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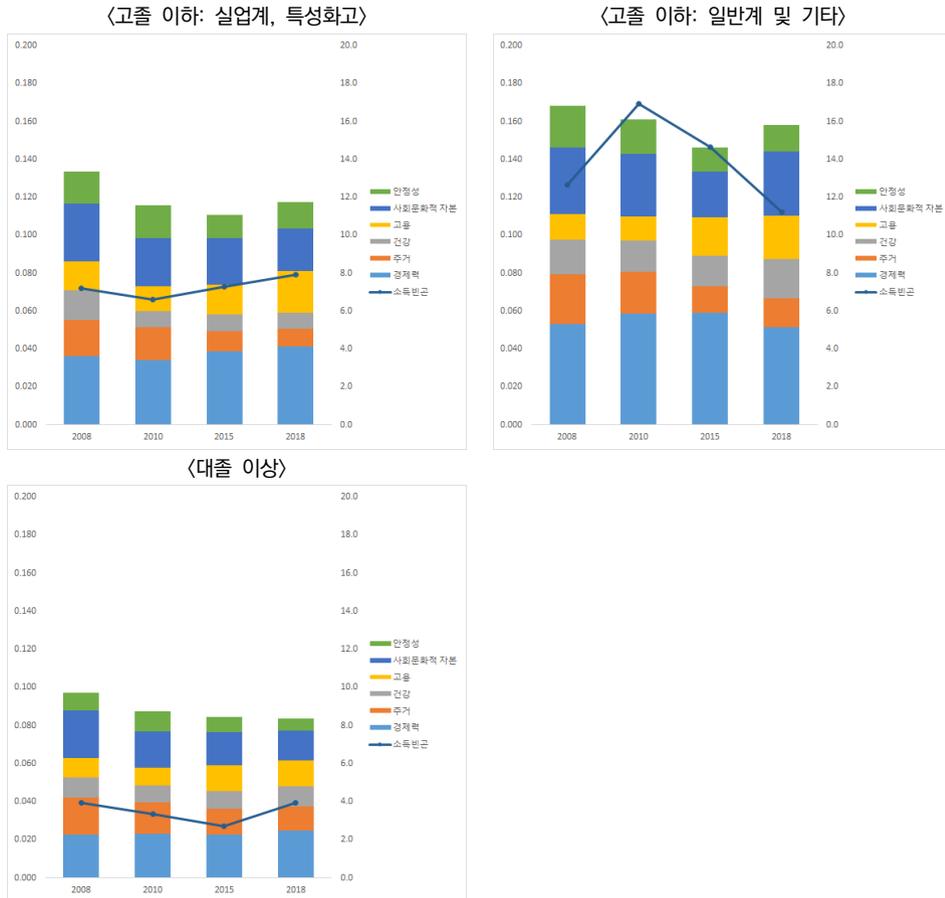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부표 3-5>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교육수준별로 대졸 이상에 비해 실업계 및 특성화고 고졸 이하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높고, 일반계 등 기타 유형 고졸 이하 집단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가장 높음.
- 고졸이하(실업계, 특성화고): 0.135('08) → 0.118('10) → 0.112('15) → 0.118('18)
- 고졸이하(일반계 등 기타): 0.166('08) → 0.161('10) → 0.146('15) → 0.154('18)
- 대졸이상: 0.097('08) → 0.086('10) → 0.086('15) → 0.085('18)

10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요약그림 8] 교육수준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부표 3-7>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가구 내 지위에 따라 1인 가구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2008년 0.145점에서 2018년 0.135점으로 가장 높음. 가구주 및 배우자인 청년의 다차원 빈곤이 2008년 0.125점에서 2018년 0.091점으로 많이 완화되어 최근 시점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 1인 가구: 0.145('08) → 0.128('10) → 0.145('15) → 0.135('18)

○ 가구주/배우자: 0.125('08) → 0.102('10) → 0.094('15) → 0.091('18)

○ 자녀/자녀의 배우자: 0.116('08) → 0.104('10) → 0.102('15) → 0.098('18)

[요약그림 9] 가구 내 지위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기타는 가구주나 배우자,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외 지위를 포함하여 제외함. <부표 3-9>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12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가장 높고, 실업자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다음 수준으로 높음. 특히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실업자는 2008년 0.162점과 0.167점에서 2018년 0.196점과 0.172점으로 악화되었음.

○ 상용직 임금근로자: 0.087('08) → 0.075('10) → 0.069('15) → 0.066('1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201('08) → 0.177('10) → 0.195('15) → 0.179('18)

○ 특수고용직 근로자: 0.162('08) → 0.157('10) → 0.207('15) → 0.19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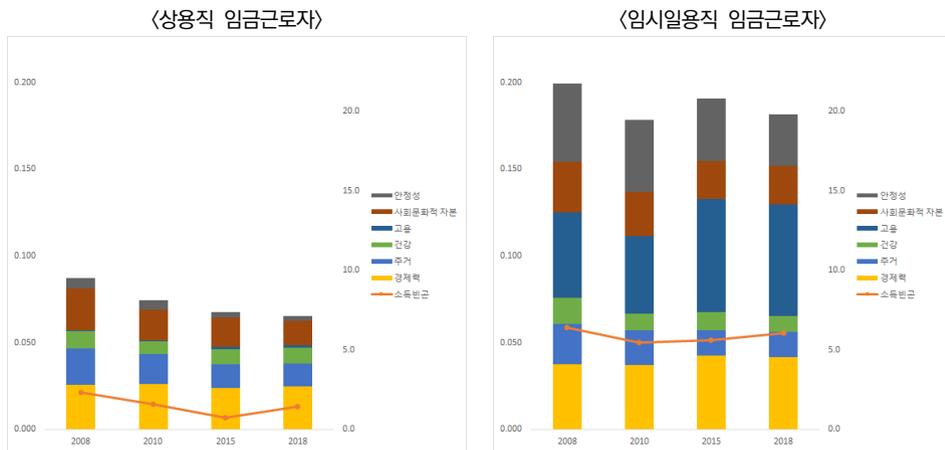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 0.088('08) → 0.088('10) → 0.073('15) → 0.06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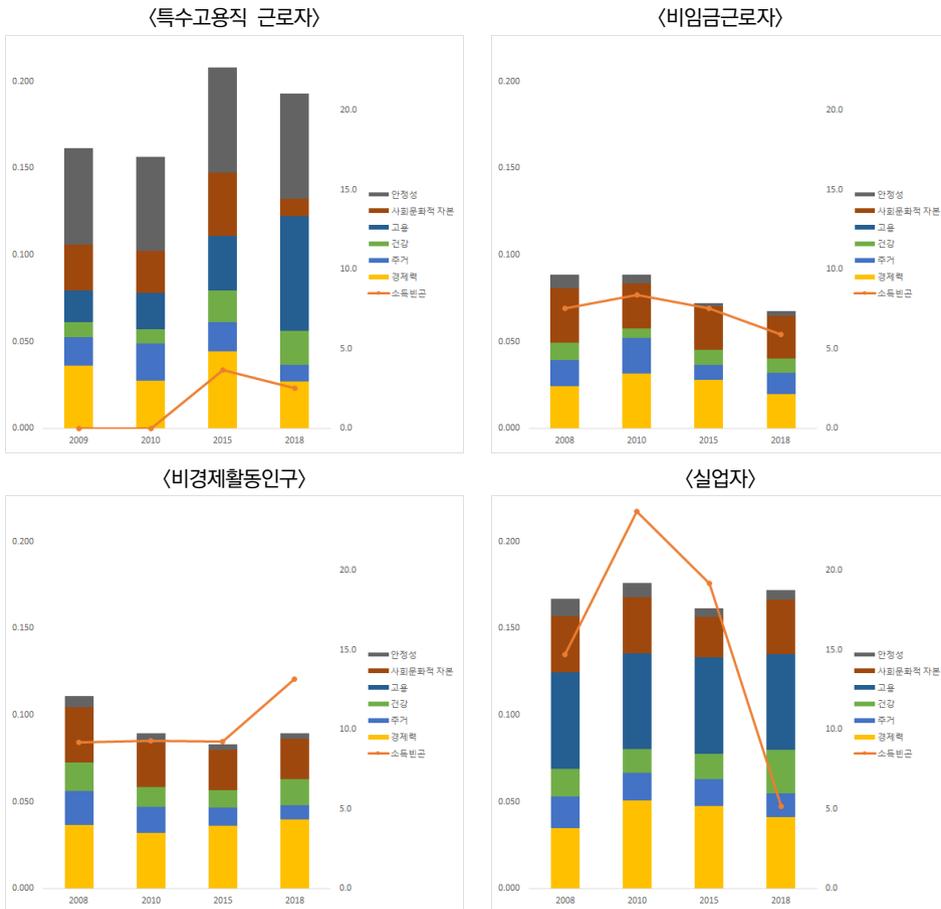
○ 비경제활동인구: 0.111('08) → 0.087('10) → 0.080('15) → 0.087('18)

○ 실업자: 0.167('08) → 0.181('10) → 0.161('15) → 0.172('18)

[요약그림 10] 종사상 지위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자활근로, 공공근로를 포함함.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부표 3-13>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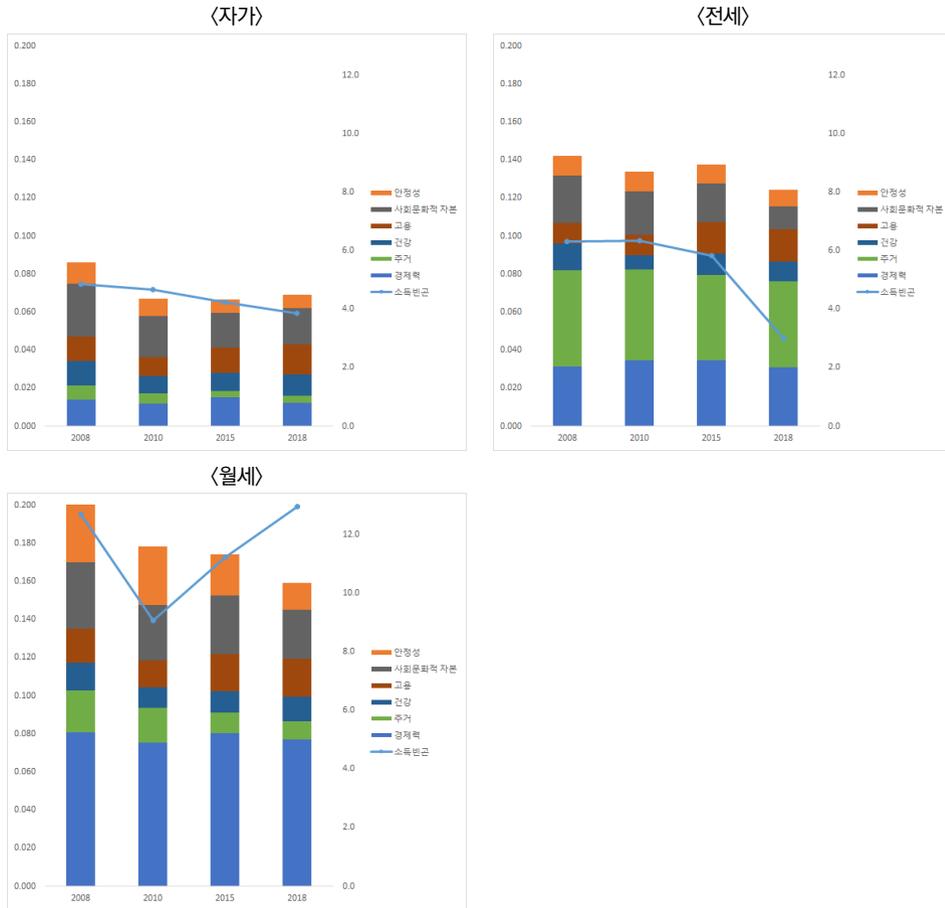
□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가장 높고,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이 다음 수준임.

- 자가: 0.086('08) → 0.066('10) → 0.066('15) → 0.068('18)
- 전세: 0.141('08) → 0.134('10) → 0.139('15) → 0.124('18)
- 월세: 0.198('08) → 0.178('10) → 0.173('15) → 0.157('18)

14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요약그림 11] 주거 점유형태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부표 3-15>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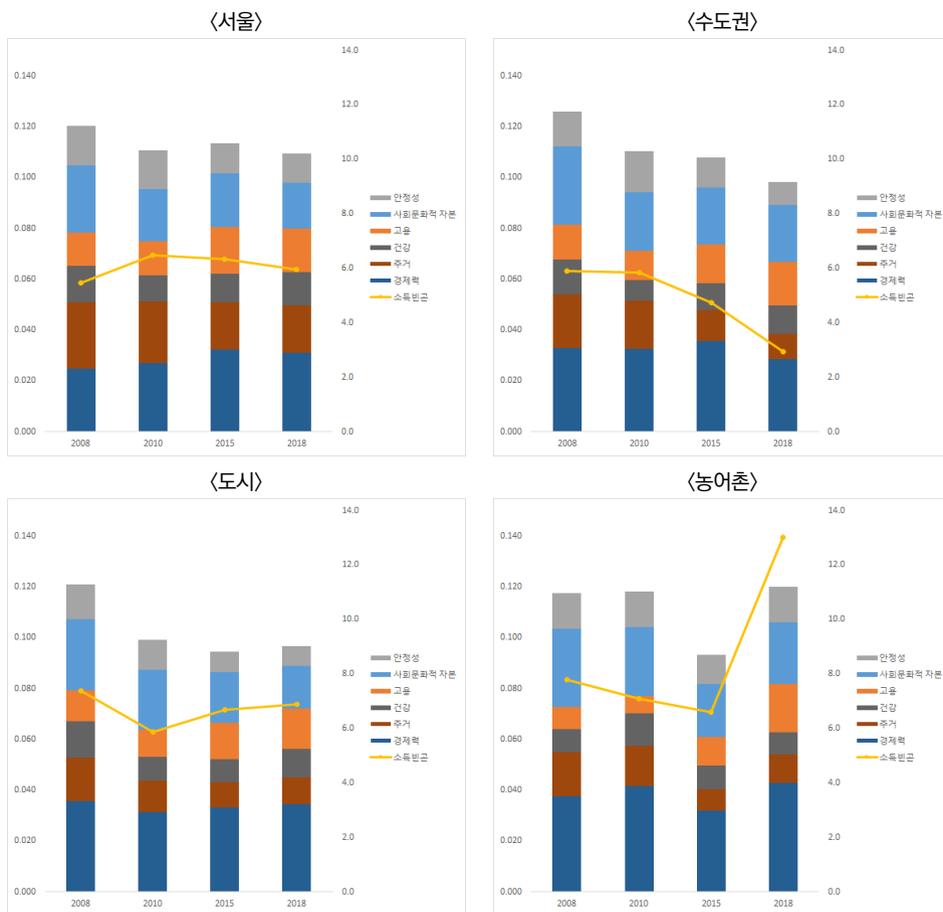
□ 거주지역별로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에 비해 농어촌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높음.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은 다른 지역의 청년에 비해 주거의 빈곤 점수가 높음.

○ 서울: 0.121('08) → 0.112('10) → 0.114('15) → 0.112('18)

- 수도권: 0.127('08) → 0.109('10) → 0.112('15) → 0.097('18)
- 도 시: 0.120('08) → 0.097('10) → 0.092('15) → 0.095('18)
- 농어촌: 0.117('08) → 0.122('10) → 0.095('15) → 0.118('18)

[요약그림 12] 거주지역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부표 3-19>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다차원 빈곤 접근을 활용한 청년의 실태분석 결과, 고졸 이하(일반계 등 기타), 1인 가구,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및 실업자, 전세 및 월세 거주, 농어촌 거주 청년이 지속적으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남.

4. 다차원 빈곤 접근을 통한 취약청년 발굴

가. 차원 및 지표별 빈곤청년 특성

- 다음 표는 6가지 차원별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줌.
 - 각 차원별 수치는 각 차원을 구성하는 개별 지표의 빈곤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카운트 한 값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음영으로 따로 표시함.
 - 성별로는 남성이 경제력,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 측면에서, 여성이 건강 측면에서 취약함.
 - 교육수준별로는 일반계고 졸업생 이하는 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전문계고 졸업생 이하는 안정성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 내 지위로 보면 1인 가구가 경제력, 주거,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하고, 미혼은 경제력에서, 기타는 고용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력에서, 임시일용직은 주거와 고용에서, 특수고용직은 고용과 안정성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력, 사회문화적 자본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는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주거점유형태별로는 전세가 경제력과 주거에서, 월세는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에서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음.
 - 소득수준별로는 빈곤층이 고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취약하고, 중산층 청년이 고용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은 주거에서, 도시와 농어촌은 경제력에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요약표 2〉 차원별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전체 | | 34.8 | 25.9 | 22.2 | 24.6 | 35.3 | 15.4 |
| 성별 | 남성 | 35.7 | 25.4 | 20.0 | 25.5 | 40.1 | 16.9 |
| | 여성 | 33.7 | 26.5 | 24.7 | 23.6 | 29.6 | 13.6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실업계, 특성학교) | 43.5 | 21.7 | 16.2 | 29.1 | 40.0 | 22.8 |
| | 고졸이하 (일반계 등 기타) | 52.0 | 31.0 | 33.4 | 34.6 | 55.8 | 22.0 |
| | 대졸이상 | 27.5 | 26.6 | 22.4 | 20.6 | 29.0 | 10.7 |
| 가구 내 지위 | 1인가구 | 74.0 | 37.3 | 21.6 | 29.0 | 19.6 | 19.5 |
| | 가구주/배우자 | 35.1 | 28.8 | 20.9 | 17.2 | 25.6 | 9.8 |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27.7 | 22.1 | 22.6 | 27.6 | 42.0 | 17.0 |
| 혼인상태 | 유배우 | 33.4 | 38.0 | 27.5 | 28.9 | 51.2 | 27.6 |
| | 미혼 | 35.4 | 27.2 | 20.4 | 17.5 | 26.9 | 9.9 |
| | 기타 | 28.9 | 25.4 | 23.0 | 28.1 | 38.7 | 17.7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45.3 | 27.6 | 19.4 | 2.2 | 27.9 | 4.8 |
| | 임금근로자 | 30.0 | 31.2 | 18.4 | 90.9 | 38.6 | 47.8 |
| | 임시일용직 | 22.4 | 22.8 | 26.6 | 90.2 | 24.4 | 86.4 |
| | 특수고용직 | 37.8 | 26.3 | 19.6 | 0.0 | 36.6 | 5.0 |
| | 비임금근로자 | 44.1 | 19.3 | 25.9 | 0.0 | 43.5 | 5.2 |
| |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 13.6 | 27.3 | 47.9 | 100.0 | 45.1 | 9.7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34.6 | 8.7 | 23.1 | 22.3 | 36.7 | 11.6 |
| | 전세 | 79.7 | 97.8 | 20.3 | 23.2 | 23.2 | 14.3 |
| | 월세 | 100.0 | 18.6 | 22.0 | 31.2 | 41.3 | 22.5 |
| 가구 소득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39.1 | 35.2 | 47.1 | 23.2 | 53.7 | 28.6 |
| | 중위소득 50~150% | 4.5 | 24.6 | 23.9 | 28.2 | 36.3 | 17.1 |
| | 중위소득 150% 이상 | 32.7 | 27.5 | 10.3 | 13.8 | 27.4 | 6.4 |
| 거주지역 | 서울 | 32.1 | 38.4 | 21.8 | 26.6 | 34.2 | 18.1 |
| | 수도권 | 36.6 | 22.4 | 22.9 | 24.7 | 37.8 | 14.4 |
| | 도시 | 42.7 | 22.4 | 22.8 | 23.0 | 31.9 | 13.4 |
| | 농어촌 | 42.7 | 22.8 | 17.5 | 26.6 | 44.5 | 20.6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나. 청년 다차원 빈곤의 심도와 취약청년

□ 다차원 빈곤의 심각성, 즉 빈곤의 심도를 빈곤한 차원의 수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수식을 활용해 우선 차원별 빈곤 여부를 판정함.

- 차원을 구성하는 지표 중 하나라도 빈곤하면 해당 차원은 빈곤한 것으로 정의하여 1의 점수를 부여하고, 하나의 지표도 빈곤하지 않으면 비빈곤으로 정의하여 0의 점수를 부여함. 구체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음.

$$(3) \quad P_d = \begin{cases} 1 & \text{if } MP_d > 0 \\ 0 & \text{if } MP_d = 0 \end{cases}$$

- 그리고 빈곤의 심도는 빈곤한 차원의 수로 조작적 정의함. 이를 위해 (3)의 수식을 통해 빈곤하다고 판정하여 1점을 부과한 6개 차원의 빈곤 판정 점수를 합산함. 다차원 빈곤 심도, 즉 K는 최소 0부터 최대 6까지의 범위에서 정의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차원 빈곤의 심도가 깊어지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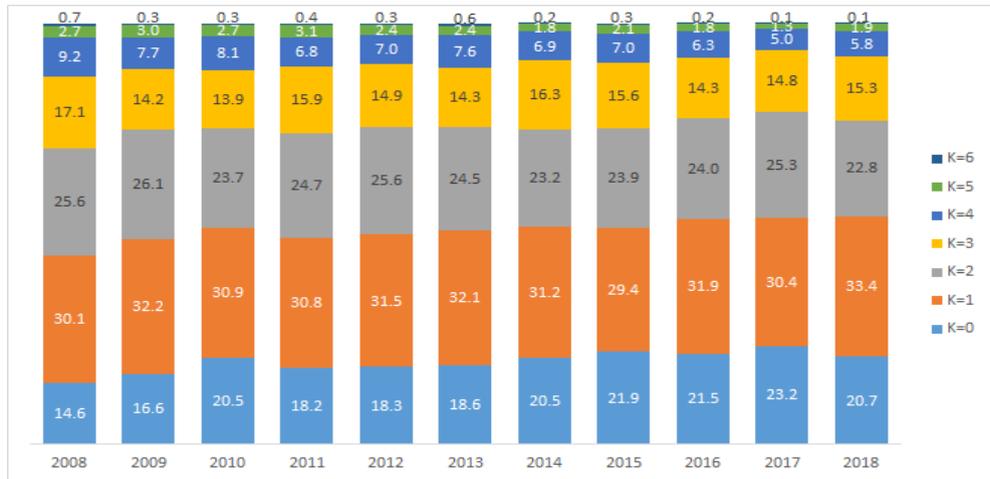
$$(4) \quad K = \sum_{d=1}^6 P_d$$

□ 2008년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심도는 개선됨.

- 연도별 변동을 보이지만 1개의 차원도 빈곤하지 않은 청년이 2008년 14.6%에서 2018년 20.7%로 6.1%p 개선됨.
- 6개 모든 차원이 빈곤한 청년은 2008년 0.7%에서 2018년 0.1%로 점차 감소하였음.

[요약그림 13] 연도별 청년 다차원 중첩빈곤 추이

(단위: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유효 표본 크기는 <부표 4-1>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2018년 현재 기준, 빈곤한 차원의 수가 4개 이상, 즉 다차원 빈곤의 심도가 깊은 취약청년은,

- 남성, 서울 및 수도권 거주, 고졸 이하, 전세 및 월세 거주,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1인 가구 및 저소득 청년임.

<요약표 3> 2018년 다차원 중첩빈곤 현황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K=0 | K=1 | K=2 | K=3 | K=4 | K=5 | K=6 |
|------|-----------------|-------------|-------------|-------------|-------------|-------------|------------|------------|
| 전체 | | 20.7 | 33.4 | 22.8 | 15.3 | 5.8 | 1.9 | 0.1 |
| 성별 | 남성 | 19.2 | 34.1 | 22.5 | 15.1 | 7.0 | 2.1 | 0.1 |
| | 여성 | 22.6 | 32.7 | 23.1 | 15.5 | 4.5 | 1.7 | 0.0 |
| 연령대 | 19-24세 | 21.0 | 29.0 | 25.7 | 17.0 | 5.2 | 2.0 | 0.1 |
| | 25-29세 | 17.7 | 38.3 | 20.9 | 14.8 | 6.8 | 1.6 | 0.0 |
| | 30-34세 | 23.1 | 34.4 | 21.0 | 13.6 | 5.7 | 2.2 | 0.1 |
| 지역 | 서울 | 18.4 | 30.2 | 26.1 | 15.5 | 6.3 | 3.5 | 0.0 |
| | 수도권 | 19.6 | 39.6 | 17.8 | 14.7 | 6.9 | 1.5 | 0.0 |
| | 도시 | 23.2 | 31.5 | 24.4 | 15.3 | 4.4 | 1.0 | 0.2 |
| | 농어촌 | 19.7 | 27.3 | 25.5 | 16.9 | 7.1 | 3.5 | 0.0 |
| 교육수준 | 고졸이하(실업계, 특성화고) | 22.2 | 25.3 | 22.4 | 19.3 | 8.9 | 2.0 | 0.0 |
| | 고졸이하(일반계 등 기타) | 4.9 | 26.4 | 28.7 | 21.0 | 13.4 | 5.5 | 0.2 |
| | 대졸이상 | 23.4 | 38.4 | 21.7 | 12.4 | 2.9 | 1.1 | 0.1 |

20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 구분 | | K=0 | K=1 | K=2 | K=3 | K=4 | K=5 | K=6 |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32.3 | 36.0 | 18.8 | 9.8 | 2.5 | 0.6 | 0.0 |
| | 전세 | 0.9 | 34.3 | 31.3 | 20.8 | 9.6 | 3.1 | 0.0 |
| | 월세 | 8.2 | 26.1 | 27.4 | 23.3 | 10.5 | 4.4 | 0.1 |
| | 기타 | 9.4 | 32.7 | 19.3 | 24.4 | 10.7 | 2.4 | 1.0 |
| 중사상 지위 | 상용직 임금근로자 | 28.5 | 42.6 | 20.3 | 6.8 | 1.6 | 0.1 | 0.0 |
|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 0.8 | 13.5 | 29.5 | 32.9 | 16.1 | 6.9 | 0.4 |
| | 특수고용직 | 0.0 | 8.6 | 26.0 | 41.6 | 23.8 | 0.0 | 0.0 |
| | 비임금근로자 | 27.9 | 46.8 | 18.5 | 3.6 | 0.5 | 2.6 | 0.0 |
| | 비경제활동인구 | 26.3 | 35.7 | 22.3 | 12.2 | 2.5 | 1.0 | 0.0 |
| | 실업자 | 0.0 | 14.5 | 21.9 | 40.7 | 20.9 | 2.0 | 0.0 |
| 가구 내 지위 | 1인가구 | 4.9 | 36.1 | 24.1 | 24.3 | 9.7 | 1.0 | 0.0 |
| | 가구주/배우자 | 26.8 | 34.1 | 21.1 | 12.0 | 4.9 | 1.1 | 0.0 |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20.8 | 32.9 | 23.1 | 15.3 | 5.5 | 2.3 | 0.0 |
| | 기타 | 4.2 | 28.2 | 28.3 | 22.2 | 10.1 | 5.0 | 2.0 |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0.0 | 14.3 | 22.3 | 35.0 | 19.1 | 8.4 | 0.9 |
| | 중위소득 50~150% | 17.2 | 31.9 | 25.3 | 17.7 | 6.1 | 1.8 | 0.0 |
| | 중위소득 150% 이상 | 37.1 | 43.2 | 15.0 | 2.5 | 1.5 | 0.6 | 0.0 |

주: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볼드체는 전체보다 높은 경우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다.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과 취약청년

□ 잠재집단분석은 관찰할 수 있는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재하지 않는 잠재집단을 식별하는 기법임(이현주, 정은희, 2014, p.8).

□ 잠재집단분석에 앞서, 다차원 빈곤 분석틀을 구성하는 6개 차원 빈곤 간 상관관계 변화를 확인함.

○ 상관계수의 숫자가 클수록 상관관계가 높고, 별이 많을수록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임.

○ 2008년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차원은 고용과 안정성임(0.4093***).

- 경제력이 다른 모든 차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되, 상대적으로 고용과의 상관관계가 약한 편임.

〈요약표 4〉 2008년 청년 차원 간 상관계수

(단위: %)

| 구분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
| 주거 | 0.1924 *** | 1 | | | |
| 건강 | 0.1849 *** | 0.0635 *** | 1 | | |
| 고용 | 0.0445 * | 0.0191 | 0.0427 * | 1 | |
| 사회문화적 자본 | 0.1591 *** | 0.0147 | 0.1138 *** | 0.0035 | 1 |
| 안정성 | 0.2495 *** | 0.0740 *** | 0.0798 *** | 0.4093 *** | 0.0746 ***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0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0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최근 시점인 2018년 6개 차원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고용 빈곤과 안정성 빈곤의 상관계수가 0.5052으로 강화됨.

- 경제력 빈곤과 다른 모든 차원과의 상관관계는 계수의 크기와 함께 2008년에 비해 작지만 모든 영역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이 강화됐지만, 건강 빈곤과 주거 빈곤, 고용 빈곤, 안정성 빈곤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요약표 5〉 2018년 청년 차원 간 상관계수

(단위: %)

| 구분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
| 주거 | 0.1185 *** | 1 | | | |
| 건강 | 0.1330 *** | -0.0134 | 1 | | |
| 고용 | 0.0890 *** | 0.0511 * | 0.0039 | 1 | |
| 사회문화적 자본 | 0.0984 *** | -0.0585 * | 0.1096 *** | 0.0383 | 1 |
| 안정성 | 0.1841 *** | 0.0697 ** | 0.0038 | 0.5052 *** | 0.0893 ***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2008년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유형을 잠재집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집단은 6개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으므로 **저빈곤 집단**으로 분류하였음.

-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69.1%인데, 2008년 전체 청년 중 64.4%가 이 유형으로 분류됨.

- 두 번째 집단은 경제력이 빈곤할 확률이 100%인 **경제력빈곤** 집단임.
 - 이 집단의 경우, 주거가 빈곤할 확률은 57.5%이고, 사회문화적 자본이 빈곤할 확률은 56.8%, 건강이 빈곤할 확률은 41.7%로 비교적 높음. 즉, 경제력이 빈곤한 청년은 주거와 사회문화적 자본, 건강이 함께 빈곤할 확률이 높음.
 -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20.0%인데, 2008년 현재 전체 청년 중 25.6%가 이 유형으로 분류됨.
- 마지막 집단은 고용이 빈곤할 확률이 78.7%로 높고, 안정이 빈곤할 확률은 100%인 **고용·안정성빈곤** 집단임.
 - 즉, 고용이 빈곤하면 안정성이 빈곤할 가능성이 높음.
 -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10.9%인데, 2008년 현재 전체 청년의 10.0%가 이 유형으로 분류됨.

〈요약표 6〉 200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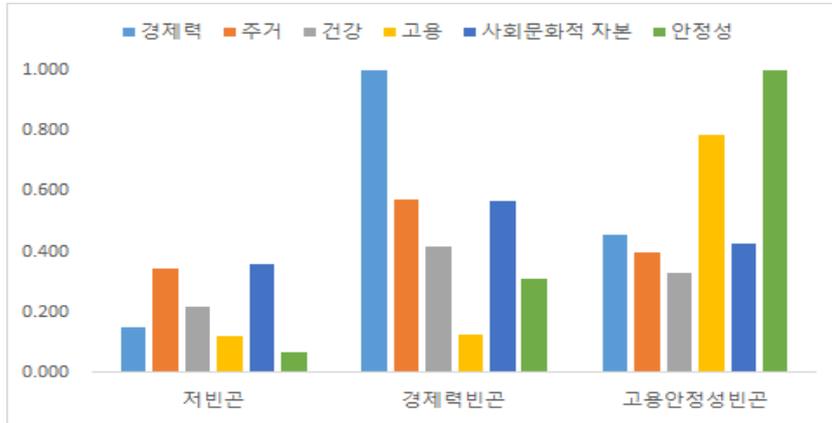
| 구분 | | 저빈곤 | 경제력빈곤 | 고용안정성빈곤 |
|-------------------|----------|--------------|--------------|--------------|
| 영역 확률 (×100=%) | 경제력 | 0.149 | 1.000 | 0.457 |
| | 주거 | 0.344 | 0.575 | 0.396 |
| | 건강 | 0.218 | 0.417 | 0.332 |
| | 고용 | 0.119 | 0.128 | 0.787 |
| | 사회문화적 자본 | 0.359 | 0.568 | 0.429 |
| | 안정성 | 0.066 | 0.309 | 1.000 |
| 집단 확률 (×100=%) | | 0.691 | 0.200 | 0.109 |
| 집단 분포 (%) | | 64.4 | 25.6 | 10.0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0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다음 그림은 2008년 기준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별 개별 차원이 빈곤할 확률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음. 막대그래프의 높이가 높을수록 빈곤할 확률이 높음.
 - 저빈곤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개별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경제력빈곤 집단은 경제력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우세하고, 고용·안정성빈곤 집단은 고용 차원과 안정성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우세함.

[요약그림 14] 200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의 차원 빈곤 확률

(단위: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0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2008년 빈곤 집단별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 **경제력 빈곤**은 여성, 19-24세, 수도권·도시·농어촌 거주, 고졸 이하, 전세 및 월세 거주, 비경제활동인구, 1인 가구 및 가구주·배우자, 저소득층임.
- **고용안정성 빈곤**은 여성, 19-24세, 수도권 거주, 고졸 이하, 월세 거주,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저소득층임.

<요약표 7> 200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저빈곤 | 경제력빈곤 | 고용안정성빈곤 | 전체 |
|------|-----------------|-------------|-------------|-------------|-------|
| 전체 | | 64.4 | 25.6 | 10.0 | 100.0 |
| 성별 | 남성 | 66.9 | 24.4 | 8.7 | 100.0 |
| | 여성 | 62.2 | 26.6 | 11.2 | 100.0 |
| 연령대 | 19-24세 | 59.7 | 25.7 | 14.7 | 100.0 |
| | 25-29세 | 65.9 | 25.5 | 8.6 | 100.0 |
| | 30-34세 | 67.2 | 25.6 | 7.2 | 100.0 |
| 지역 | 서울 | 70.7 | 19.2 | 10.1 | 100.0 |
| | 수도권 | 62.4 | 26.6 | 11.0 | 100.0 |
| | 도시 | 62.7 | 27.4 | 9.9 | 100.0 |
| | 농어촌 | 60.2 | 33.7 | 6.1 | 100.0 |
| 교육수준 | 고졸이하(실업계, 특성화고) | 57.3 | 30.0 | 12.8 | 100.0 |
| | 고졸이하(일반계 등 기타) | 51.2 | 34.6 | 14.3 | 100.0 |
| | 대졸이상 | 74.6 | 19.1 | 6.4 | 100.0 |

24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 구분 | | 저빈곤 | 경제력빈곤 | 고용안정성빈곤 | 전체 |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80.4 | 11.0 | 8.6 | 100.0 |
| | 전세 | 62.6 | 29.2 | 8.3 | 100.0 |
| | 월세 | 26.9 | 53.9 | 19.2 | 100.0 |
| | 기타 | 39.2 | 55.3 | 5.5 | 100.0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임금근로자 | 76.1 | 23.7 | 0.2 | 100.0 |
|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 36.9 | 17.2 | 45.9 | 100.0 |
| | 특수고용직 | 26.7 | 19.0 | 54.3 | 100.0 |
| | 비임금근로자 | 79.4 | 20.6 | 0.0 | 100.0 |
| | 비경제활동인구 | 66.0 | 34.0 | 0.0 | 100.0 |
| | 실업자 | 67.3 | 16.8 | 15.9 | 100.0 |
| 가구 내 지위 | 1인가구 | 49.2 | 38.8 | 12.0 | 100.0 |
| | 가구주/배우자 | 63.4 | 30.0 | 6.6 | 100.0 |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67.5 | 20.6 | 11.9 | 100.0 |
| | 기타 | 53.0 | 35.3 | 11.7 | 100.0 |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11.9 | 69.7 | 18.4 | 100.0 |
| | 중위소득 50~150% | 59.3 | 29.8 | 10.9 | 100.0 |
| | 중위소득 150% 이상 | 91.0 | 3.4 | 5.6 | 100.0 |

주: 200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볼드체는 전체보다 높은 경우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2018년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유형을 잠재집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집단은 6개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으므로 **저빈곤 집단**으로 분류하였음.

-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52.5%인데, 2018년 전체 청년 중 62.3%가 이 유형으로 분류됨.

○ 두 번째 집단은 건강이 빈곤할 확률이 64.5%로 상대적으로 높아 **건강빈곤**으로 분류하였음.

-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25.2%인데, 2018년 현재 전체 청년 중 17.8%가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 마지막 집단은 고용이 빈곤할 확률이 71.5%, 안정성이 빈곤할 확률이 69.0%, 경제력이 빈곤할 확률이 57.0로 높아 **복합빈곤**으로 분류하였음.

- 이 집단의 경우 사회문화적 자본이 빈곤할 확률이 39.2%, 주거가 빈곤할 확률 또한 33.3%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건강 차원을 제외한 모든 차원이 빈곤할 가능성이 높음.

-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22.4%인데, 2018년 현재 전체 청년의

19.9%가 이 유형으로 분류됨.

〈요약표 5〉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 현황

(단위: %)

| 구분 | | 저빈곤 | 건강빈곤 | 복합빈곤 |
|-------------------|----------|--------------|--------------|--------------|
| 영역 확률 (×100=%) | 경제력 | 0.249 | 0.369 | 0.570 |
| | 주거 | 0.249 | 0.215 | 0.333 |
| | 건강 | 0.005 | 0.645 | 0.211 |
| | 고용 | 0.087 | 0.169 | 0.715 |
| | 사회문화적 자본 | 0.250 | 0.318 | 0.392 |
| | 안정성 | 0.000 | 0.000 | 0.690 |
| 집단 확률 (×100=%) | | 0.525 | 0.252 | 0.224 |
| 집단 분포 (%) | | 62.3 | 17.8 | 19.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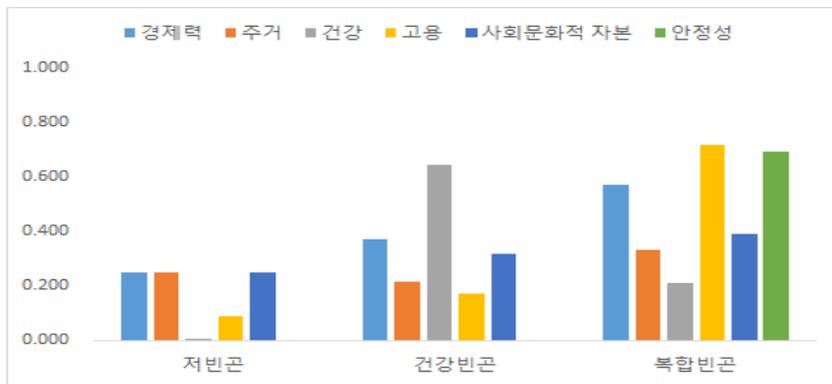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다음 그림은 2018년 기준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별 개별 차원이 빈곤할 확률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음.

- 저빈곤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개별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건강빈곤 집단은 건강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우세하고, 복합빈곤 집단은 고용 차원과 안정성 차원, 경제력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모두 우세함.

[요약그림 15]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의 차원 빈곤 확률

(단위: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2018년 빈곤 집단별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 **건강 빈곤**은 여성, 30-34세, 도시 거주, 대출 이상, 자가 거주, 비경제활동 인구나 실업자, 1인 가구 및 가구주·배우자, 저소득층임.
- **복합 빈곤**은 남성, 19-24세 및 25-29세, 수도권농어촌 거주, 고졸 이하, 월세 거주,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실업자, 1인 가구 및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그리고 저소득층임.

〈요약표 6〉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저빈곤 | 건강빈곤 | 복합빈곤 | 전체 |
|---------|-----------------|-------------|-------------|-------------|-------|
| 전체 | | 62.3 | 17.8 | 19.9 | 100.0 |
| 성별 | 남성 | 63.3 | 15.4 | 21.4 | 100.0 |
| | 여성 | 61.2 | 20.6 | 18.2 | 100.0 |
| 연령대 | 19-24세 | 62.5 | 15.4 | 22.1 | 100.0 |
| | 25-29세 | 62.2 | 16.9 | 20.9 | 100.0 |
| | 30-34세 | 62.1 | 21.4 | 16.5 | 100.0 |
| 지역 | 서울 | 59.6 | 16.8 | 23.6 | 100.0 |
| | 수도권 | 64.3 | 17.2 | 18.5 | 100.0 |
| | 도시 | 62.3 | 19.8 | 17.9 | 100.0 |
| | 농어촌 | 61.8 | 13.1 | 25.2 | 100.0 |
| 교육수준 | 고졸이하(실업계, 특성화고) | 60.4 | 11.6 | 28.0 | 100.0 |
| | 고졸이하(일반계 등 기타) | 47.3 | 19.6 | 33.1 | 100.0 |
| | 대출이상 | 65.7 | 20.1 | 14.1 | 100.0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68.0 | 19.2 | 12.8 | 100.0 |
| | 전세 | 64.8 | 16.3 | 18.9 | 100.0 |
| | 월세 | 48.3 | 16.4 | 35.3 | 100.0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임금근로자 | 77.2 | 17.8 | 5.0 | 100.0 |
|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 25.6 | 9.9 | 64.5 | 100.0 |
| | 특수고용직 | 4.6 | 10.0 | 85.3 | 100.0 |
| | 비임금근로자 | 80.6 | 14.2 | 5.2 | 100.0 |
| | 비경제활동인구 | 73.4 | 21.2 | 5.4 | 100.0 |
| | 실업자 | 16.3 | 46.6 | 37.2 | 100.0 |
| 가구 내 지위 | 1인가구 | 51.8 | 18.5 | 29.7 | 100.0 |
| | 가구주/배우자 | 68.4 | 18.5 | 13.1 | 100.0 |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61.3 | 17.3 | 21.5 | 100.0 |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32.9 | 28.2 | 39.0 | 100.0 |
| | 중위소득 50~150% | 57.4 | 19.8 | 22.8 | 100.0 |
| | 중위소득 150% 이상 | 84.7 | 9.2 | 6.2 | 100.0 |

주: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볼드체는 전체보다 높은 경우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 2008년 대비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의 변화를 종합하면, 첫째, **빈곤의 양상이 변화함.**
- 경제력 혹은 고용 중심의 빈곤에서 건강이 빈곤하거나 복합적으로 빈곤한 집단으로 빈곤 유형이 달라짐.
 - 따라서 2008년에는 정책 대상 청년에게 특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던 반면, 2018년에는 **복합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통한 접근이 필요함.
 - 둘째, 저빈곤 집단을 제외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을 구성하는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변화함.**
 - 2008년 경제력 빈곤 집단과 고용-안정성 빈곤 집단을 구성하는 청년의 특성이 종사상 지위(와 가구 내 지위)를 제외하고 유사하였으므로, 청년 정책 대상 집단을 표적화하는 데에 있어 종사상 지위를 주로 고려할 수 있었음.
 - 2018년에는 건강 빈곤 집단과 복합 빈곤 집단을 구성하는 청년의 특성이 상이하여 **정책 대상 집단을 차별하여 표적화할 필요**가 있음.

키워드 : 청년, 취약계층, 다차원 빈곤, 한국복지패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은 역사상 어느 시기의 청년들보다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고학력으로 인해 어느 세대보다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일자리 감소, 기술변화에 따른 좋은 일자리의 양극화 등에 따라 평균적인 인적자본을 가진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전반적인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 상 열위에 있는 계층의 경우 성공의 기회가 제약되는 기회의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으며, 부모의 배경과 같은 귀속요인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경로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근로소득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기회를 잡기 어려운 현실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의 급속한 상승은 자산형성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도모할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다.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는 세대 간 불평등 문제로도 기화하고 있다. 전술한 내용들은 우리사회가 최근 경험하고 있고, 해결의 기미가 불투명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심화, 사회이동성¹¹⁵

저하 등의 문제를 설명해준다. 오늘날 청년들은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첨단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진입 혹은 성인으로의 이행의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청년의 성인으로의 이행의 과업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세계적 경제위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커다란 경제충격은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혹독한 충격을 주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전의 경제충격과 달리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이 감염병 확산방

지 정책수단과 상충되면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더욱 장기적인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좁았던 취업문이 더 좁아졌고, 이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충격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단절, 경기 악화에 따른 실직 등의 충격이 사회적 관계망과 고용에서 취약한 청년들에게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2030 여성 자살률 급등으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정책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술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전통적인 대상정책에 청년정책이 추가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청년기본법이 명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는 과정에 돌입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청년정책의 핵심적인 내용과 추진체계의 뼈대를 갖추게 되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정책추진단의 연구용역(김기현 외, 2020)을 통해 기본적인 틀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정부 부처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이 중심이 된 테스크 포스팀(TFT)에서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형성 과정에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가지의 목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다차원 빈곤 접근을 통해서 취약청년은 빈곤청년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애 중요한 조건들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혹은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청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청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취약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참고로 활용될 수 있다. 각 영역별, 지표별 취약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취약청년 정책대상을 가려내는데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목적은 다양한 청년정책의 선정기준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청년정책은 정책의 목적과 기저의 철학에 따라 보편성을 증시할 수도, 선별성을 증

시할 수도 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정책은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대상정책의 성격보다는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자격을 중심으로 선별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은 결국 소득분위나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라고 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수급을 받는 청년들 다수가 소득기준 적용에 따른 스티그마(stigma)를 느끼고 있고, 이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차원적 빈곤 접근은 정책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다차원 빈곤 접근에서 활용하고 있는 19가지 세부 지표를 세부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취약청년들을 정의하고 발굴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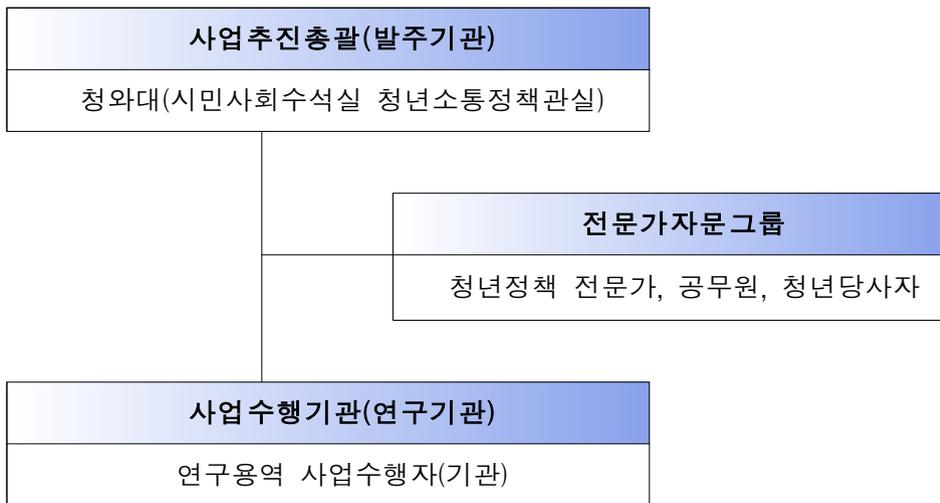
1. 연구 내용

이상과 같은 배경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 청년정책 현황을 다룬다. 여기서는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해본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별도로 살펴본다.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다차원 빈곤 접근에 따른 청년들의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다차원 빈곤 접근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다차원 빈곤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분류에 따른 청년층의 다차원 빈곤 현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다차원 빈곤 접근을 통한 취약청년 발굴을 시도한다. 먼저, 각 세부 지표별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빈곤 차원의 중첩성을 중심으로 다차원 빈곤의 심도를 파악하고, 이를 인구사회학적 집단으로 분류해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취약 청년집단을 탐색한다. 그리고 잠재집단 분석을 활용해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취약 청년집단을 가려본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우선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적용과 활용을 위한 문헌 연구를 실시한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취합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을 검토한다. 외부 전문가, 공무원, 청년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운영하면서 연구과정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다. 사업추진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1] 연구 사업추진체계



그리고 이 연구에서 핵심적이고 지배적인 연구방법은 세대와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 양적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다. 분석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산하는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원자료를 활용한다.



제2장

청년정책 현황

제1절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취약계층 대상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 2 장 청년정책 현황

제1절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8월부터 시행되면서 국가 단위의 청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년기본법 주관부처인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에서는 2019년부터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해 청년기본법 이후 구체화될 청년정책 추진을 준비해 왔다. 이러한 준비 작업 중 한 가지로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들로부터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 명단을 요청하고 수합·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취합 작업의 결과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발표한 두 차례에 걸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 담겨져 있다(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2020a, 2020b).

1차로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르면, 청년정책 사업 수는 2020년 기준으로 182개이며 전체 예산은 22조 3천억 원이었다(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2020a: 1). 9월 18일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어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서는 전체 사업 수나 예산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2020b). 다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으로부터 내부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권향원, 김창환, 박미선, 성재민, 이철선, 최한수(2020)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최종 취합된 전체 중앙행정기관 청년과제 수는 179개이며 전체 예산은 16조 8천억 원이었다. 과제 수나 예산이 1차 발표보다 감소한 것은 부처 제출 과제 중 청년 과제로 보기 어렵거나 예산 중 청년 예산 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결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취합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중앙부처 청년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청년정책 현황을 다루기 전에 여기에서 다루는 청년정책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어느 범위까지 청년정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청년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법률에서 어떻게 청년정책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기본법

에서는 제3조에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청년정책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이다. 이와 관련 청년기본법의 정의를 살펴 보면, 청년은 연령으로 정의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령 정의는 청년기본법 수립과정에서 가장 큰 논쟁 사항이었는데 단서조항을 추가하면서 법 개정이 가능했다. 곧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5년간에 어떤 식으로든 연령 기준에 대한 정비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2-1〉 청년기본법에 제시된 청년정책 관련 정의

| 개념 | 조항 | 정의 |
|------|--------|--|
| 청년 | 제3조의 1 |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 청년발전 | 제3조의 2 |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 청년지원 | 제3조의 3 |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 청년정책 | 제3조의 4 |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0년 10월 5일에 접속

청년정책에 대한 정의는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청년발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를 별도로 정의하면서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이 정의를 통해 청년정책의 범위, 목적, 수단 등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변금선, 김기현, 하형석, 이용혜 (2019, p. 22)는 이를 구분해 청년정책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표 2-2〉 청년정책의 범위, 목적, 수단, 추진주체에 따른 정의

| 개념 | 정의 |
|------|-----------------------------------|
| 범위 |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영역에서 |
| 목적 | 모든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 수단 |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
| 추진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다. |

자료: 변금선 외(2019), p.22

변금선 외(2019)의 정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청년 발전’이 담고 있는 내용 중 청년 당사자를 지원하고 것과 더불어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정책 사업을 받을 때 청년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업들의 상당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사업 중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었고 교육부에서 제출한 사업 중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이 거의 빠져 있었다. 청년정책의 수단과 더불어 목적 역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각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사업 중 청년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제출한 SW중심대학 사업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기보다 해당 분야의 산업정책이나 대학 지원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의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정책 영역에 대한 분류이다. 청년기본법에서 법률 조항으로 제시한 정책 영역은 총 7가지이며 청년정책의 이념이면서 동시에 정책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권리(제5조)와 참여(제15조)를 규정하고 있다. 앞선 청년정책에 대한 정의에서 권리와 참여는 청년을 둘러싼 환경 개선이라는 맥락과 연결되는 것으로 청년정책 추진 시에 놓쳐서는 안되는 가장 주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영역은 일자리(제17조 취업, 제18조 창업), 교육(제19조), 주거(제20조), 복지(제21조), 금융(제22조), 문화(제23조), 국제협력(제24조) 등이다.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국회 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영역들은 대체로 큰 이견 없이 법률에 반영되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9가지에 이르는 정책 영역을 간소화하기 위해 정책영역을 ① 일자리 분야, ② 교육 분야, ③ 주거 분야, ④ 생활 분야, ⑤ 참여·권리 분야

등 5가지로 구분하여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적용되어 시행령 제16조에 전문위원회 구성 시 분야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정책영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은 가능해 보인다.

〈표 2-3〉 청년기본법에 제시된 청년정책의 영역

| 정책 영역 | 조항 | 내용 |
|-------|------|--|
| 권리 | 제5조 | (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참여 | 제15조 |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일자리 | 제17조 |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제18조 | (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교육 | 제19조 | (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주거 | 제20조 | (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복지 | 제21조 | (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금융 | 제22조 | (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문화 | 제23조 | (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국제협력 | 제24조 | (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0년 10월 5일에 접속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의 5가지 정책 영역 구분은 법률에서 제시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정책영역은 복지(제21조), 금융(제22조), 문화(제23조), 국제협력(제24조) 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영역이 아닌 모든 정책 영역에 적용 가능한 ‘생활’, ‘참여’, ‘권리’ 등을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제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등 다른 대상 중심 정책에서 참여나 권리는 모든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상 중심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제6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2018-2020)을 살펴보면, 청년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목표에서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등과 함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13).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도 추진전략의 정책영역 중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외에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p.14).

반면, 복지나 금융, 문화, 국제협력 등은 생활이라는 정책 영역에서 통합해서 다루기에 매우 이질적인 정책 영역이다. 5가지의 정책 영역으로 반드시 나눌 필요가 없다면 복지, 금융과 문화, 국제협력을 구분하고 포괄성을 갖는 용어로 사용하는 ‘복지’나 ‘활동’ 등으로 간명하게 제시하거나 내부 이질성이 덜해도 반드시 명시가 필요한 영역을 복수로 명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지분야를 ‘복지·빈곤·금융·건강’ 등으로, 활동분야를 ‘활동·문화·협력’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정책영역과 관련된 또 다른 검토는 국제적인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2018년에 청년장기전략 2030(Youth2030: The United Nations Youth Strategy)을 발표하였다(United Nations, 2018).

이 전략에서는 정책 우선순위 차원에서 정책영역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우선순위 전략은 청년에 대한 참여와 옹호(Engagement, Participation and Advocacy)이다. 통상 청년 참여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정책 영역을 가장 먼저 내걸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청년지원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넘어서는 전체 사회정책 이슈인 평화와 지속가능사회(a peaceful, just and sustainable world) 향상에 대한 청년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 우선순위 전략은 관잖은 교육과 건강 서비스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기초를

갖추도록 하는 것(Informed and Healthy Foundations)이다. 이는 일종의 교육영역과 건강영역을 통합해서 제시한 것으로 지덕체와 같은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우선순위 전략은 괜찮은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힘을 부여하는 것(Economic Empowerment through Decent Work)이다. 이는 일자리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을 일자리 접근성과 괜찮은 일자리로 잡고 있어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 방향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고용률과 실업률 제고를 위해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우선순위 전략은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한편, 그들의 시민적, 정치적 참여를 지원하는 것(Youth and Human Rights)이다. 이는 청년 권리 정책에 해당하는데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쟁취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리 보호 대상으로 접근하는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선순위 전략은 평화와 회복 가능한 사회 건설(Peace and Resilience Building)이다. 미래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정책 방향을 청년정책 추진 전략에 포함한 것은 이전의 전략과 차별화된 영역으로 과거 청년 혹은 청소년 사업(youth work)을 국가나 사회가 유용한 지식이나 건전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접근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곧, 젊은이들이 사회 변화의 핵심 아젠다를 주도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같은 해에서 청년 장기전략(Youth Strategy 2019-2027)을 발표하였다(European Union, 2018). 국제연합의 5가지 우선순위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 가지 핵심정책 방향으로 사회참여(engage), 대상 간, 지역 간 연결(connect), 청년들의 권한강화(empower)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취지는 국제연합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우선순위 전략과 거의 일치한다. 이 전략에서는 정책영역과 관련하여 11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김기현 외, 2020: 180). 11가지 목표는 청년들의 연계와 모든 젠더간의 평등, 사회통합, 정책 정보 제공과 청년들에 의한 정책 추진을 위한 대화, 정신건강과 웰빙, 지역 청년 지원, 질 좋은 일자리 제공, 질 좋은 학습, 모두를 위한 공간과 참여,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청년 조직과 유럽 정책사업 추진 등이다. 유럽연합의 전략에서도 지속가능사회와 관련된 환경이나 사회통합과 같은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표 2-4〉 국제기구 및 주요국 청년정책영역 비교

| 구분 | 국제연합 | 유럽연합 | 독일 | 일본 | 스웨덴 |
|-------------------|------|------|----|----|-----|
| 일자리(취업/창업/환경) | ○ | ○ | ○ | ○ | ○ |
| 복지(취약계층) | ○ | ○ | ○ | ○ | ○ |
| 학습(교육/훈련) | ○ | ○ | ○ | ○ | ○ |
| 건강(정신/신체/웰빙) | ○ | ○ | ○ | ○ | ○ |
| 사회참여(engagement) | ○ | ○ | ○ | | ○ |
| 권한강화(empowerment) | ○ | ○ | ○ | | |
| 환경(지속가능성) | ○ | ○ | ○ | | |
| 연계(세대/젠더/지역/국가) | ○ | ○ | ○ | | |
| 활동(문화/여가/봉사) | ○ | ○ | ○ | ○ | ○ |
| 주거 | | | | | ○ |
| 보호(유해환경 규제) | | | | ○ | |
| 일탈(비행/범죄) | | | | ○ | |

자료: UN(2018), EU(2018).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책 영역을 제시할 때 해당 분야의 정책 방향을 드러내는 형태를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기존의 참여와 권리와 더불어 정책 당사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과 사회통합,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미래사회의 핵심 아젠다의 주역으로 청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영역을 다룰 때 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청년정책 범위와 관련하여 목적과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사업으로 한정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변금선 외(2020, p.42)는 청년정책 사업을 목적과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청년 중심으로 지원대상이나 예산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통해 핵심과제와 부분과제로 구분해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차로 취합한 정부 부처 182개 사업 중 핵심과제는 27개 사업으로 14.8%에 그쳤다. 부분과제 중 그나마 청년정책으로 볼 수 있는 부분1과제는 60개로 핵심과 부분1과제를 합쳐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과제는 사실상 청년정책 사업으로 보기 힘든데 장기적으로 제1차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5년 동안 부분2과제는 부분1과제로, 부분1과제는 핵심과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과제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으로 판단을 통해 일부 과제를 더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44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표 2-5) 청년정책 포괄 범위와 정책과제 구분(안)

| 구분 | 청년정책 사업 ¹⁾ | 청년 중 특정대상 정책 사업 ²⁾ |
|--------|--|-----------------------------------|
| 기준 | ① 청년정책사업 적절성3) ② 지원대상 연령적절성4) ③ 예산투입 연령적절성5) | ① 청년정책사업 적절성3) ② 특정대상 예산 적절성6) |
| 핵심과제 | ①~③ 중 3개 | ①과 ② 500억 이상 |
| 부분과제 1 | ①~③ 중 2개 | ①이거나 ② 20억 이상 |
| 부분과제 2 | ①~③ 중 1개 이하 | ② 20억 미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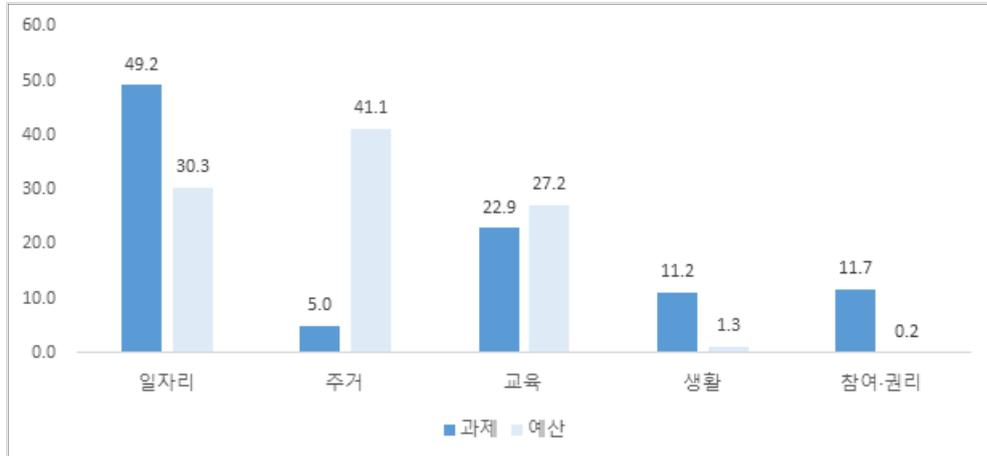
- 주 1) 청년정책 사업은 특정대상을 지정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청년 사업
 2) 청년 중 특정대상 정책 사업은 학생, 취업자, 저소득층 등 청년 중 일부 대상
 3) 청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일 경우 적절(사업 명에 명칭이 있거나 없더라도 사업내용이 청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4) 정책사업의 지원 대상인 19세-34세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적절로 분류함. 최소기준으로 50%를 적용한 결과는 부록에 수록함.
 5) 정책사업의 지원 예산의 투입이 19세-34세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적절로 분류함. 최소기준으로 50%를 적용한 결과는 부록에 수록함. ※ 비예산 사업은 예산투입 연령적절성 여부를 따지지 않음.
 6) 예산 적절성의 기준은 5분위 중 상위 1분위의 기준 값(456억 원)과 중위 값(17억 원)을 근거로 500억 이상과 20억 이상을 기준으로 삼음. 최소기준(핵심 20억 원 이상, 부분1은 1억 원 이상)으로 핵심여부를 중위 값으로 적용한 결과는 부록에 수록함. ※ 비예산 사업은 특정대상 예산 적절성 여부를 따지지 않음.

자료: 변급선 외(2019), p. 42

2차 취합 자료를 토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30개 부처 및 처, 청에서 총 17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국무조정실 청년 정책추진단, 2020b). 전체 사업 예산은 16조 8천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서 2조 9백억 원이 증가하였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의 정책영역 구분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과제는 일자리 분야가 88개로 전체 과제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교육 분야가 41개, 참여·권리 분야가 21개, 생활 분야가 20개, 주거 분야가 9개 순이었다. 청년정책 예산은 주거 분야가 6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자리 분야가 5조 1천억 원, 교육 분야가 4조 5천억 원, 생활 분야가 2조 1천억 원, 마지막으로 참여 및 권리 분야가 2천 7백억 원이었다.

[그림 2-1] 중앙부처 청년정책 영역별 과제 수 및 예산 비중(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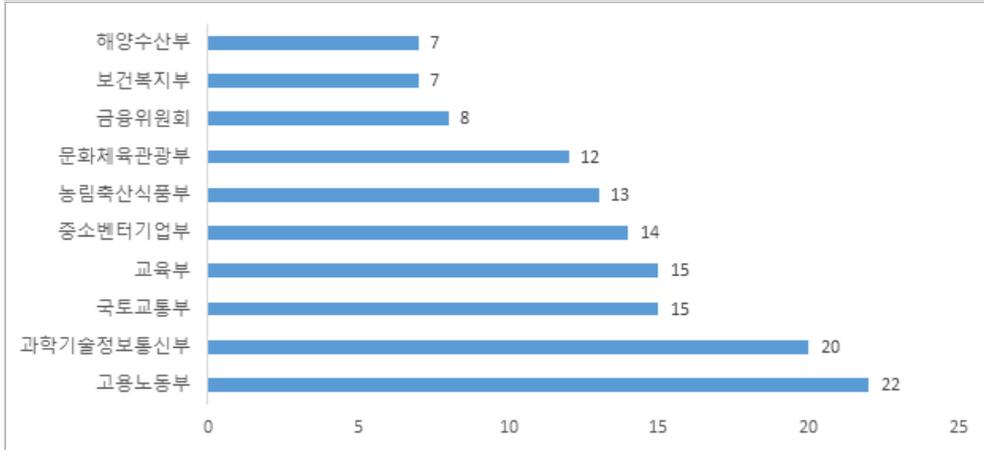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 내부자료(2020).

청년정책 영역별 과제와 예산만으로도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중심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복지 관련 생활 분야의 과제 수와 예산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이다. 참여와 권리 분야는 예산 투입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어 예산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으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어야 할 과제 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복지 분야 예산 확대와 참여 및 권리 분야 과제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각 부처별로 과제 수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2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개로 뒤를 이었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15개로 3번째로 과제 수가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분야 과제가 대부분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교육 분야, 국토교통부는 주거 분야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어서 주로 청년 창업 관련 과제들로 이루어진 중소벤처기업부가 14개, 문화, 예술 관련 과제들로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가 12개, 청년 부채 및 신용 관련 과제들로 이루어진 금융위원회가 뒤를 이었다. 복지 분야를 다루는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 관련 일자리 분야 과제들로 이루어진 해양수산부가 7개였다.

46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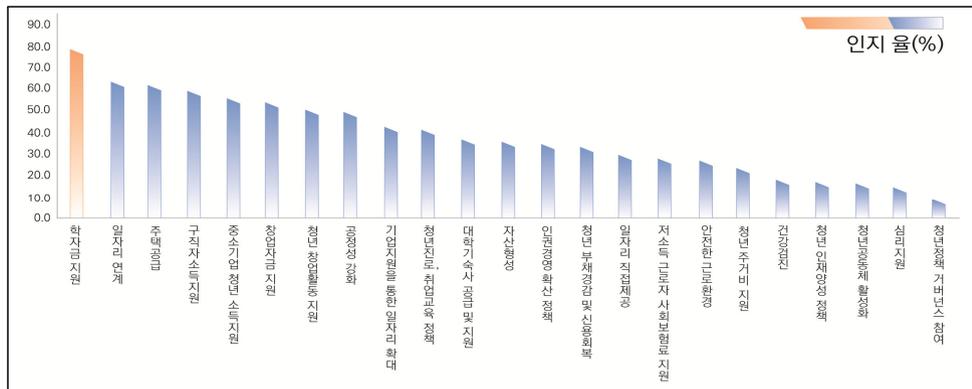
[그림 2-2] 청년정책 과제 수 상위 10개 중앙부처(2020년)



자료: 국무조정실 내부자료(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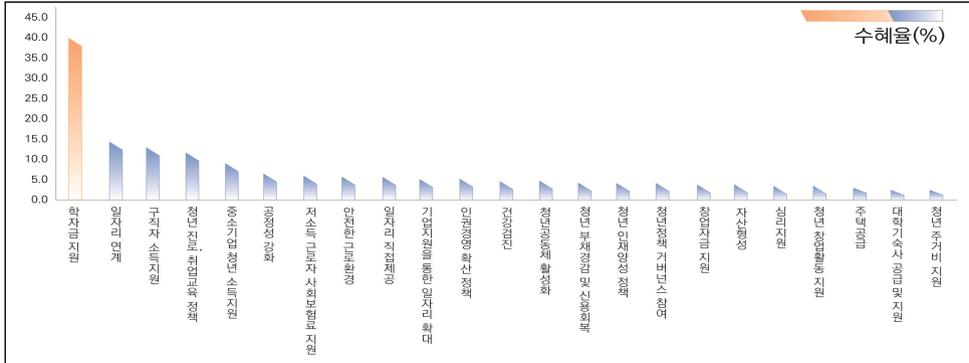
청년정책은 대상 중심 정책으로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이와 관련 용역과제의 일환으로 청년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변금선, 외, 2019). 이 조사는 2019년 12월에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2,3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그림 2-3] 청년정책에 대한 분야별 청년들의 인지도 분포(2019년)



자료: 변금선 외(2019), p.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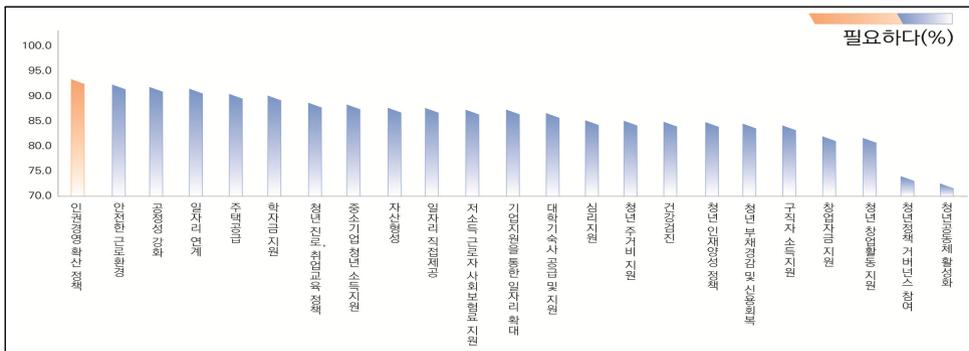
[그림 2-4] 청년정책에 대한 분야별 청년들의 수혜율 분포(2019년)



자료: 변금선 외(2019), p. 126.

이 조사는 세부 정책과제별로 청년들의 인지도, 수혜율, 도움 정도와 해당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먼저 청년정책 인지율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지원이 78.4%로 인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연계 과제가 63.4%로 뒤를 이었다. 세 번째로 인지율이 높은 과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으로 61.5%,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소득지원이 58.9%였다. 정책 인지율이 가장 낮은 과제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과제로 9.2%에 불과했고 청년 심리지면 지원도 14.8%로 낮았다. 결과적으로 참여나 생활 분야 정책과제들의 인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생활이나 참여, 권리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 2-5] 청년정책에 대한 분야별 청년들의 필요하다는 응답 분포(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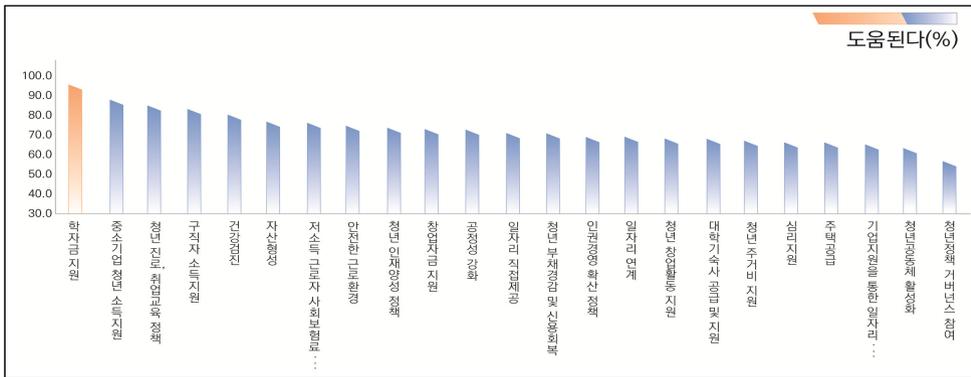


자료: 변금선 외(2019), p. 126.

청년정책 수혜율을 보면, 학자금대출이나 장학금과 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제외하고 1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학자금 지원은 41.8%였고 일자리 연계는 14.8%, 구직자 소득지원은 13.4%, 청년 진로 및 취업교육 정책은 12.2%, 중소기업 청년 소득지원은 8.94%였다. 대체로 청년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의 수혜율 비율이 높았는데 이와 유사한 청년 주거비 지원은 직접 지원임에도 수혜율은 2.3%에 불과했다. 주거비 지원의 경우 낮은 수혜율은 개인당 지급되는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크지만 신용보증 문제와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책 참여자에게 도움 정도를 물어본 결과, 학자금 지원이 95.5%로 가장 높은 긍정 응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지원과 같이 직접 지원 형태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향후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직접 지원으로 자산형성을 돕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지원 과제도 87.2%로 두 번째로 높은 도움 정도를 보여주었다.

[그림 2-6] 청년정책에 대한 분야별 청년 수혜자들의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분포(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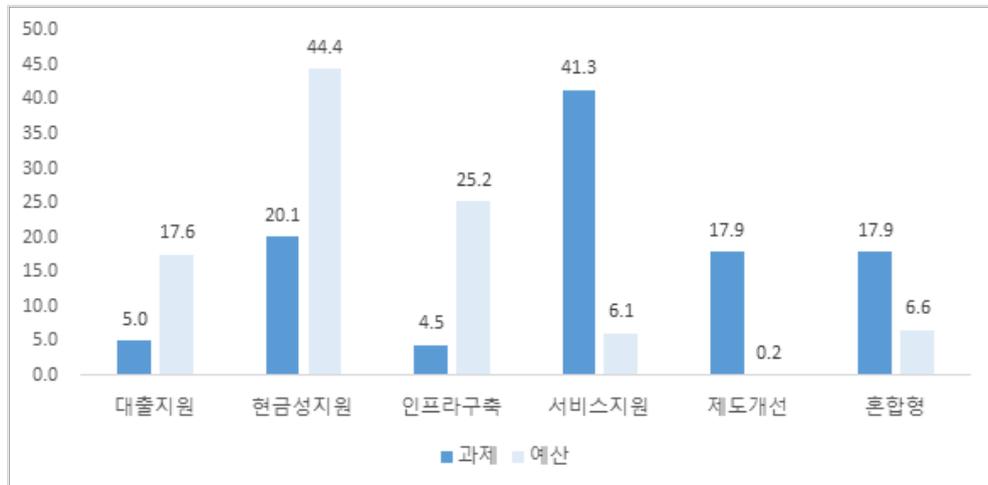
자료: 변금선 외(2019), p. 126.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청년들은 직장 내 갑질 규제 등 인권경영 확산 정책에 대해 92.6%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안전한 근로환경과 공정성 강화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청년 지원이상으로 청년을 둘러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청년정책을 정책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제 수는 서비스 지원이 41.3%(74개)로 가장

많았고 예산 비중은 현금성 지원이 44.4%(7조 4천억 원)로 가장 높았다. 현금성 지원은 개인별 예산 집행에 따라 예산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보여주었다. 간접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는 4.5%(8개)로 적었지만 이 역시 단위 비용이 큰 탓에 예산 비중은 25.2%(4조 2천억 원)로 높게 나타났다. 비예산 사업으로 법 개정이나 제도 운영 개선 등으로 이루어진 제도 개선 과제는 17.9%(20개)의 비중을 보여주었으나 예산 비중은 0.2%(2백 5천억 원)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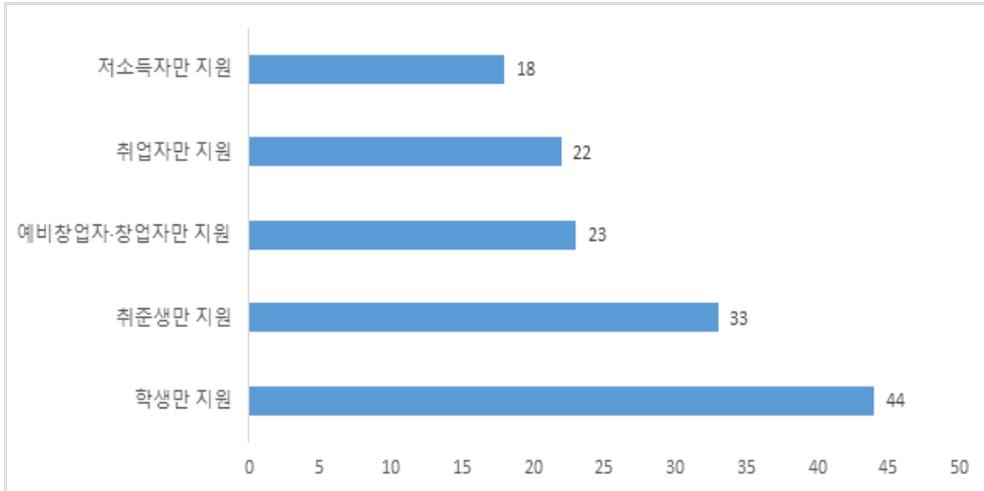
[그림 2-7] 청년정책 정책유형별 과제 수 및 예산 비중(2020년)



자료: 국무조정실 내부자료(2020).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별로 청년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청년만을 지원하는 사업은 18개로 10.1%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당 과제의 전체 예산은 10조 9백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65.1%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컸다. 이는 대체로 직접 지원 사업이 소득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당 지급 금액이 합산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8] 중앙부처 청년정책 지원 대상별 과제수(2020년)



자료: 국무조정실 내부자료(2020).

미취업 상태의 취업준비생도 일정의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데 취준생 등 미취업자만을 지원하는 과제는 33개로 18.4%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런데 미취업자만 지원하는 정책과제는 9백 2십억 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상별 지원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학생으로 전체 과제 중 23.6%였다. 전체에서 학생만을 지원하는 과제의 예산 비중은 29.1%였다. 이제 다음절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취약계층 대상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취약계층 대상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청년기본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는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

다. 다만 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정의로 포괄적이지는 않다. 취업으로 청년은 고졸 이하 실업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장기(6개월 이상) 실업자, 학교 밖 청소년 등이다. 이 정의는 취약계층을 규정할 때 참조사항 이상의 도움을 주기 어려워 보인다.

〈표 2-6〉 청년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제시된 취약계층 관련 조항

| 법률 | 조항 | 정의 |
|------------------|-------------|--|
| 청년기본법 | 제8조의 ③ |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제8조의 4 ④ |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 제7조 |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으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으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을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0년 10월 5일에 접속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는 청년기본법안에서 일부 다루어졌다. 최종적으로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했으나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는 일자리분야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저소득·저학력자, 소외·부적응자, 다문화 가정 출신자, 장애를 가진 자, 재소자, 장기 미취업자, 1년 미만의 취업경력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취약계층 청년은 소외·부적응자와 다문화 가정 출신자, 장애를 가진 자와 재소자 등이다.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 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앞선 강창일 의원대표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약물중독자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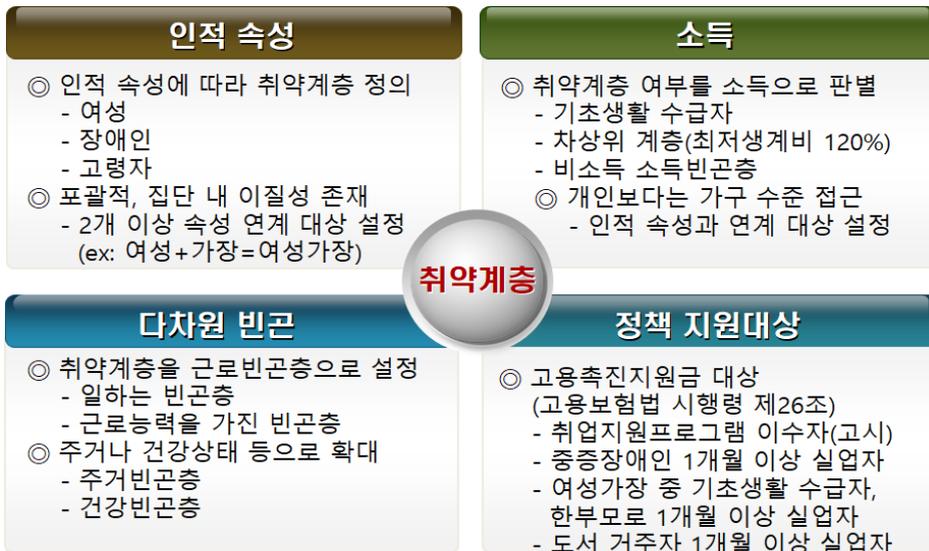
(표 2-7) 20대 국회 청년기본법안 취약계층 관련 조항

| 의안명 | 조항 | 정의 |
|------------------------------|---------|--|
|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감정일의원 등 12인) | 제15조의 ③ | 저소득·저학력자, 소외·부적응자, 다문화 가정 출신자, 장애를 가진 자, 재소자, 장기 미취업자, 1년 미만의 취업경력자 등 취약·소외계층에 있는 청년(이하 “취약계층 청년”이라 한다)의 우선적인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청년정책기본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 제17조의 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저학력, 소외·부적응자 및 약물중독자 등 취약·위험계층에 있는 청년(이하 “취약청년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복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20년 10월 6일에 접속

김기현(2016, p.3)은 청년 취업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인적 속성을 고려한 경우와 소득을 고려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인적 속성에 따른 구분은 대상자가 여성인지, 노인인지, 외국인인지, 장애인인지와 같이 개인별 특성을 토대로 취약계층을 구분하는 것이다. 소득이나 빈곤을 고려한 경우는 취약계층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소득을 고려한 경우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비소득 소득빈곤층 등을 취약계층으로 보는 것으로 주로 개인보다는 가구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림 2-9] 청년 취약계층 정의 유형



자료: 김기현(2016), 3p. 발표 자료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

(표 2-8) 취업성공패키지 취약계층 지원대상자

| 대상 | 정의 |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
| 신용회복지원자 |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 위기청소년 |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
| 니트(NEET) 족 |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으로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1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
| 여성가장 |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화물자동차 운전자(화물차주 포함)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3) 학습지교사 (4) 골프장 경기보조원 (5) 보험설계사 (6) 택배·퀵서비스 기사 (7) 신용카드모집인 (8) 대리운전원 (9) 대출모집인 (10) 방문판매원(다단계 판매원제외) (1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 방문교사 (13) 가전제품 설치기사 |
| 건설일용직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신청일 이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
| FTA 피해 실직자 |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무역조정지원법」제6조, 제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근로자 |
| 맞춤 특기병 |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8~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
| 미혼모·한부모 |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부)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

자료: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2/scope.do>). 2020년 10월 5일에 접속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 외에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한 경우를 의미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나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빈곤층(house poor) 등 다차원적 빈곤층까지 취약계층을 확대해 정의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실제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실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대상 선별을 수행할 때 취약계층 지원대상자를 정의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에서 추가되는 대상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니트(NEET) 족, 여성가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맞춤 특기병, 미혼모·한부모 청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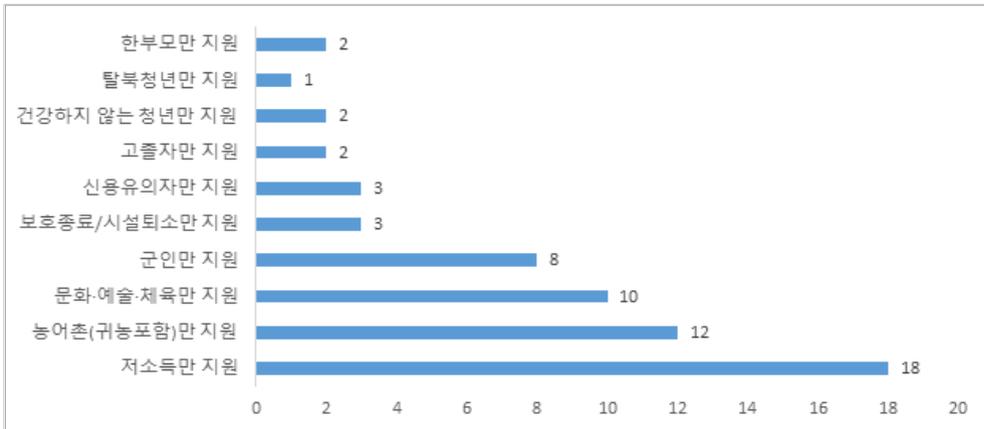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볼 때 인적 속성에 따른 취약계층은 장애 청년, 다문화 및 이주배경 청년, 탈북 청년, 시설이나 기관 보호 후 퇴소 청년(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설 퇴소 청년),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 미취업 혹은 취업준비생, 실업 청년, 청년 니트(NEET) 등이 포함된다. 빈곤 차원에서 취약계층은 기초생활 수급 청년, 차상위 계층 청년, 비소득 청년, 주거 빈곤 청년, 건강 빈곤 청년, 사회 부적응 혹은 사회적 고립 청년 등이 포함된다. 다차원 빈곤 차원은 다양한 빈곤 영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인적 속성에 따른 취약계층이 포함될 수 있다. 낮은 교육수준도 일정의 빈곤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본다면 다차원 빈곤 청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적 속성이나 다차원 빈곤에 따른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 중 저소득 청년만을 지원하는 정책과제는 총 18개로 취약계층 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일자리 분야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교육 분야의 장학금 지원, 주거 분야의 전, 월세 지원 등이다.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과제는 과제 수가 많지 않지만 청년정책의 대표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제외하거나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인적 속성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은 농촌, 어촌의 청년과 귀농을 포함한 예비 농부나 어부 등을 지원하는 과제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 예술인이나 예비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과제가 10개, 의무 복무 중인 장병이나 직업군인을 돕거나 제대나 퇴역 후를 지원하는 과제가 8개로 많았다. 주로 해당 부처나 청, 처가 있는 정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정책대상인 장

애인, 건강하지 않은 청년, 저학력자, 다문화 및 탈북청년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많지 않았다. 특히 외국에서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년 니트(NEET)나 사회적 고립 청년을 돕는 과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10] 중앙부처 청년정책 취약계층별 과제수(2020년)



자료: 국무조정실 내부자료(2020).

정책과제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취약계층 사업을 살펴보면,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가 있고 교육부의 국장학금 I유형과 국가근로장학금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가장 많은데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중기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전, 월세 주거비 대출 지원사업 대부분이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에 소득 기준을 적용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청년자산형성 사업과 빈곤 청년 근로인센티브 등에,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에 소득 기준을 적용 중이다. 소득 기준은 부처마다, 부처 내에서 상이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 중인데 이는 청년정책이라는 틀로 접근하지 않고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표 2-9) 중앙부처 저소득 청년 지원 사업 소득 기준 및 지원금액(2020년)

| 부처 | 사업 | 대상 | 소득 기준 | 금액 | 비고 |
|---------|--------------------------|---|----------------------|--------------------------|----------------------|
| 고용노동부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 18-2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중위소득 120% 이하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용자) | 비정규직 노동자, 전직실업자 | 중위소득 100% 이하 | - | 최대 1,000만원 |
| 교육부 | 국가장학금 I유형 | 저소득 대학생 | 소득 8구간 이하 | 67.5-520 만원 | 학기당, 구간별 차등 |
| | 국가근로장학금 | 저소득 대학생 | 소득 8구간 이하 | 시급 9,000원-1 1,150원 |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
| 국토교통부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19-24세 무주택자 | 연 5천만원 이하 | - | 최대 3,500만원 |
| | 중기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 19-34세 중소기업 재직자 | 연 5천만원 이하 | - | 최대 1억원 |
| |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19-34세 무주택자 | 연 2천만원 이하 | -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19-34세 무주택자 | 연 3천만원 이하 | - | 총 5,000만원 |
|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 19-34세 청년 | - | 월 1-2만원 | 저소득 청년 추가 혜택 |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창작준비금 | 19-34세 청년 문화예술가 | 중위소득 120% 이하 | 연 300만원 | 격년제 |
| 보건복지부 | 청년희망키움통장 | 15-39세 저소득 취업 청년 | 생계급여 청년 | 월 10만원 | |
| | 청년저축계좌 | 15-39세 저소득 취업 청년 | 중위소득 50% 이하 | 월 30만원 | 3년 간 |
| | 빈곤 청년 근로인센티브 | 19-34세 저소득 취업 청년 | 생계급여 수급자 | - | 30% 소득공제 |
| 금융위원회 | 청년·대학생 햇살론 | 34세 이하 대학생, 미취업 청년 혹은 중소기업 1년 이하 사회초년생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 | 최대 1,200만원 |

자료: 국무조정실(2020) 내부자료.

소득 기준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가구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들은 부모와 독립해 별도로 살아가는 1인이나 단독 가구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 소득 수준과 부모 합산 소득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가구와 개인 기준에 관한 논란도 해소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인적 속성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보면, 대부분은 소액이며 부처마다 대상별 지원액이 다르고 전체 예산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소득 기준 문제와 더불어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청년정책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을 비교적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2-10〉 중앙부처 인적숙성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원 기준 및 대상규모, 지원금액

| 부처 | 사업 | 대상 | 지원 기준 | 금액(만원) | 비고 |
|------|----------------------------------|-------------------------|---------------------------|----------------------------------|--------------------|
| 고용부 |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 일반계고 3학년생 | 취업 희망 대학 비진학 | 월 12만원 | 훈련기간 동안 |
| 교육부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 | 직업계고 3학년생 | 현장실습 참여 | 월 60만원 | 실습기간 동안 |
| | 희망사다리 장학금 II | 고졸 취업자 | 경력 2년 이상 | 학기 1.72백만원 | 대학등록금 지원 |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고졸 취업자 | 중소기업 취업 | 총 400만원 | 취업 시 지원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자 | 상환기준 소득 이하 | 상환 유예 | 연소득 2,174만원 |
| 국방부 |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 | 의무복무 병사/ 장교 및 부사관 | 복무중/ 경력5년 이내 | - | 교육서비스 제공 |
| | 군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 의무복무 병사 | - | - | 교육서비스 제공 |
| | 청년병사 목돈 마련 | 의무복무 병사 | - | - | 우대금리/ 비과세 |
| 농진청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 청년농업인 | 18-39세 | - | 교육서비스, 인프라 제공 |
| 방통위 | 군인 인터넷윤리교육 | 의무복무 병사 | - | - | 교육서비스 제공 |
| 병무청 | 병역진로설계/취업 맞춤 특기병 운영 | 의무복무 병사 | - | - | 상담서비스, 인프라 제공 |
| 보훈처 | 의무복무 제대군인 경상이자 취업지원 | 제대군인 경상이자 |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자 | - | 교육, 정보서 비스 제공 |
| 여가부 | 후기청소년 자립지원 (자립지원관/내일아름학 교) | 청소년쉼터 퇴소자/학교밖 청소년 | 자립여건 마련되지 않은 15-24세 | 월 30만원 | 최대 11개월 |
| | 청소년한부모 양육/자립지원 | 청소년 한부모 | - | 아동양육비 35만원 자립촉진수 당 10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도 지원 |
| 통일부 | 탈북청년 취업지원 | 탈북 청년 | 35세 미만 | - | 교육, 정보서 비스 제공 |
| 해수부 | 청년어촌정착지원 | 청년 어업인 | 40세 미만 | 월 100, 90, 80만원 | 어업시작 3년 간 |
| 문화부 | 청년 마이크 사업 | 청년 문화예술가 | 19-34세 | - | 공연비 70-210만원 |
| | 예술창작 아카데미 | 청년 문화예술가 | 19-34세 | 3,300만원 | 1건 당 조사 및 창작비용 |
| 복지부 |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 정신질환 고위험군 | 15-34세 | - | 상담서비스, 인프라 제공 |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보호종료 아동 | 보호종료 3년 이내 | 월 30만원 | |
|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 보호종료 아동 | 19-34세 | 월15-20만 원 | 임대료 실비 지원 |
| 금융위 | 청년 신용회복 지원 | 신용유이자 | - | - | 채무 조정 |
| 농식품부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청년 농업인 | 18-40세 | 월 100만원 | 대출 3억 원 |

자료: 국무조정실(2020) 내부자료.

지원 금액에 대한 하향 조정보다는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원 대상에 대한 해당 부처나 처, 청이 있는 경우 지원 사업이 많은 데 비해 그렇지 못한 경우 사업이 부재하거나 사업이 있음에도 청년정책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인다.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져 개별 부처의 노력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유사한 지원 대상에 대해 지원의 규모와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제3절 정책적 시사점

국가 차원에서 청년정책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와 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들은 개별 단위에서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 상황에서 볼 때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청년정책은 더욱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법적이거나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제도적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통상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인적 속성과 소득을 비롯한 빈곤 차원을 고려하여 청년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실태와 정책방향, 개선점 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은 청년정책 중 핵심사업인 경우가 많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소득기준이 제각각인데 소득은 표준화되어 있는 단위이므로 부처나 사업을 달리한다고 해서 저소득이라는 기준이 달라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로 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은 단독이나 1인 가구로 독립하거나 결혼을 통해 분가하는 세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개인소득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인적 속성을 고려한 취약계층 사업에서 실제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정책 대상보다 해당 지원 대상과 관련된 부처가 존재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취약 청년인 장애 청년, 시설이나 기관 종료 및 퇴소 청년, 사회적 고립 청년, 집이 없거나 지옥고와 같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하는 청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규모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부모나 돌봄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할 때 이루어지는 지원이다. 이 역시 부족해 보이거나 이들과 비슷한 처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도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들은 기존 시설이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찾아오는 서비스로 접근하기 어려워 사각지대로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찾아가는 서비스 (Outreach approach)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촘촘한 지원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청년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3장

다차원 빈곤 접근 적용과 현황 분석

제1절 다차원 빈곤 접근의 이해와 적용

제2절 다차원 빈곤 현황과 추이

제3절 청년 집단별 다차원 빈곤 현황

제4절 소결

제 3 장 다차원 빈곤 접근 적용과 현황 분석

제1절 다차원 빈곤 접근의 이해와 적용¹⁾

1. 다차원 빈곤의 이론적 발전

다차원 빈곤은 빈곤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인 소득 빈곤의 한계에서 출발했다. 소득 빈곤은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개인화하여 가구 내 가구원 간 사적이전이나 개인의 소득 자체를 포착하지 못한다. 또한 소득 이외의 생활영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빈곤 경험이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할 수 있다.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적 방식의 빈곤 측정을 비화폐적 범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 등장하였다.

다차원 빈곤은 센(Sen, A.)의 능력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에 이론적 틀을 두고 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원하는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센의 능력접근을 제반 화폐·비화폐적 조건 세트(capabilities set)의 마련으로 확장한 누스baum(Nussbaum, M.)의 제안이 결합하여 다차원 빈곤 접근이 다양한 국가와 세대에 적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김문길 외(2017)가 다차원 빈곤 이론의 맥락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차원 빈곤틀을 개발하였다. 이어 김문길 외(2017)의 다차원 빈곤틀을 소개한다.

2. 김문길 외(2017)의 다차원 빈곤틀과 적용

김문길 외(2017)는 Alkire & Foster(2011)의 다섯 가지 질문 리스트(Alkire & Foster, 2011)를 준용하여 청년 등 세대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측정을 위한 다차원 빈곤틀을 제안했다. 질문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이 절은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다차원 빈곤 접근의 핵심 문헌(key paper)인 김문길 외(2017)의 2장과 6장의 내용을 축약, 재배치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문길 외(2017)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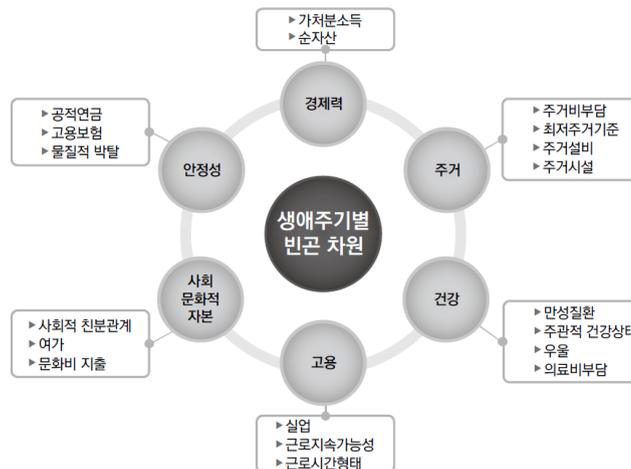
〈표 3-1〉 다차원 빈곤틀 개발을 위한 Alkire & Foster(2011)의 질문

1. (규범적 이슈) 영역: 어떤 영역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2. (방법적 이슈) 지표: 타당한 지표는 무엇인가?
3. (방법적 이슈) 가중치: 어떤 차원과 지표가 중요한가?
4. (방법적 이슈) 판단 I : 어떻게 측정하는가?
5. (방법적 이슈) 판단 II: 누가 빈곤한가?

김문길 외(2017)가 다섯 가지 질문을 다룬 방식은 이렇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영역과 지표의 선택이다. 김문길 외(2017)은 다차원 빈곤의 차원을 설정하기 위해 일본, 독일, 유럽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발한 다차원 빈곤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빈곤의 차원과 지표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Matsuyama, 2016; Rippin, 2012; Suppa, 2015; Suppa, 2016; Alkire & Apabalza, 2016; Whelan, Nolan & Maitre, 2014; Frame, Lannoy & Leibbrandt, 2016; 김문길 외, pp.248-250에서 재인용).

그리고 경상계열 및 사회계열, 그리고 청년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의 맥락에 적합한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의 차원과 지표를 구성하였다(김문길 외, pp.251-257). 다음 그림은 김문길 외(2017)에서 제시한 최종 고려한 6개 차원과 19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 김문길 외(2017)의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틀



자료: 김문길 외(2017), p.257.

세 번째 질문인 영역과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이다. 김문길 외(2017, pp.264-266)는 다차원 빈곤 접근에서 차원과 지표의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3가지 가중치를 제안하였다. 첫째, 모든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일 가중치(equal weights) 방법, 둘째, 차원별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지표별 가중치를 배분하는 내재적 가중치(nested weights) 방법, 전문가 또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결정하는 참여형 가중치(participatory) 방법이 그것이다.

동일 가중치는 모든 지표에 동일한 값의 가중치를 적용하므로, 지표의 수에 따라 차원의 중요도가 왜곡될 수 있고, 참여형 가중치는 참여자의 자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반면 내재적 가중치는 다차원 빈곤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선택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동일 가중치나 참여형 가중치가 가지는 한계에 대응하여 모든 차원들이 같은 가중치를 갖도록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차원과 지표 선정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내재적 가중치를 활용한다. 다음 표는 김문길 외(2017)가 제시한 차원과 지표별 내재적 가중치이다.

〈표 3-2〉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별 내재적 가중치

| 차원 | 지표 | 내재적 가중치 (Nested Weight) | |
|----------|---------------|-------------------------|--------|
| | | 차원 가중치 | 지표 가중치 |
| 경제력 | 가처분소득 | 1/6 | 1/12 |
| | 순자산 | | 1/12 |
| 주거 | 주거비 부담 | 1/6 | 1/24 |
| | 최저주거기준 | | 1/24 |
| | 주거 설비 | | 1/24 |
| | 주거 시설 | | 1/24 |
| 건강 | 만성질환 | 1/6 | 1/24 |
| | 주관적 건강상태 | | 1/24 |
| | 우울 | | 1/24 |
| | 의료비 부담 | | 1/24 |
| 고용 | 실업 | 1/6 | 1/18 |
| | 근로지속가능성 | | 1/18 |
| | 근로시간형태 | | 1/18 |
| 사회문화적 자본 |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 1/6 | 1/18 |
| | 여가 만족도 | | 1/18 |
| | 문화비 지출 | | 1/18 |
| 안정성 | 공적연금 | 1/6 | 1/18 |
| | 고용보험 | | 1/18 |
| | 물질적 박탈 | | 1/18 |

자료: 김문길 외(2017), p.266.

네 번째 질문은 다차원 빈곤 측정방법이다. 김문길 외(2017)에 의한 내재적 가중치를 적용하여 차원 빈곤 점수(d_{ij})와 다차원 빈곤 점수(mp_i)를 산출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quad d_{ij} = \sum m_k w_k$$

첫째, 차원 빈곤 점수는 수식 (1)을 활용하여 개인 i의 다차원 빈곤 차원 점수(d_{ij})는 차원 j의 지표 k의 지표값(m_{ik})에 지표별 가중치 w_k 를 적용한 값으로 산출한다.

$$(2) \quad mp_i = \sum d_{ij} w_j$$

둘째, 다차원 빈곤 점수는 수식 (2)를 활용하여 개인 i의 차원 점수를 합산한다. 최종 다차원 빈곤 점수(mp_i)는 비빈곤한 0점부터 모든 차원과 지표가 빈곤한 1점까지의 범위에서 계산된다.

마지막 질문은 빈곤 판정이다. 김문길 외(2019, pp.257-264)는 19개 지표별 빈곤 선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근거가 분명한 경우는 이를 따랐고, 그렇지 않은 일부의 경우는 규범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3〉 김문길 외(2017)의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 내용과 빈곤선

| 차원 | 지표 | 내용 | 빈곤선 | 근거 |
|-----|--------|------------------------|---|--|
| 경제력 | 가처분소득 |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 | OECD. (2015). Terms of Reference: OECD Project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s. |
| | 순자산 | (가구총자산 - 가구총부채)의 균등화 값 | 중위 순자산 50% 미만 | |
| 주거 | 주거비 부담 | 총 생활비 중 주거비 비중 | 점유형태 ① 자가는 비빈곤,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는 RIR 30% 초과, ⑤ 기타는 비빈곤 | 강미나 등. (2016). 2016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pp. 90-92. |

| 차원 | 지표 | 내용 | 빈곤선 | 근거 |
|----------|--------------|--|--|--|
| | 최저주거 기준 | 최저주거기준 대비 주거면적 |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 개정) |
| | 주거 설비 |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① 내구·내열·내화·방열·방습', '②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③ 오염으로부터 안전', '④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 주거 설비 2개 이하 충족 | |
| | 주거 시설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 최저주거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온수)) 1개 이상 미충족 | 강미나 등. (2016). 2016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p. 275. |
| 건강 | 만성질환 |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질환 유무 |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는 질병 있음 | |
| | 주관적 건강상태 | ① 아주 건강하다 ~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 OECD Health Statistics 2017 Bad/very bad health |
| | 우울 | CESD-11 우울 척도 11개 문항 | 0~3점 리코딩 후 합산된 우울 점수가 9 초과 | |
| | 의료비 부담 | 총생활비 중 보건의료비 비중 |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10% 초과 지출 | Devadasan et al.(2005); 황도경 등, 2013, p. 41에서 재인용. |
| 고용 | 실업 |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실직한 상태 | 실업자 | 통계청 통계용어 지표이해 '실업률' |
| | 근로지속 가능성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vs.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해고 가능 |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정규직' |
| | 근로시간 형태 | ①시간제 vs. ②전일제 | 시간제 |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비정규직(시간제)' |
| 사회문화적 자본 |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 ① 매우 불만족한다~② 불만족한다 | |
| | 여가 만족도 |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 ① 매우 불만족한다~② 불만족한다 | |
| | 문화비 지출 | 총생활비 중 교양오락비 비중 | 교양오락비 비중의 중위 50%(가중치 적용) 미만 | |
| 안정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공적연금 미가입/미수급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

| 차원 | 지표 | 내용 | 빈곤선 | 근거 |
|----|--------|---|----------|--------------------------|
| 성 | |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여부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여부 | 고용보험 미가입 | 고용보험법 |
| | 물질적 박탈 | 집세, 공과금, 공교육비, 난방비, 의료비, 사회보험료 등 박탈 및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여부의 박탈 점수 | 1개라도 박탈 | 여유진 감미곤 등, 2007, p. 124. |

자료: 김문길 외(2017), pp.259-260.

김문길 외(2017)는 Alkire와 Foster(2011)가 제안한 다섯 가지 질문에 따라 개발한 다차원 빈곤틀을 청년 집단에 주목하여 적용하였다. 즉, 초기 청년과 중후기 청년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중장년 및 노인, 그리고 전체 인구 집단 대비 청년의 다차원 빈곤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빈곤의 전통적인 접근으로서 소득 빈곤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영역의 생활 차원을 고려한 다차원 빈곤 접근을 적용했을 때 청년의 취약성을 발견하고, 사회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시점의 횡단면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으므로, 다차원 빈곤의 현황과 하위집단을 고려한 다차원 빈곤 분해, 그리고 다차원 빈곤의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의 기틀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김문길 외(2017)이 제안한 다차원 빈곤틀을 준용하여 청년 다차원 빈곤의 최근 10년간 추이와 현황, 그리고 청년 취약계층 발견을 위한 심층분석을 시도한다.

3. 분석자료

김문길 외(2017)의 다차원 빈곤틀을 활용하여 청년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는 자료는 3~14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이다(이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2006년에 시작한 한국복지패널은 2005년 인구센서스에 의한 전국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517개 조사구에서 표본가구를 추출했다. 14차 조사는 6,47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한 가구 및 개인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표집오차를 조정하여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가구와 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가구 단위 분석과 개인 단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하였으므로, 다른 패널조사에 비해 저소득 빈곤 집단의 유효표본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빈곤 연구에 용이하다. 이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활용하는 3~14차 한국복지패널의 기준연도는 2008~2018년으로 최근 10년간 다차원 빈곤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청년 다차원 빈곤 분석에서 청년은 다음과 같이 연령을 고려하여 정의한다.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2020.2.4., 제정)」 제3조(정의)에 의해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청년의 연령구분을 세분화하여 만 19~24세 청년은 초기 청년으로, 만 25~29세 청년은 중기 청년으로, 만 30~34세 청년은 후기 청년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다차원 빈곤 현황을 비교하는 성인 연령대로 중장년은 연령이 만 35~64세인 인구로, 노인은 만 6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고 있다.

〈표 3-4〉 청년의 연령구분

| 청년 (19~34세) | | | 중장년 | 노인 |
|-------------|--------|--------|--------|--------|
| 초기 청년 | 중기 청년 | 후기 청년 | | |
| 19~24세 | 25~29세 | 30~34세 | 35~64세 | 65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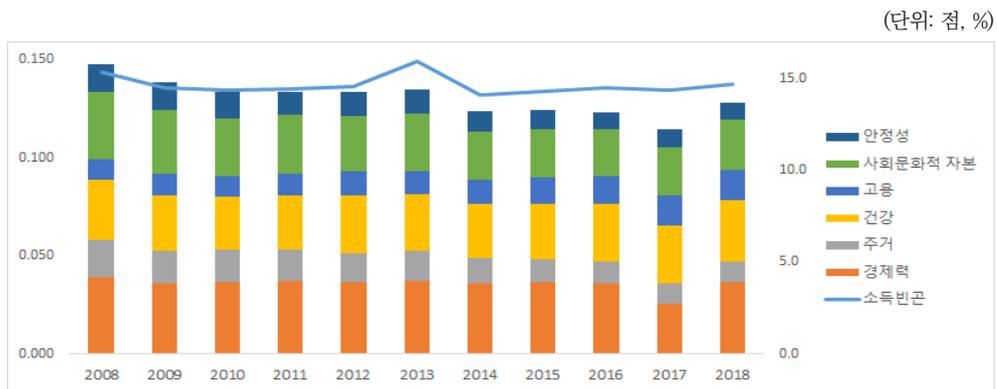
이후부터는 청년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하여 중장년과 노인의 다른 연령집단 대비 청년의 다차원 빈곤 현황과 추이 분석 결과를 제2절에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집단별 다차원 빈곤 현황과 추이 분석 결과를 제3절에서 제시하고 있다.

제2절 다차원 빈곤의 현황과 추이²⁾

이 절에서는 최근 10년 19세 이상 성인의 다차원 빈곤 추이를 확인하고, 연령집단에 따라 비교한다. 다음 그림에서 최근 10년간 다차원 빈곤의 추이를 소득 빈곤의 추이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막대그래프의 총 높이는 다차원 빈곤 점수이고, 개별 요소는 다차원 빈곤의 개별 차원의 점수다. 선그래프는 분석표본의 소득 빈곤 수준으로 소득 빈곤과 다차원 빈곤의 차이를 통해 다차원 빈곤 접근으로 식별할 수 있는 숨은 빈곤의 심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을 보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소득 빈곤이 다소 완화된 이후 유지되다가 2013년에 일시적인 증가 이후 다시 낮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차원 빈곤은 소득 빈곤의 추세와 유사하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완화되어 오다가 2013년 약간의 증가 이후 2017년까지 정체와 완화 추세를 보인다. 2018년 들어 다소 악화되었는데, 같은 시점에 소득 빈곤이 다소 악화된 것과 유사한 추세이다.

[그림 3-2] 2008~2018년 다차원 빈곤의 현황과 추이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부표 3-1>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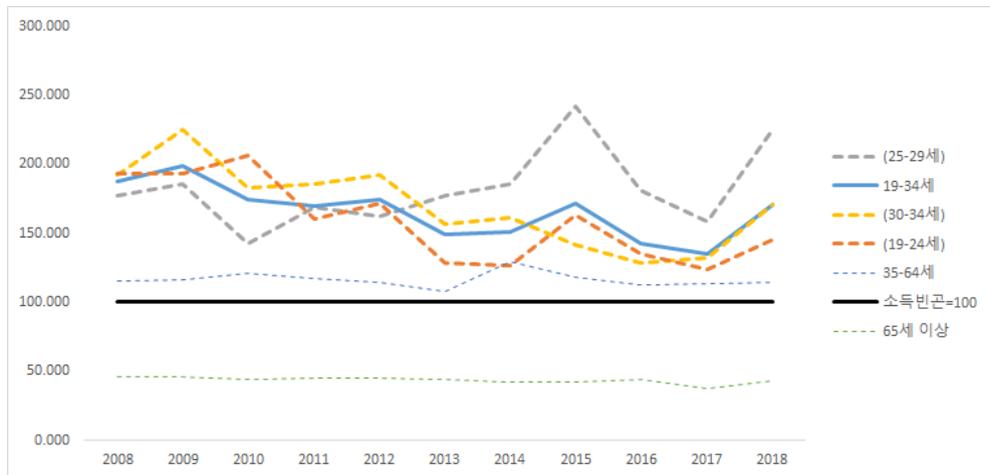
다음 그림은 19~34세 청년, 35~64세 중장년,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집단별 소득 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의 배율이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방식인 소득 빈곤에서

2) 그림의 세부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정보는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다.

확인하기 어려우나 다차원 빈곤 접근에서 식별이 가능한 취약 계층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빈곤의 관점에서 취약 집단인 65세 이상 노인을 차지하고, 35~64세 중장년의 다차원 빈곤 배율은 지난 10년간 110~1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청년은 소득 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 점수의 배율이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높으며 그 등락도 선명한 편이다. 이는 청년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다차원적인 취약성 뿐 아니라 기존의 소득 빈곤 접근으로는 청년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차원 빈곤 접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청년의 취약성은 특히 2012년 이후부터 고등학령기를 마치고 독립을 시작하는 25~29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3-3] 2008~2018년 연령집단별 소득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 비율

(단위: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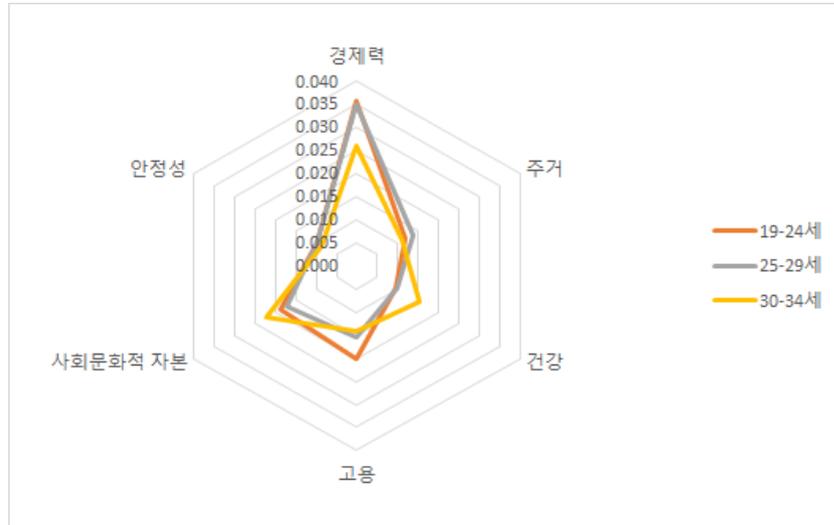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임.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소득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 배율은 다차원빈곤 점수를 소득빈곤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계산함. <부표 3-2>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은 청년의 하위 연령집단별 다차원 빈곤 수준임. 19~24세 초기 청년 및 25~29세 중기 청년은 경제력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특히 초기 청년은 고용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높다. 30~34세 후기 청년은 상대적으로 경제력과 고용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낮고, 건강과 사회문화적 자본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높다.

[그림 3-4] 2018년 청년 연령집단별 다차원 빈곤

(단위: 점)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부표 3-3>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제3절 청년 집단별 다차원 빈곤 현황³⁾

이 절에서는 19-34세 청년에 주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으로 구분해 다차원 빈곤의 추이와 최근 현황을 분석한다⁴⁾. 분석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현황을 분석하되, 중간 시점인 2010년과 2015년의 추이를 함께 확인한다.

1. 성별

성별에 따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은 [그림 3-5]와 같다. 2008년에는 여성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0.124점으로 남성의 0.119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소득 빈곤과 비교하면, 여성의 소득 빈곤에 비해 남성의 소득 빈곤이 높은 것으로 나타

3) 연도별 청년 집단의 유효표본은 부록에서 다차원 빈곤 및 소득 빈곤 정보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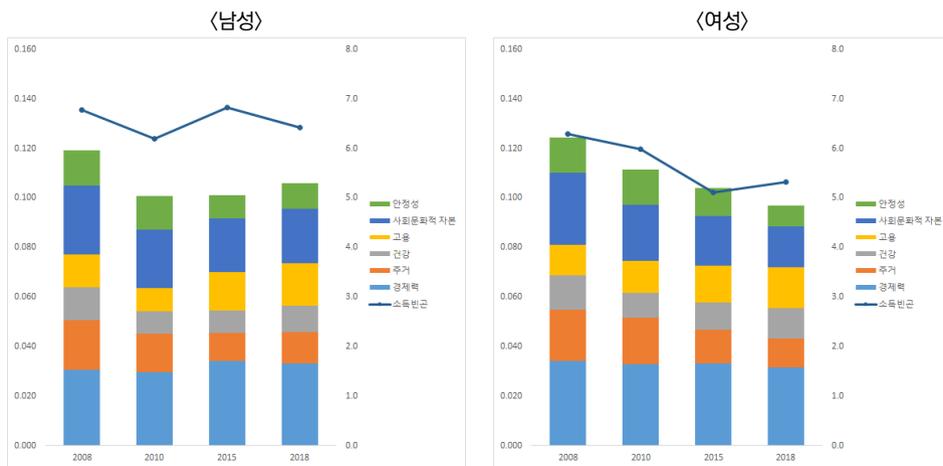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유효표본의 크기는 부표를 참고하라.

난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다차원 빈곤 접근과의 차이가 작다. 여성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2010년 0.111점, 2015년 0.104점, 2018년 0.097점으로 완화됐지만, 남성은 2010년 0.101점, 2015년 0.101점, 2018년 0.106점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약간의 완화 이후 다차원 빈곤 점수가 정체되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 차원 중에서는 경제력 빈곤 점수가 남성과 여성 모두 0.03점 이상으로 가장 높다. 사회문화적 자본, 주거의 빈곤 점수는 전체 다차원 빈곤 점수 중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난 10년간 절대적인 점수는 감소한 추세이다. 반면, 고용의 다차원 빈곤 점수는 지난 10년간 남성이 0.013점에서 0.017점으로, 여성이 0.012점에서 0.016점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인 다차원 빈곤 완화 추세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3-5] 성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의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부표 3-5>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6]은 2018년 최근 청년의 성별에 따른 다차원 빈곤 현황을 비교하고 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 다차원 빈곤 점수가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건강 다차원 빈곤 점수가 약간 높다.

[그림 3-6] 2018년 청년 성별 다차원 빈곤

(단위: 점)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부표 3-5>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2. 교육수준

[그림 3-7]은 교육수준별 청년의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되, 고졸 이하는 다시 실업계 및 특성화고와 일반계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단, 졸업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고졸 이하 집단 중에서는 대학교 재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소득 빈곤은 대졸 이상 집단이 가장 낮고, 다음이 실업계 및 특성화고를 졸업한 집단이다. 일반계 및 기타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소득 빈곤 수준이 가장 높다. 다차원 빈곤 점수도 소득 빈곤과 유사하여, 대졸 이상 집단이 가장 낮고, 실업계 및 특성화고 졸업 집단이 다음 수준이다. 일반계 및 기타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가장 높다.

대졸 이상 집단의 고용 빈곤 점수가 2008년 0.010점에서 2018년 0.013점으로 다소 악화된 반면, 실업계 및 특성화고와 일반계 기타 고등학교를 포괄하는 고졸 이하 집단의 고용 빈곤 점수는 2008년 각각 0.015점과 0.013점에서 2018년 각각 0.022점과 0.023점으로 대폭 악화되었다. 일반계 및 기타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다차원 빈곤 점수 중 특히 경제력 빈곤 점수가 높다. 대졸 이상과 실업계 및 특성화고 집단의 사회문화적 자본 점수가 지난 10년간 완화됐지만, 일반계 및 기타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점

수는 2008년 0.035점에서 2015년 약간의 완화 이후 2018년 0.034점으로 다시 높아졌다. 건강 빈곤 점수도 2018년 0.021점으로 대졸 이상 집단 0.011점의 두 배 정도로 높다. 실업계 및 특성화고 집단이 2008년 0.016점에서 2018년 0.009점으로 완화되어 온 것과 달리, 2008년 0.018점에서 2018년 0.021점으로 다소 악화된 추세이므로 주목할 만하다.

[그림 3-7] 교육수준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부표 3-7>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8]은 2018년 현재 교육수준별 청년의 다차원 빈곤 현황을 비교하고 있다. 대졸 이상은 다른 집단에 비해 다차원 빈곤 점수가 가장 낮는데, 주거 빈곤 점수가 실업계 및 특성화고 집단에 비해 약간 높다. 실업계 및 특성화고 집단의 다차원 빈곤이 중간 수준이고, 일반계 등 기타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가장 높다. 특히 경제력과 건강, 사회문화적 자본의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그림 3-8] 2018년 청년 교육수준별 다차원 빈곤

(단위: 점)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부표 3-7>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3. 가구 내 지위

여기에서는 청년의 가구 내 지위를 고려하여 1인 가구와 청년이 가구주 혹은 배우자인 집단, 청년이 가구 내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 사례를 기타로 분류하여 제외하고 있다. 1인 가구와 가구주/배우자 집단은 서로 다른 이유로 청년이 독립한 경우이고, 자녀/자녀의 배우자인 집단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다. [그림 3-9]는 청년의 가구 내 지위에 따른 다차원 빈곤 점수의 추이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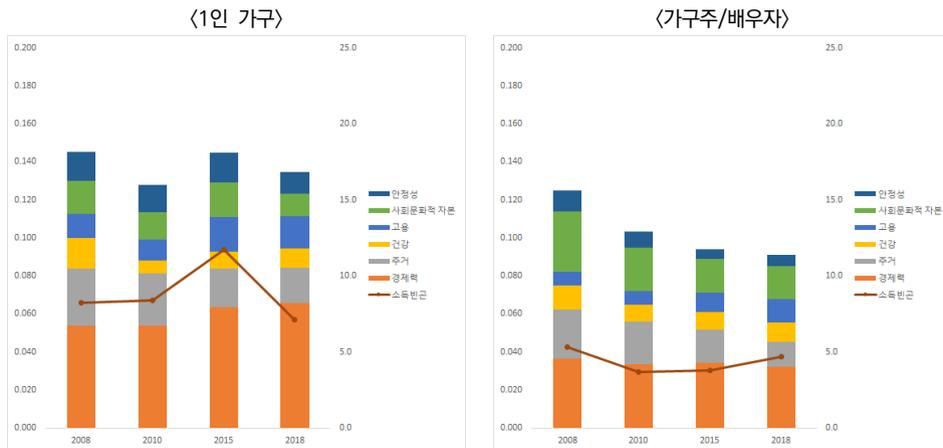
1인 가구 청년의 소득 및 다차원 빈곤 점수가 가장 높다. 다른 집단과 달리, 1인 가구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는 지난 10년간 등락을 보인다. 주거, 건강,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의 빈곤 점수가 다소 완화됐지만, 고용 빈곤 점수는 2008년 0.013점에서 2018년 0.017점으로 악화되었다. 주목할 만한 차원은 경제력인데, 2008년 0.054점에서 2018년 0.066점으로 지난 10년간 악화되었다.

가구주 혹은 배우자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는 2008년 0.125점으로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인 청년의 0.116점에 비해 높았으나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2018년에 0.091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차원 빈곤을 구성하는 대부분 차원의 빈곤 점수가 지난 10년간 완화됐으나, 고용 빈곤 점수는 2008년 0.007점에서 2018년 0.012점으로 약간 악화되었다.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는 2008년 0.116점에서 2018년 0.098점으로 완만하게 완화되어왔다. 주거, 건강,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의 빈곤 점수가 지난 10년간 완화됐지만, 경제력의 빈곤 점수는 2008년 0.027점에서 2015년 0.031점으로 약간 높아졌다가 2018년 0.026점으로 2008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용 빈곤 점수가 2008년 0.016점에서 2018년 0.019점으로 다소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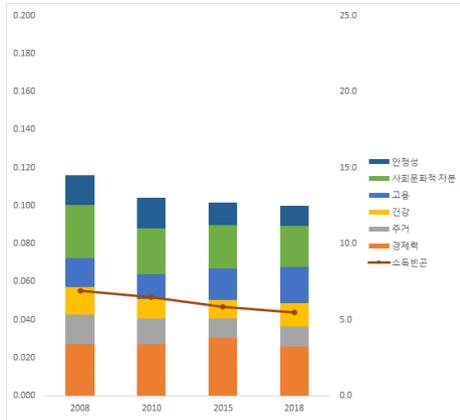
[그림 3-9] 가구 내 지위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78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자녀/자녀의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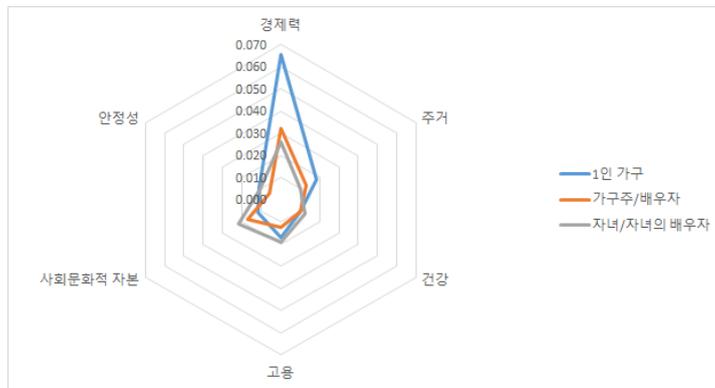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기타는 가구주나 배우자,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외 지위를 포함하여 제외함. <부표 3-9>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 [그림 3-10]은 2018년 현재 청년의 가구 내 지위에 따른 다차원 빈곤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를 제외하고, 1인 가구 청년의 경제력, 주거, 고용 빈곤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특히 다른 집단과 경제력 빈곤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 1인 가구 청년의 취약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0] 2018년 청년 가구 내 지위별 다차원 빈곤

(단위: 점)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부표 3-9>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4. 혼인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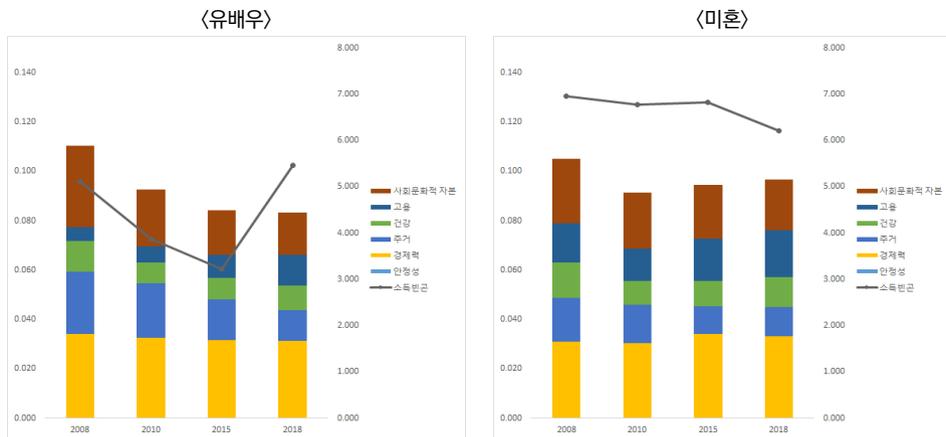
앞서 청년의 가구 내 지위에 따른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을 살펴본 데에 이어, 여기에서는 결혼한 청년과 미혼 청년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림 3-11]은 혼인상태별 청년의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유배우 청년에 비해 미혼 청년의 소득 빈곤이 높은 수준이다. 2008년 당시 유배우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0.120점이고 미혼 청년은 0.121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유배우 청년의 다차원 빈곤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완화 추세를 보이지만, 미혼 청년은 2010년에 일시적으로 완화된 이후 2018년까지 다차원 빈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배우 집단은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다차원 빈곤 완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경제력 빈곤 점수가 2008년 0.034점에서 2018년 0.031점으로 비교적 그 수준이 유지되고, 고용 빈곤 점수는 2008년 0.006점에서 2018년 0.013점으로 약 2배 정도 악화되었다..

[그림 3-11] 혼인상태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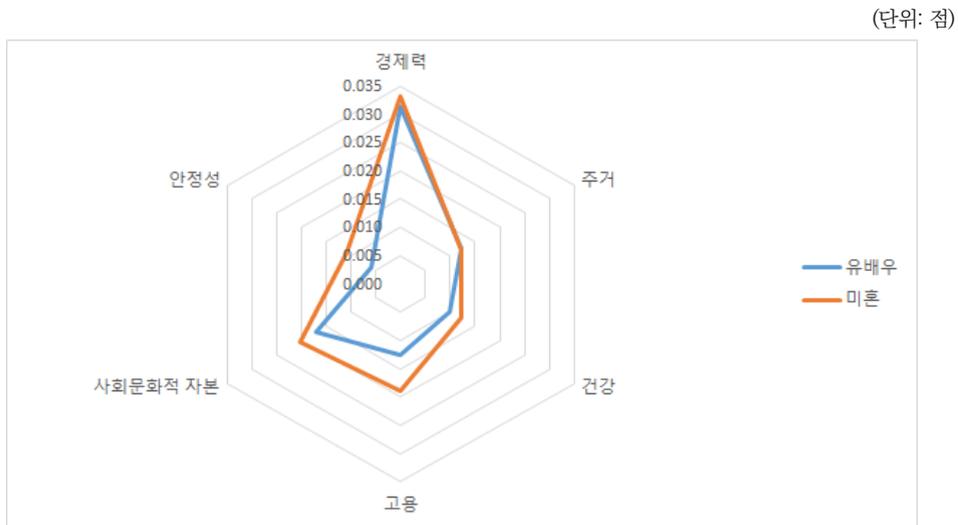
(단위: 점,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기타는 이혼/사별/별거 등을 포함함. <부표 3-11>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12]는 2018년 현재 청년의 혼인상태에 따른 다차원 빈곤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유배우 집단과 미혼 집단의 경제력, 주거 빈곤 점수는 유사하지만,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은 유배우 집단에 비해 미혼 집단의 빈곤 점수가 높다.

[그림 3-12] 2018년 청년 혼인상태별 다차원 빈곤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부표 3-11>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5. 종사상 지위

[그림 3-13]은 종사상 지위별 청년의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청년의 다차원 빈곤 수준이 가장 낮고, 비경제활동인구 청년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그리고 실업 중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매우 높다.

상용직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청년의 다차원 빈곤은 지난 10년간 완만하게 완화되어 왔다.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의 다차원 빈곤은 2010년 이후 약간의 등락을 보이면서 유지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은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 자본의 빈곤 점수가 높은 편이다.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다차원 빈곤은 2008년 0.201점에서 2018년 0.17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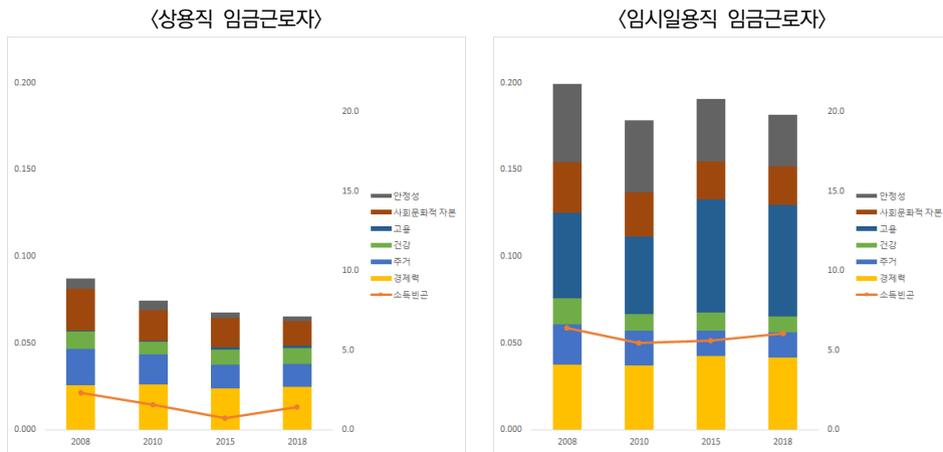
으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용, 경제력, 안정성의 빈곤 점수가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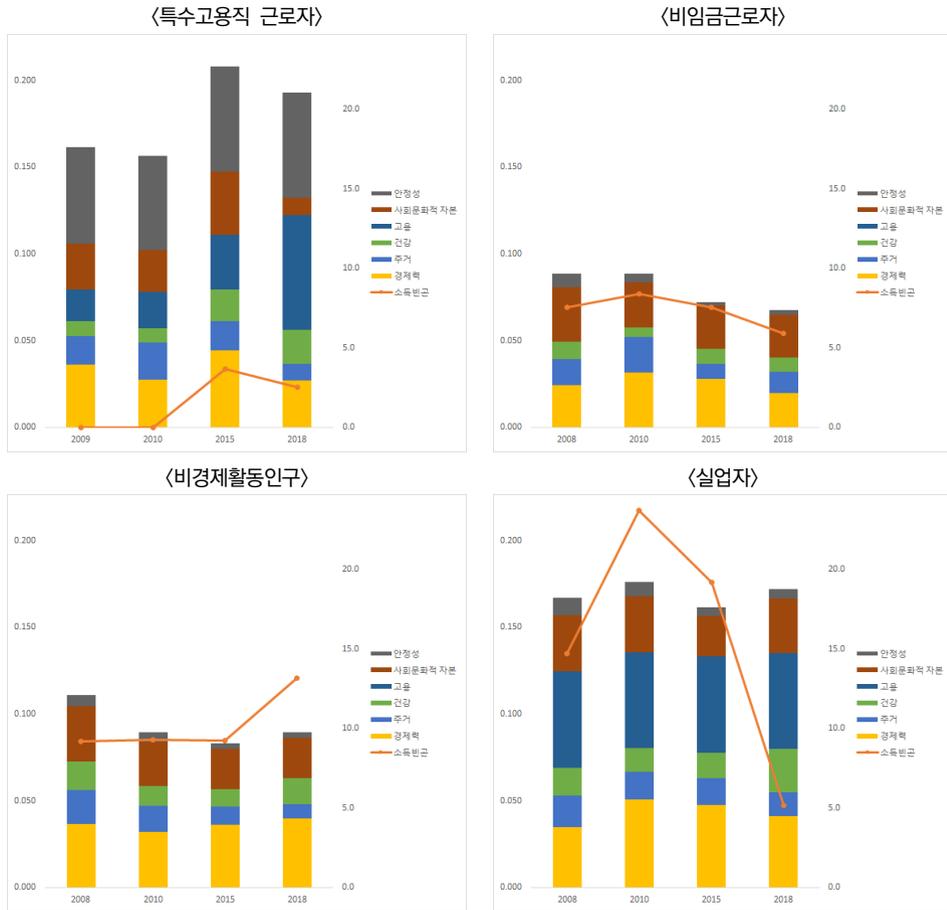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다차원 빈곤은 2008년 0.162점에서 2018년 0.196점으로 지난 10년간 악화되었다. 경제력 빈곤 점수는 2008년 0.036점에서 2018년 0.027점으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건강 빈곤 점수가 0.009점에서 0.020점으로 약 2배 정도 악화되었고, 고용 빈곤 점수는 0.018점에서 0.066점으로 3배 이상 악화되었다. 안정성 빈곤 점수 또한 2018년 0.061점으로 높은 편이다.

실업상태인 청년의 다차원 빈곤도 2008년 0.167점에서 2018년 0.172점으로 다소 악화되었다. 경제력 빈곤 점수가 0.035점에서 0.041점으로 다소 높아졌고, 고용 빈곤 점수는 0.056점 수준을, 사회문화적 자본 점수는 0.03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건강 빈곤 점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008년 0.016점에서 2018년 0.025점으로 악화되었다.

[그림 3-13] 종사상 지위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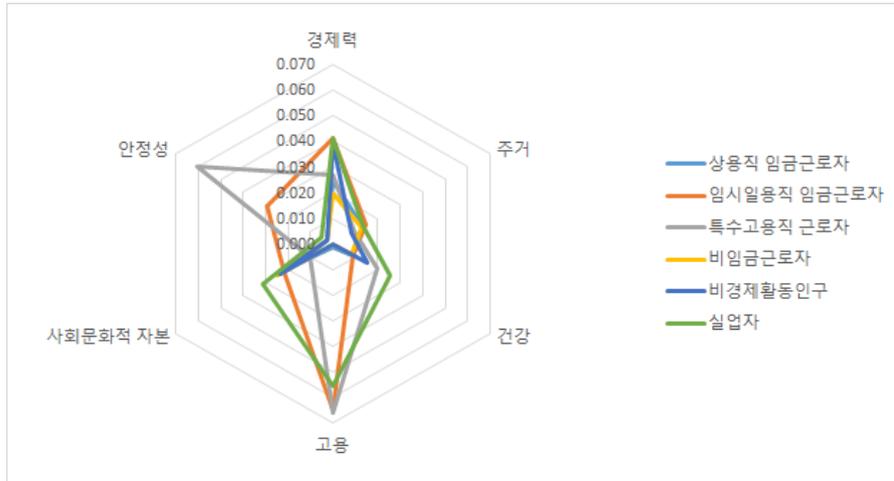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자활근로, 공공근로를 포함함.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부표 3-13>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14]는 2018년 현재 종사상 지위에 따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실업자의 건강과 사회문화적 빈곤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고용은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실업자의 빈곤 점수가 매우 높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안정성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고, 임시·일용자가 다음 수준으로 높다.

[그림 3-14] 2018년 청년 종사상 지위별 다차원 빈곤

(단위: 점)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부표 3-13>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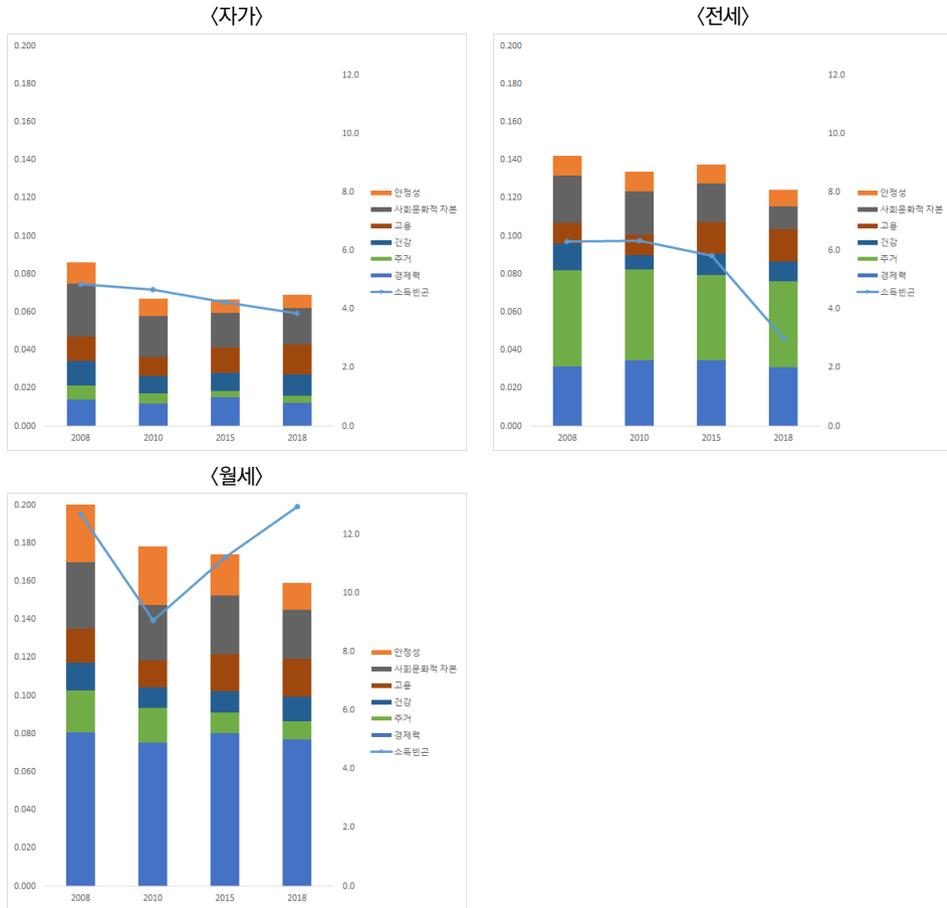
6. 주거 점유형태

[그림 3-15]는 주거 점유형태에 따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가와 전세, 월세로 집단을 구분하고 있으며, 월세는 보증부월세를 포함하고 있다. 자가에 비해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이, 전세에 비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의 소득 빈곤 수준과 다차원 빈곤 점수가 높다. 자가 청년은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 자본의 빈곤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 2008년 0.028점에 비해 2018년에는 0.019점으로 점차 완화되었다.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은 주거 빈곤 점수가 2008년 0.051점에서 2018년 0.045점으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용 빈곤 점수가 2008년 0.01점에서 2018년 0.017점으로 높아졌다. 다차원 빈곤 점수가 가장 높은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은 경제력 빈곤 점수가 다른 집단의 청년에 비해 높은 편이고, 2008년 0.081점에서 2018년 0.077점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3-15] 주거 점유형태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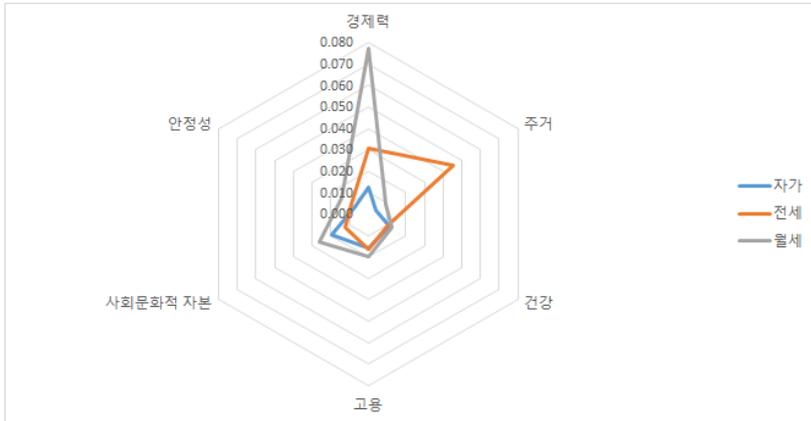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부표 3-15>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16]은 2018년 기준 청년의 주거 점유형태에 따른 다차원 빈곤 점수를 비교하고 있다.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력 빈곤 점수가 매우 높고, 전세로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 빈곤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림 3-16] 2018년 청년 주거 점유형태별 다차원 빈곤

(단위: 점)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부표 3-15>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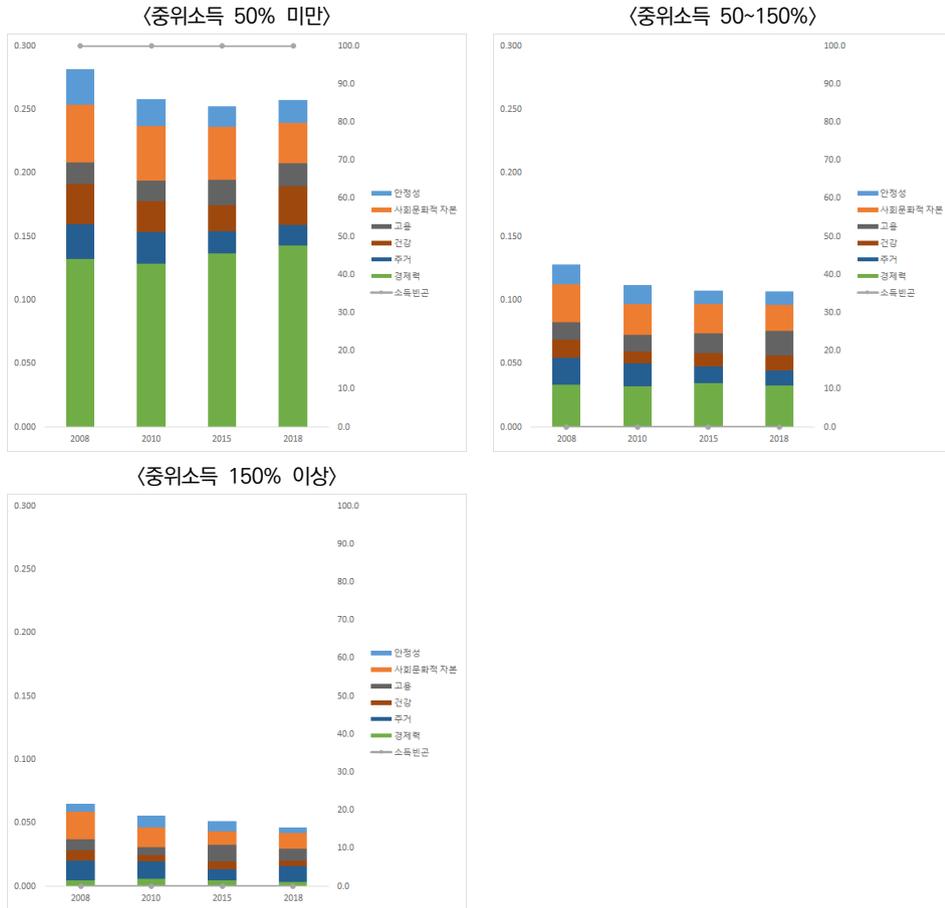
7. 가구 소득수준

[그림 3-17]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중위소득 하위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상위 50% 이상을 상위층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50% 이상 150% 미만을 중간층으로 분류하였다. 직관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50% 미만 집단은 모두 소득 기준 빈곤하며, 다차원 빈곤 점수도 매우 높다. 다차원 빈곤 점수는 2008년 0.282점에서 2010년 0.262로 완화된 이후 2018년 0.256점까지 약간씩 완화되며 높은 수준이 유지되었다. 이 중 절반 혹은 그 이상을 경제력 빈곤 점수가 차지하는데, 2008년 0.133점에서 2018년 0.143점으로 지난 10년간 악화되었다.

중위소득 50~150%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는 2008년 0.128점에서 2018년 0.107점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이 중에서 고용 빈곤 점수가 2008년 0.014점에서 2018년 0.019점으로 다소 악화되었다. 중위소득 150% 이상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는 2008년 0.066점에서 2018년 0.046점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그림 3-17] 가구 소득수준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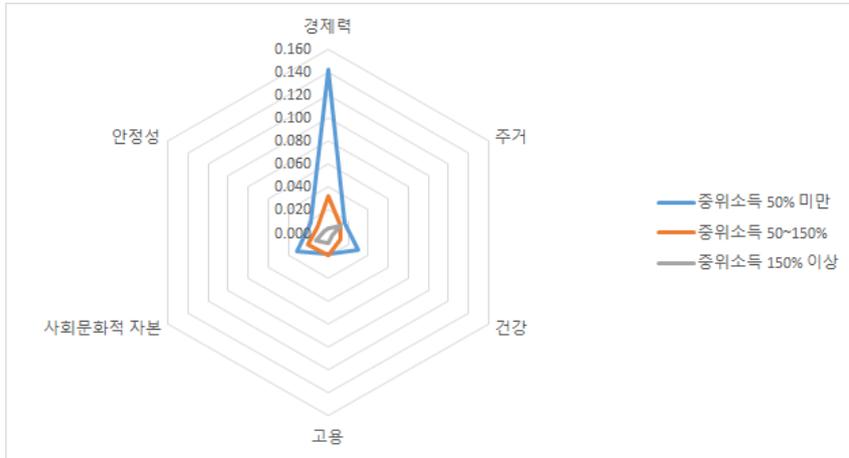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기타는 가구주나 배우자,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외 지위를 포함함. <부표 3-17>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18]은 2018년 기준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청년의 다차원 빈곤을 비교하고 있다. 중위소득 150% 이상인 청년의 빈곤 수준이 가장 낮고, 다음이 중위소득 50~150% 청년이다. 중위소득 50% 미만인 청년의 빈곤 수준이 가장 높는데, 특히 경제력의 빈곤 점수가 매우 높다.

[그림 3-18] 2018년 청년 가구 소득수준별 다차원 빈곤

(단위: 점)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부표 3-17>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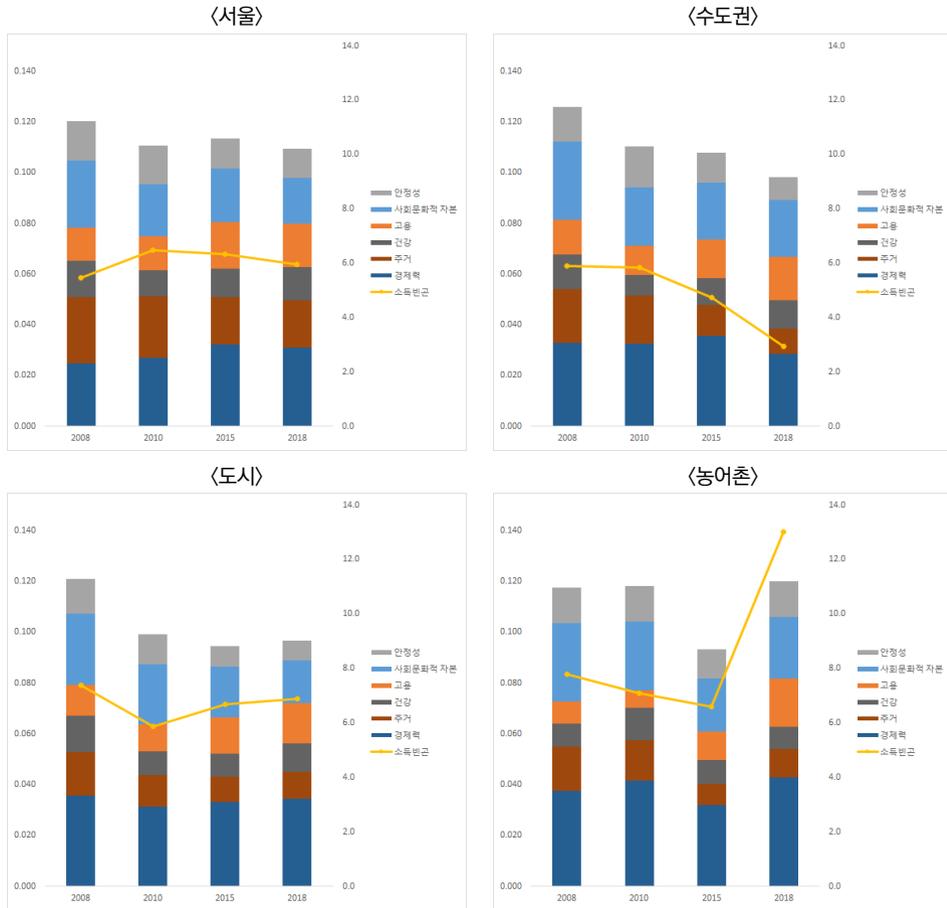
8. 거주지역

[그림 3-19]는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다차원 빈곤의 추이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지역을 서울,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하는 서울 외 수도권, 그 외 지역 중 구지역과 시지역을 포함하는 도시, 군지역을 포함하는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2008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0.127점으로 가장 높지만, 2018년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이 0.11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 지역 0.112점이다.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도시 지역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낮다. 지난 10년간 서울, 수도권, 도시 지역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개선되어 온 반면, 농어촌 지역 거주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는 2015년 일시적인 완화를 제외하고 0.12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림 3-19] 거주지역별 청년 다차원 빈곤 추이와 현황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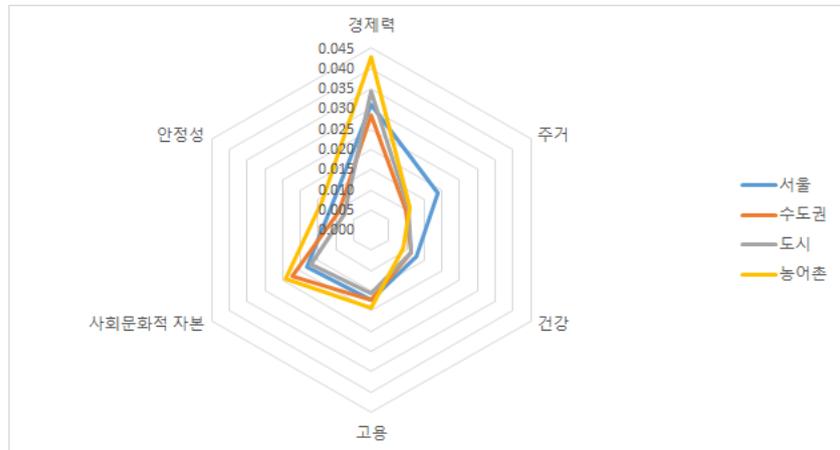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부표 3-19>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20]은 2018년 기준 거주지역별 청년의 다차원 빈곤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거 빈곤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점수가 가장 높다.

[그림 3-20] 2018년 청년 거주지역별 다차원 빈곤

(단위: 점)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부표 3-19>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제4절 소결

청년 소득빈곤율은 노인 소득빈곤율 대비 7.6%에 불과하지만 다차원빈곤은 26.2%에 이르러(2018년, 보사연 내부자료), 소득빈곤만으로는 청년의 정책욕구와 취약계층을 발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여 년간 다차원 빈곤 추이를 보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소득 빈곤이 다소 완화된 이후 유지되다가 2013년에 일시적인 증가 이후 다시 낮은 추세를 유지하였다. 연령집단에 따라 소득 빈곤의 관점에서 취약 집단인 65세 이상 노인을 차지하고, 35~64세 중장년의 다차원 빈곤 배율은 지난 10년간 110~120 정도를 유지하였다. 반면, 청년은 소득 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 점수의 배율이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높으며 그 등락도 선명한 편이었다. 이는 청년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다차원적인 취약성 뿐 아니라 기존의 소득 빈곤 접근으로는 청년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만 19~34세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집단별 다차원 빈곤(최소0점~최대1점)의 최근 10년간 추이와 현황을 실태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2008년에는 여성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0.124점으로 남성에 비해 높았으나 지난 10년간 0.097점까지 지속적으로 완화된 반면, 남성의 다차원 빈곤 점수는 2008년 0.119점에서 2010년 0.1점으로 완화된 이후 2018년까지 지속되었다.

○ 남성: 0.119('08) → 0.100('10) → 0.101('15) → 0.105('18) △

○ 여성: 0.124('08) → 0.111('10) → 0.105('15) → 0.097('18) ▽

둘째, 교육수준별로 대졸 이상에 비해 실업계 및 특성화고 고졸 이하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높고, 일반계 등 기타 유형 고졸 이하 집단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가장 높다.

○ 고졸이하(실업계, 특성화고): 0.135('08) → 0.118('10) → 0.112('15) → 0.118('18)

○ 고졸이하(일반계 등 기타): 0.166('08) → 0.161('10) → 0.146('15) → 0.154('18)

○ 대졸이상: 0.097('08) → 0.086('10) → 0.086('15) → 0.085('18)

셋째, 가구 내 지위에 따라 1인 가구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2008년 0.145점에서 2018년 0.135점으로 가장 높다. 가구주 및 배우자인 청년의 다차원 빈곤이 2008년 0.125점에서 2018년 0.091점으로 많이 완화되어 최근 시점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 1인 가구: 0.145('08) → 0.128('10) → 0.145('15) → 0.135('18)

○ 가구주/배우자: 0.125('08) → 0.102('10) → 0.094('15) → 0.091('18)

○ 자녀/자녀의 배우자: 0.116('08) → 0.104('10) → 0.102('15) → 0.098('18)

넷째,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가장 높고, 실업자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다음 수준으로 높다. 특히 특수

고용직 근로자와 실업자는 2008년 0.162점과 0.167점에서 2018년 0.196점과 0.172점으로 악화되었다.

- 상용직 임금근로자: 0.087('08) → 0.075('10) → 0.069('15) → 0.066('1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201('08) → 0.177('10) → 0.195('15) → 0.179('18)
- 특수고용직 근로자: 0.162('08) → 0.157('10) → 0.207('15) → 0.196('18)
- 비임금근로자: 0.088('08) → 0.088('10) → 0.073('15) → 0.068('18)
- 비경제활동인구: 0.111('08) → 0.087('10) → 0.080('15) → 0.087('18)
- 실업자: 0.167('08) → 0.181('10) → 0.161('15) → 0.172('18)

다섯째,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가장 높고,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이 다음 수준이다.

- 자가: 0.086('08) → 0.066('10) → 0.066('15) → 0.068('18)
- 전세: 0.141('08) → 0.134('10) → 0.139('15) → 0.124('18)
- 월세: 0.198('08) → 0.178('10) → 0.173('15) → 0.157('18)

여섯째, 거주지역별로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에 비해 농어촌과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다차원 빈곤 점수가 높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은 다른 지역의 청년에 비해 주거의 빈곤 점수가 높다.

- 서울: 0.121('08) → 0.112('10) → 0.114('15) → 0.112('18)
- 수도권: 0.127('08) → 0.109('10) → 0.112('15) → 0.097('18)
- 도시: 0.120('08) → 0.097('10) → 0.092('15) → 0.095('18)

○ 농어촌: 0.117('08) → 0.122('10) → 0.095('15) → 0.118('18)

다차원 빈곤 접근을 활용한 청년의 실태분석 결과, 고졸 이하(일반계 등 기타), 1인가구,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및 실업자, 전세 및 월세 거주, 농어촌 거주 청년이 지속적으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다차원 빈곤 접근을 통한 취약청년 발굴

제1절 차원별, 지표별 빈곤청년 특성

제2절 청년 다차원 빈곤의 심도와 취약집단

제3절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과
취약집단

제4절 소결

제 4 장

다차원 빈곤 접근을 통한 취약청년 발굴

제1절 차원별, 지표별 빈곤청년 특성

이 절에서는 다차원 빈곤 차원별, 세부 지표별 빈곤층의 규모를 인구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는 각 차원별, 지표별 빈곤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정책 주요 영역별로 취약청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 표는 6가지 차원별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각 차원별 수치는 각 차원을 구성하는 개별 지표의 빈곤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카운트 한 값을 나타낸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음영으로 따로 표시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경제력,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 측면에서, 여성이 건강 측면에서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일반계고 졸업생 이하는 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전문계고 졸업생 이하는 안정성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지위로 보면 1인 가구가 경제력, 주거,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하고, 미혼은 경제력에서, 기타는 고용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력에서, 임시일용직은 주거와 고용에서, 특수고용직은 고용과 안정성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력, 사회문화적 자본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거점유형태별로는 전세가 경제력과 주거에서, 월세는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에서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빈곤층이 고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취약하고, 중산층 청년이 고용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주거에서, 도시와 농어촌은 경제력에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1〉 차원별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전체 | | 34.8 | 25.9 | 22.2 | 24.6 | 35.3 | 15.4 |
| 성별 | 남성 | 35.7 | 25.4 | 20.0 | 25.5 | 40.1 | 16.9 |
| | 여성 | 33.7 | 26.5 | 24.7 | 23.6 | 29.6 | 13.6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실업계, 특성화고) | 43.5 | 21.7 | 16.2 | 29.1 | 40.0 | 22.8 |
| | 고졸이하 (일반계 등 기타) | 52.0 | 31.0 | 33.4 | 34.6 | 55.8 | 22.0 |
| | 대졸이상 | 27.5 | 26.6 | 22.4 | 20.6 | 29.0 | 10.7 |
| 가구 내 지위 | 1인가구 | 74.0 | 37.3 | 21.6 | 29.0 | 19.6 | 19.5 |
| | 가구주/배우자 | 35.1 | 28.8 | 20.9 | 17.2 | 25.6 | 9.8 |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27.7 | 22.1 | 22.6 | 27.6 | 42.0 | 17.0 |
| 혼인상태 | 유배우 | 33.4 | 38.0 | 27.5 | 28.9 | 51.2 | 27.6 |
| | 미혼 | 35.4 | 27.2 | 20.4 | 17.5 | 26.9 | 9.9 |
| | 기타 | 28.9 | 25.4 | 23.0 | 28.1 | 38.7 | 17.7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45.3 | 27.6 | 19.4 | 2.2 | 27.9 | 4.8 |
| | 임금근로자 | 30.0 | 31.2 | 18.4 | 90.9 | 38.6 | 47.8 |
| | 임시일용직 | 22.4 | 22.8 | 26.6 | 90.2 | 24.4 | 86.4 |
| | 특수고용직 | 37.8 | 26.3 | 19.6 | 0.0 | 36.6 | 5.0 |
| | 비임금근로자 | 44.1 | 19.3 | 25.9 | 0.0 | 43.5 | 5.2 |
| | 비경제활동인구 | 13.6 | 27.3 | 47.9 | 100.0 | 45.1 | 9.7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34.6 | 8.7 | 23.1 | 22.3 | 36.7 | 11.6 |
| | 전세 | 79.7 | 97.8 | 20.3 | 23.2 | 23.2 | 14.3 |
| | 월세 | 100.0 | 18.6 | 22.0 | 31.2 | 41.3 | 22.5 |
| 가구 소득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39.1 | 35.2 | 47.1 | 23.2 | 53.7 | 28.6 |
| | 중위소득 50~150% | 4.5 | 24.6 | 23.9 | 28.2 | 36.3 | 17.1 |
| | 중위소득 150% 이상 | 32.7 | 27.5 | 10.3 | 13.8 | 27.4 | 6.4 |
| 거주지역 | 서울 | 32.1 | 38.4 | 21.8 | 26.6 | 34.2 | 18.1 |
| | 수도권 | 36.6 | 22.4 | 22.9 | 24.7 | 37.8 | 14.4 |
| | 도시 | 42.7 | 22.4 | 22.8 | 23.0 | 31.9 | 13.4 |
| | 농어촌 | 42.7 | 22.8 | 17.5 | 26.6 | 44.5 | 20.6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각 영역을 구성하는 지표별로 취약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표는 경제력 차원이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먼저,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선 아래에 있는 취약 청년은 일반계 고졸이하, 1인 가구, 비경제활동인구, 월세 거주자, 소득빈곤 청년, 농어촌 거주 청년으로 나타났고, 순자산 기준 빈곤선 아래에 있는 취약 청년은 일반계 고졸이하, 1인 가구, 임시일용직, 실업자, 월세 거주자, 소득빈곤 청년, 농어촌 거주 청년으로 확인된다.

일반계 고졸 이하 청년, 1인 가구, 월세 거주, 농어촌 거주 청년은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경제력 차원이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경제력 | 경제력 | |
|---------|---------------------|------|-------|------|
| | | | 가처분소득 | 순자산 |
| 전체 | | 34.8 | 5.9 | 33.1 |
| 성별 | 남성 | 35.7 | 6.4 | 33.6 |
| | 여성 | 33.7 | 5.3 | 32.6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실업계, 특성화고) | 43.5 | 7.9 | 41.7 |
| | 고졸이하 (일반계 등 기타) | 52.0 | 11.2 | 50.4 |
| | 대졸이상 | 27.5 | 4.0 | 25.8 |
| 가구 내 지위 | 1인가구 | 74.0 | 7.1 | 71.8 |
| | 가구주/배우자 | 35.1 | 4.7 | 34.2 |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27.7 | 5.5 | 25.8 |
| 혼인상태 | 유배우 | 33.4 | 5.5 | 32.2 |
| | 미혼 | 35.4 | 6.2 | 33.4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28.9 | 1.4 | 28.3 |
| | 임금근로자 | | | |
| | 임시일용직 | 45.3 | 6.0 | 43.7 |
| | 임금근로자 | | | |
| | 특수고용직 | 30.0 | 2.5 | 30.0 |
| | 비임금근로자 | 22.4 | 5.9 | 17.5 |
| | 비경제활동인구 | 37.8 | 13.2 | 34.5 |
| 실업자 | 44.1 | 5.2 | 44.0 |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13.6 | 3.9 | 10.8 |
| | 전세 | 34.6 | 3.0 | 33.9 |
| | 월세 | 79.7 | 13.0 | 79.5 |

| 구분 | | 경제력 | 가치분소득 | | 순자산 |
|------------|-----------------|-------|-------|------|-----|
| | | | 가치분소득 | 순자산 | |
| 가구 소득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100.0 | 100.0 | 71.1 | |
| | 중위소득 50~150% | 39.1 | 0.0 | 39.1 | |
| | 중위소득 150% 이상 | 4.5 | 0.0 | 4.5 | |
| 거주지역 | 서울 | 32.7 | 5.9 | 31.3 | |
| | 수도권 | 32.1 | 2.9 | 31.3 | |
| | 도시 | 36.6 | 6.9 | 34.4 | |
| | 농어촌 | 42.7 | 13.0 | 38.5 |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주거 차원의 세부지표별로 취약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는 여성, 대졸이상, 1인 가구, 미혼, 특수고용직, 비임금근로자, 전세 거주자, 중위소득 150% 이상, 서울 거주 청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측면에서는 일반계 고졸이하, 유배우, 임시일용직, 월세, 서울 거주 청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설비 측면에서는 일반계 고졸이하, 자녀/자녀의 배우자, 유배우, 비경제활동인구, 월세, 중위소득 50% 미만, 서울 거주 청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거시설 측면에서는 일반계 고졸이하, 1인 가구, 유배우, 실업자, 중위소득 50% 미만, 농어촌 거주 청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계 고졸 이하 청년과 혼인 상태인 유배우자 청년의 경우 주거비 부담을 제외한 물리적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지표들에서 취약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측면인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는 여성 청년의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주거 차원이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주거 | 주거환경 | | | |
|----|----|------|--------|------------|------|------|
| | | | 주거비 부담 | 최저 주거기준 | 주거설비 | 주거시설 |
| 전체 | | 25.9 | 16.2 | 2.2 | 8.7 | 1.9 |
| 성별 | 남성 | 25.4 | 14.8 | 2.6 | 9.7 | 2.7 |
| | 여성 | 26.5 | 17.7 | 1.6 | 7.6 | 1.0 |

| 구분 | | 주거 | 주거 | | | |
|---------|------------------|------|--------|---------|------|------|
| | | | 주거비 부담 | 최저 주거기준 | 주거설비 | 주거시설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실업계, 특성화고) | 21.7 | 11.5 | 1.6 | 8.1 | 0.5 |
| | 고졸이하 (일반계 등 기타) | 31.0 | 13.1 | 3.4 | 14.4 | 5.2 |
| | 대졸이상 | 26.6 | 18.8 | 2.1 | 7.8 | 1.9 |
| 가구 내 지위 | 1인가구 | 37.3 | 27.5 | 1.2 | 6.9 | 8.5 |
| | 가구주/배우자 | 28.8 | 23.4 | 2.1 | 5.2 | 0.8 |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22.1 | 10.9 | 2.3 | 10.2 | 1.3 |
| 혼인상태 | 유배우 | 38.0 | 11.4 | 4.1 | 21.3 | 6.2 |
| | 미혼 | 27.2 | 22.7 | 1.5 | 4.7 | 0.8 |
| | 기타 | 25.4 | 13.4 | 2.5 | 10.6 | 2.5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27.6 | 19.5 | 2.5 | 7.9 | 2.0 |
| | 임금근로자 | 31.2 | 15.4 | 3.1 | 12.8 | 3.8 |
| | 임시일용직 | 22.8 | 22.8 | 0.0 | 0.0 | 0.0 |
| | 임금근로자 | 26.3 | 20.4 | 0.0 | 9.0 | 0.0 |
| | 특수고용직 | 19.3 | 11.2 | 1.5 | 6.7 | 0.6 |
| | 비임금근로자 | 27.3 | 8.9 | 2.0 | 15.9 | 5.2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8.7 | 0.0 | 0.7 | 7.5 | 0.8 |
| | 전세 | 97.8 | 96.7 | 1.9 | 10.5 | 0.0 |
| | 월세 | 18.6 | 1.2 | 6.2 | 12.1 | 3.3 |
| 가구 소득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35.2 | 12.2 | 3.1 | 16.8 | 8.1 |
| | 중위소득 50~150% | 24.6 | 15.7 | 2.7 | 8.0 | 1.8 |
| | 중위소득 150% 이상 | 27.5 | 18.8 | 0.2 | 8.9 | 0.6 |
| 거주지역 | 서울 | 38.4 | 26.8 | 5.3 | 12.6 | 0.2 |
| | 수도권 | 22.4 | 14.1 | 1.7 | 7.1 | 0.4 |
| | 도시 | 22.4 | 13.9 | 0.8 | 8.2 | 2.4 |
| | 농어촌 | 22.8 | 6.4 | 2.0 | 7.4 | 10.3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건강 차원의 세부지표별로 취약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만성질환의 측면에서는 일반계 고졸이하, 실업자, 전세, 중위소득 50% 미만의 청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 측면에서는 일반계 고졸이하, 실업자, 특수고용직, 중위소득 50% 미만의 청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우울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 일반계 고졸이하, 가구주/배우자, 미혼, 특수고용직, 중위소득 50% 미만, 서울 거주 청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 측면에서는 일반계 고졸이하, 자녀/자녀의 배우자, 유배우, 실업자, 자가 거주자, 중위소득 50% 미만, 서울 및 도시 거주 청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표들에서 성별로 취약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과 달리 우울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일반계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중위소득 50% 미만의 청년은 건강 차원의 모든 세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전통적인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학력, 미취업, 빈곤 청년은 건강 측면에서도 취약한 특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건강 차원이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건강 | 건강차원 | | | |
|---------|---------------------|------|------|----------|------|-------|
| | | | 만성질환 | 주관적 건강상태 | 우울 | 의료비부담 |
| 전체 | | 22.2 | 10.3 | 3.1 | 5.4 | 8.5 |
| 성별 | 남성 | 20.0 | 10.2 | 3.3 | 2.9 | 9.1 |
| | 여성 | 24.7 | 10.5 | 3.0 | 8.2 | 7.9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실업계, 특성화고) | 16.2 | 7.8 | 1.3 | 5.4 | 6.3 |
| | 고졸이하 (일반계 등 기타) | 33.4 | 20.0 | 8.9 | 9.8 | 11.9 |
| | 대졸이상 | 22.4 | 9.4 | 2.7 | 4.5 | 8.7 |
| 가구 내 지위 | 1인가구 | 21.6 | 11.5 | 3.7 | 5.2 | 4.3 |
| | 가구주/배우자 | 20.9 | 9.2 | 1.7 | 7.8 | 5.2 |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22.6 | 10.7 | 3.9 | 4.3 | 10.7 |
| 혼인상태 | 유배우 | 27.5 | 11.8 | 0.6 | 2.2 | 13.0 |
| | 미혼 | 20.4 | 9.3 | 2.3 | 6.4 | 5.9 |
| | 기타 | 23.0 | 10.6 | 3.6 | 5.0 | 9.8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19.4 | 10.1 | 1.5 | 3.5 | 6.6 |
| | 임금근로자 | 18.4 | 9.4 | 1.5 | 5.1 | 5.7 |
| | 임시일용직 | 26.6 | 12.3 | 8.6 | 12.7 | 13.3 |
| | 특수고용직 | 19.6 | 5.4 | 0.5 | 6.1 | 8.1 |
| | 비임금근로자 | 25.9 | 11.2 | 5.4 | 7.1 | 12.1 |
| |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 47.9 | 18.6 | 15.1 | 9.9 | 16.9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23.1 | 9.9 | 2.8 | 4.4 | 10.0 |
| | 전세 | 20.3 | 12.8 | 3.0 | 4.2 | 5.1 |
| | 월세 | 22.0 | 8.8 | 4.9 | 9.2 | 8.0 |

| 구분 | | 건강 | 만성질환 | 주관적 건강상태 | 우울 | 의료비부담 |
|---------|--------------|------|------|----------|------|-------|
| | | | | | | |
| 가구 소득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47.1 | 22.6 | 12.3 | 11.4 | 26.5 |
| | 중위소득 50~150% | 23.9 | 10.7 | 3.1 | 5.9 | 9.2 |
| | 중위소득 150% 이상 | 10.3 | 5.9 | 0.9 | 2.1 | 1.6 |
| 거주지역 | 서울 | 21.8 | 11.1 | 3.7 | 6.1 | 10.0 |
| | 수도권 | 22.9 | 11.8 | 3.4 | 5.4 | 6.3 |
| | 도시 | 22.8 | 8.7 | 2.5 | 5.5 | 10.3 |
| | 농어촌 | 17.5 | 10.0 | 3.5 | 2.7 | 5.1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고용 차원의 세부지표별로 취약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실업 측면에서는 청년세대 내 뚜렷한 취약성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반계 고졸 이하, 1인 가구와 자녀/자녀의 배우자, 유배우와 기타 혼인상태,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월세, 중산층, 그리고 서울 거주 청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형태 측면에서는 전문계 고졸 이하, 자녀/자녀의 배우자, 유배우자,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중위소득 50% 미만, 농어촌 거주 청년의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것과 같이 실업 상태는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뚜렷한 변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의 질을 대표하는 근로지속가능성과 근로시간형태의 측면에서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 유배우자,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고용 차원이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고용 | 실업 | 근로지속가능성 | 근로시간형태 |
|----|----|------|-----|---------|--------|
| | | | | | |
| 전체 | | 24.6 | 3.6 | 20.4 | 6.3 |
| 성별 | 남성 | 25.5 | 3.5 | 21.8 | 5.9 |
| | 여성 | 23.6 | 3.9 | 18.8 | 6.7 |

102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 구분 | | 고용 | 근로지속가능성 | | |
|----------|---------------------|-------|---------|---------|--------|
| | | | 실업 | 근로지속가능성 | 근로시간형태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실업계, 특성화고) | 29.1 | 2.1 | 26.3 | 11.3 |
| | 고졸이하 (일반계 등 기타) | 34.6 | 4.3 | 30.1 | 6.5 |
| | 대졸이상 | 20.6 | 4.2 | 15.9 | 4.0 |
| 가구 내 지위 | 1인가구 | 29.0 | 4.8 | 23.1 | 2.8 |
| | 가구주/배우자 | 17.2 | 2.1 | 14.4 | 5.7 |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27.6 | 4.3 | 23.0 | 6.9 |
| 혼인상태 | 유배우 | 28.9 | 3.9 | 23.5 | 9.4 |
| | 미혼 | 17.5 | 2.2 | 14.6 | 5.7 |
| | 기타 | 28.1 | 4.4 | 23.2 | 6.6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2.2 | 0.0 | 1.9 | 0.3 |
| | 임금근로자 | | | | |
| | 임시임용직 | 90.9 | 0.0 | 89.6 | 26.7 |
| | 임금근로자 | 90.2 | 0.0 | 81.3 | 37.6 |
| | 특수고용직 | 0.0 | 0.0 | 0.0 | 0.0 |
| | 비임금근로자 | 0.0 | 0.0 | 0.0 | 0.0 |
| 비경제활동동인구 | 0.0 | 0.0 | 0.0 | 0.0 | |
| 실업자 | 100.0 | 100.0 | 0.0 | 0.0 |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22.3 | 3.1 | 18.7 | 6.4 |
| | 전세 | 23.2 | 2.8 | 19.6 | 7.6 |
| | 월세 | 31.2 | 5.4 | 25.1 | 5.2 |
| 가구 소득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23.2 | 3.2 | 18.5 | 10.8 |
| | 중위소득 50~150% | 28.2 | 4.5 | 23.2 | 6.8 |
| | 중위소득 150% 이상 | 13.8 | 1.0 | 12.2 | 3.5 |
| 거주지역 | 서울 | 26.6 | 2.7 | 23.5 | 5.0 |
| | 수도권 | 24.7 | 3.8 | 20.5 | 6.9 |
| | 도시 | 23.0 | 3.9 | 18.7 | 5.7 |
| | 농어촌 | 26.6 | 4.3 | 20.5 | 9.5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사회문화적 자본 차원의 세부지표별로 취약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사회적 친분관계 측면에서는 실업자와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측면에서는 가구주/배우자, 미혼, 실업자와 비임금 근로자, 월세, 중위소득 50% 미만, 서울 거주 청년이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비 지출 측면에서는 남성, 일반계 고졸 이하, 자녀/자녀의 배우자, 유배우,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월세, 중위소득 50% 미만, 농어촌 거주 청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하게 종합해보면, 건강(우울) 측면에서 성별 차이가 있었던 것과 같이, 문화비 지출 측면에서도 성별 차이가 드러났다. 문화비 지출 측면에서 남성의 취약성이 사회문화적 자본 전체 차원의 취약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자와 중위소득 50% 미만의 경우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취약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취약청년이 사회문화적 자본에 있어서도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사회문화적 자본 차원이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사회문화적 자본 | | | |
|---------|---------------------|----------|------|--------|------|
| | | 사회적 친분관계 | 여가 | 문화비 지출 | |
| 전체 | | 35.3 | 2.9 | 10.6 | 21.1 |
| 성별 | 남성 | 40.1 | 2.9 | 10.0 | 25.7 |
| | 여성 | 29.6 | 2.8 | 11.3 | 15.6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실업계, 특성화고) | 40.0 | 2.8 | 11.1 | 25.9 |
| | 고졸이하 (일반계 등 기타) | 55.8 | 7.6 | 14.9 | 33.0 |
| | 대졸이상 | 29.0 | 1.9 | 9.5 | 16.5 |
| 가구 내 지위 | 1인가구 | 19.6 | 2.8 | 10.9 | 7.2 |
| | 가구주/배우자 | 25.6 | 4.7 | 13.2 | 13.0 |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42.0 | 2.1 | 9.5 | 26.7 |
| 혼인상태 | 유배우 | 51.2 | 0.9 | 6.3 | 34.8 |
| | 미혼 | 26.9 | 3.9 | 12.9 | 13.4 |
| | 기타 | 38.7 | 2.5 | 9.4 | 24.2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27.9 | | 7.8 | 15.4 |
| | 임금근로자 | | | | |
| | 임시일용직 | 38.6 | 2.9 | 12.6 | 22.5 |
| | 임금근로자 | | | | |
| | 특수고용직 | 24.4 | 0.0 | 16.8 | 0.0 |
| | 비임금근로자 | 36.6 | 0.6 | 19.4 | 24.0 |
| 주거 점유형태 | 비경제활동인구 | 43.5 | 4.0 | 10.1 | 28.8 |
| | 실업자 | 45.1 | 7.3 | 20.0 | 28.7 |
| | 자가 | 36.7 | 1.7 | 9.4 | 22.8 |
| 가구 소득수준 | 전세 | 23.2 | 2.0 | 11.9 | 7.1 |
| | 월세 | 41.3 | 5.1 | 13.5 | 28.3 |
| | 중위소득 50% 미만 | 53.7 | 11.0 | 16.1 | 29.6 |
| 가구 소득수준 | 중위소득 50~150% | 36.3 | 2.8 | 10.6 | 23.3 |
| | 중위소득 150% 이상 | 27.4 | 0.9 | 9.3 | 12.0 |

| 구분 | | 사회문화적 자본 | 사회적 친분관계 | 여가 | 문화비 지출 |
|------|-----|----------|----------|------|--------|
| 거주지역 | 서울 | 34.2 | 3.7 | 15.3 | 12.0 |
| | 수도권 | 37.8 | 4.0 | 10.7 | 24.8 |
| | 도시 | 31.9 | 1.5 | 8.1 | 21.2 |
| | 농어촌 | 44.5 | 2.8 | 9.6 | 30.1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안정성 차원의 세부지표별로 취약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먼저, 공적연금 측면에서는 다른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관련성이 크지 않은데, 유독 특수고용직 청년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측면에서는 전문계 고졸 이하, 1인 가구, 유배우, 특수고용직, 농어촌 거주 청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박탈의 측면에서 보면, 남성, 일반계 고졸 이하, 자녀/자녀의 배우자, 유배우, 특수고용직, 월세 거주자, 중위소득 50% 미만의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하게 종합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 등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이지만, 아직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특수고용직의 경우는 여전히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과 물질적 박탈의 측면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확인된다. 성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물질적 박탈 수준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결과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력 차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취약한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7〉 안정성 차원이 빈곤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안정성 | 공적연금 | 고용보험 | 물질적 박탈 |
|----|----|------|------|------|--------|
| 전체 | | 15.4 | 1.0 | 11.6 | 4.4 |
| 성별 | 남성 | 16.9 | 0.8 | 12.0 | 5.8 |
| | 여성 | 13.6 | 1.3 | 11.0 | 2.6 |

| 구분 | | 안정성 | 공적연금 | | |
|---------|---------------------|------|------|------|--------|
| | | | 공적연금 | 고용보험 | 물질적 박탈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실업계, 특성화고) | 22.8 | 1.6 | 17.4 | 6.5 |
| | 고졸이하 (일반계 등 기타) | 22.0 | 0.3 | 12.3 | 12.5 |
| | 대졸이상 | 10.7 | 0.9 | 8.9 | 1.7 |
| 가구 내 지위 | 1인가구 | 19.5 | 2.2 | 16.5 | 1.9 |
| | 가구주/배우자 | 9.8 | 0.4 | 8.7 | 1.4 |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17.0 | 1.2 | 11.7 | 6.0 |
| 혼인상태 | 유배우 | 27.6 | 0.9 | 23.8 | 10.0 |
| | 미혼 | 9.9 | 0.4 | 8.9 | 1.3 |
| | 기타 | 17.7 | 1.2 | 12.6 | 5.8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4.8 | 0.0 | 2.8 | 2.0 |
| | 임금근로자 | 47.8 | 3.0 | 43.1 | 7.3 |
| | 임시일용직 | 86.4 | 11.9 | 86.4 | 11.2 |
| | 특수고용직 | 5.0 | 1.7 | 0.0 | 3.3 |
| | 비임금근로자 | 5.2 | 0.4 | 0.0 | 4.9 |
| |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 9.7 | 0.0 | 0.0 | 9.7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11.6 | 0.9 | 10.1 | 1.5 |
| | 전세 | 14.3 | 1.8 | 11.9 | 2.1 |
| | 월세 | 22.5 | 0.7 | 12.0 | 13.0 |
| 가구 소득수준 | 중위소득 50% 미만 | 28.6 | 0.0 | 11.5 | 20.8 |
| | 중위소득 50~150% | 17.1 | 1.2 | 13.6 | 3.8 |
| | 중위소득 150% 이상 | 6.4 | 0.6 | 5.2 | 1.7 |
| 거주지역 | 서울 | 18.1 | 0.7 | 12.9 | 6.9 |
| | 수도권 | 14.4 | 1.7 | 10.8 | 3.8 |
| | 도시 | 13.4 | 0.5 | 10.1 | 3.2 |
| | 농어촌 | 20.6 | 1.3 | 18.1 | 5.5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제2절 청년 다차원 빈곤의 심도와 취약집단

여기에서는 다차원 빈곤 접근을 활용하여 청년 다차원 빈곤 심도를 확인하고, 심도가 깊은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집단을 파악한다. 빈곤의 심도를 빈

곤한 차원의 수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수식을 활용해 우선 차원별 빈곤 여부를 판정한다. 차원을 구성하는 지표 중 하나라도 빈곤하면 해당 차원은 빈곤한 것으로 정의하여 1의 점수를 부여하고, 하나의 지표도 빈곤하지 않으면 비빈곤으로 정의하여 0의 점수를 부여한다.

$$(1) \quad P_d = \begin{cases} 1 & \text{if } MP_d > 0 \\ 0 & \text{if } MP_d = 0 \end{cases}$$

빈곤의 심도, 즉 빈곤한 차원의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식을 활용해 앞서 (1)의 수식을 통해 빈곤하다고 판정하여 1점을 부과한 6개 차원의 빈곤 판정 점수를 합산한다. 이에 따라 다차원 빈곤 심도, K는 최소 0부터 최대 6까지의 범위에서 정의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차원 빈곤의 심도가 깊어지는 것이다.

$$(2) \quad K = \sum_{d=1}^6 P_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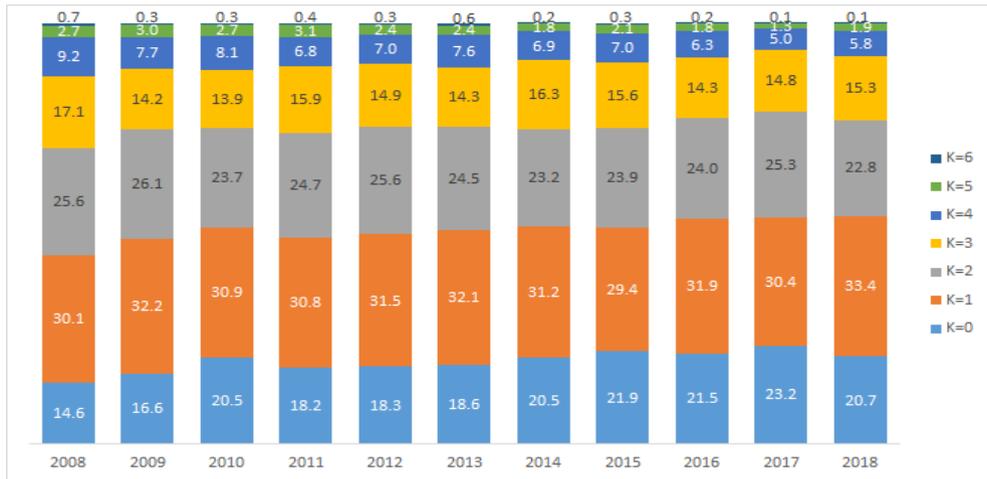
[그림 4-1]은 이상의 수식들로 정의한 2008~2018년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다차원 빈곤 심도는 개선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도별 변동을 보이지만 1개의 차원도 빈곤하지 않은 K값이 0인 청년의 비중이 2008년 14.6%에서 2018년 20.7%로 6.1%p 개선되었다. K값이 1인 청년의 비중은 2008년 30.1%에서 2018년 33.4%로 3.3%p 증가하였다. K값이 2인 청년의 비중은 2008년 25.6%에서 2018년 22.8%로 감소하여 2.8%p 감소하였고, K값이 3인 청년의 비중은 2008년 17.1%에서 2018년 15.3%로 1.8%p 감소하였다. 다차원 빈곤의 심도가 상대적으로 얕은, 즉, K값이 3 이하인 집단은 2008년 87.4%에서 92.2%로 4.8%p 감소하였다.

다차원 빈곤의 심도가 비교적 깊은, 즉, K값이 4 이상인 집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6개 모든 차원이 빈곤한 청년은 2008년 0.7%에서 2018년 0.1%로 점차 감소하였다. K값이 5인 청년의 비중은 2008년 2.7%에서 2018년 1.9%로 0.8%p 감소하였고, K값이 4인 청년의 비중은 2008년 9.2%에서 2018년 5.8%로 3.4%p 감소하였

다. 다차원 빈곤의 심도가 상대적으로 깊은, 즉 K값이 4 이상인 집단은 2008년 12.6%에서 7.8%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심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 연도별 청년 다차원 중첩빈곤 추이

(단위: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유효 표본 크기는 <부표 4-1>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2018년 현재 기준, K값이 4 이상인, 즉 다차원 빈곤의 심도가 깊은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 중 6.2%의 K값이 4 이상인 데에 비해, 남성은 9.2%이다. 19~24세 청년 중 7.3%, 30~34세 청년 중 8.0%의 K값이 4 이상인 데에 비해 25~29세 청년은 8.4%이다. 도시 거주 청년 중 5.6%, 수도권 청년 중 8.4%의 K값이 4 이상인 데에 비해, 서울 청년은 9.8%, 농어촌 청년은 10.6%이다. 대졸 이상 청년 중 4.1%의 K값이 4 이상인 데에 비해, 실업계 및 특성화고 졸업 청년은 10.9%, 일반계 등 기타 고등학교 졸업 청년은 19.1%에 달한다. 자가 거주 청년 중 3.1%의 K값이 4 이상인 데에 비해, 전세 거주 청년은 12.7%, 월세 거주 청년은 15.0%에 이른다.

(표 4-8) 2018년 다차원 중점빈곤 현황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K=0 | K=1 | K=2 | K=3 | K=4 | K=5 | K=6 |
|------------|-----------------|-------------|-------------|-------------|-------------|-------------|------------|------------|
| 전체 | | 20.7 | 33.4 | 22.8 | 15.3 | 5.8 | 1.9 | 0.1 |
| 성별 | 남성 | 19.2 | 34.1 | 22.5 | 15.1 | 7.0 | 2.1 | 0.1 |
| | 여성 | 22.6 | 32.7 | 23.1 | 15.5 | 4.5 | 1.7 | 0.0 |
| 연령대 | 19-24세 | 21.0 | 29.0 | 25.7 | 17.0 | 5.2 | 2.0 | 0.1 |
| | 25-29세 | 17.7 | 38.3 | 20.9 | 14.8 | 6.8 | 1.6 | 0.0 |
| | 30-34세 | 23.1 | 34.4 | 21.0 | 13.6 | 5.7 | 2.2 | 0.1 |
| 지역 | 서울 | 18.4 | 30.2 | 26.1 | 15.5 | 6.3 | 3.5 | 0.0 |
| | 수도권 | 19.6 | 39.6 | 17.8 | 14.7 | 6.9 | 1.5 | 0.0 |
| | 도시 | 23.2 | 31.5 | 24.4 | 15.3 | 4.4 | 1.0 | 0.2 |
| | 농어촌 | 19.7 | 27.3 | 25.5 | 16.9 | 7.1 | 3.5 | 0.0 |
| 교육수준 | 고졸이하(실업계, 특성화고) | 22.2 | 25.3 | 22.4 | 19.3 | 8.9 | 2.0 | 0.0 |
| | 고졸이하(일반계 등 기타) | 4.9 | 26.4 | 28.7 | 21.0 | 13.4 | 5.5 | 0.2 |
| | 대졸이상 | 23.4 | 38.4 | 21.7 | 12.4 | 2.9 | 1.1 | 0.1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32.3 | 36.0 | 18.8 | 9.8 | 2.5 | 0.6 | 0.0 |
| | 전세 | 0.9 | 34.3 | 31.3 | 20.8 | 9.6 | 3.1 | 0.0 |
| | 월세 | 8.2 | 26.1 | 27.4 | 23.3 | 10.5 | 4.4 | 0.1 |
| | 기타 | 9.4 | 32.7 | 19.3 | 24.4 | 10.7 | 2.4 | 1.0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임금근로자 | 28.5 | 42.6 | 20.3 | 6.8 | 1.6 | 0.1 | 0.0 |
|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 0.8 | 13.5 | 29.5 | 32.9 | 16.1 | 6.9 | 0.4 |
| | 특수고용직 | 0.0 | 8.6 | 26.0 | 41.6 | 23.8 | 0.0 | 0.0 |
| | 비임금근로자 | 27.9 | 46.8 | 18.5 | 3.6 | 0.5 | 2.6 | 0.0 |
| | 비경제활동인구 | 26.3 | 35.7 | 22.3 | 12.2 | 2.5 | 1.0 | 0.0 |
| | 실업자 | 0.0 | 14.5 | 21.9 | 40.7 | 20.9 | 2.0 | 0.0 |
| 가구 내 지위 | 1인가구 | 4.9 | 36.1 | 24.1 | 24.3 | 9.7 | 1.0 | 0.0 |
| | 가구주/배우자 | 26.8 | 34.1 | 21.1 | 12.0 | 4.9 | 1.1 | 0.0 |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20.8 | 32.9 | 23.1 | 15.3 | 5.5 | 2.3 | 0.0 |
| | 기타 | 4.2 | 28.2 | 28.3 | 22.2 | 10.1 | 5.0 | 2.0 |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0.0 | 14.3 | 22.3 | 35.0 | 19.1 | 8.4 | 0.9 |
| | 중위소득 50~150% | 17.2 | 31.9 | 25.3 | 17.7 | 6.1 | 1.8 | 0.0 |
| | 중위소득 150% 이상 | 37.1 | 43.2 | 15.0 | 2.5 | 1.5 | 0.6 | 0.0 |

주: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볼드체는 전체보다 높은 경우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상용직 임금근로자 중 1.7%, 비임금 근로자 중 3.1%, 비경제활동인구 중 3.5%의 K값이 4 이상인 데에 비해, 실업자는 22.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는 23.4%,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23.8%에 이른다. 가구 내 지위가 가구주 내 배우자인 청년 중 6%,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인 청년 중 7.8%의 K값이 4 이상인 데에 비해, 1인 가구 청년은 10.7% 수준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상인 청년 중 2.1%, 중위소득 50~150%인 청년 중 7.9%의 K값이 4 이상인 데에 비해,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 청년은 28.4%에 달한다.

종합하면, 남성, 서울 및 수도권 거주, 고졸 이하, 전세 및 월세 거주,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1인 가구 및 저소득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심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과 취약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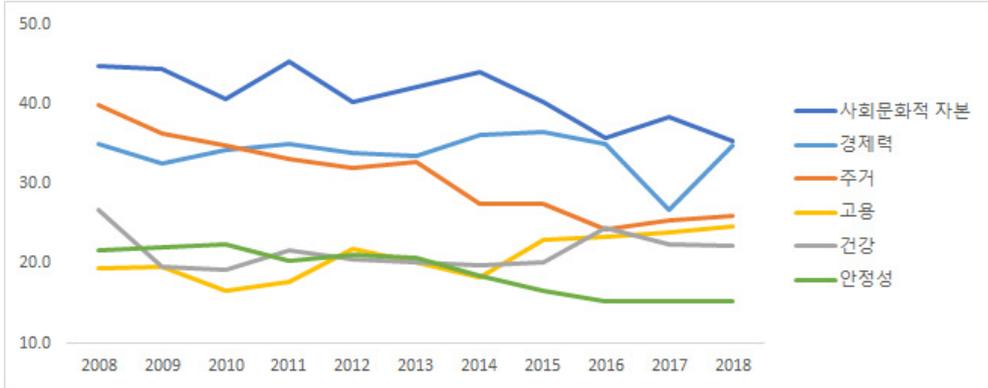
여기에서는 다양한 지표의 결합을 고려하여 숨어 있는 집단을 분류하는 통계분석기법인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를 활용하여(이현주, 정은희, 2014; 김세진, 2019) 다차원 빈곤 접근에서 고려하는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의 6가지 차원이 청년 세대에서 결합하는 잠재집단으로서의 청년 취약집단을 발견하고자 한다.

1. 차원 간 상관관계 분석

잠재집단분석을 수행하기 전 기초분석으로서 연도별 차원별 청년의 빈곤 추이를 확인한다. 즉, 1절의 (1)번 수식에 의해 각 차원이 빈곤한 청년의 비중이다. 사회문화적 자본, 주거, 안정성, 건강의 차원의 빈곤율이 지난 10년간 등락을 보이면서 점차 완화되어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력은 2017년 일시적인 완화를 제외하고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빈곤율이 증가한 차원은 고용인데, 2008년 19.4%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2015년 23.3%로 증가한 이후 2018년 24.6%에 이른다.

[그림 4-2] 연도별 차원별 청년 빈곤 추이

(단위: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4-2> 참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6가지 빈곤 차원의 통계적 상관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다차원 빈곤 관점에서 빈곤한 청년의 취약한 결합 양식을 분석하여 빈곤 유형을 식별할 수 있다. 특히 빈곤 유형을 주도하는 핵심 차원을 발굴하여 정책 개입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 <표 4-9>는 2008~2018년 간 다차원 빈곤 분석틀을 구성하는 6개 차원 빈곤 간 상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관계수 숫자가 클수록 관련된 두 개 차원의 상관관계가 높고, 별이 많을수록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다. 상관계수 크기를 기준으로 보면, 고용과 안정성의 상관관계가 0.4659로 가장 크다. 즉, 고용 차원이 빈곤하면 안정성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높다. 통계적 유의성을 중심으로 보면, 모든 영역이 서로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표 4-9> 2008-2018년 청년 차원 간 상관계수

(단위: %)

| 구분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
| 주거 | 0.1675 *** | 1 | | | |
| 건강 | 0.1337 *** | 0.0262 *** | 1 | | |
| 고용 | 0.0910 *** | 0.0139 * | 0.0297 *** | 1 | |
| 사회문화적 자본 | 0.1563 *** | 0.0328 *** | 0.1119 *** | 0.0138 * | 1 |
| 안정성 | 0.2317 *** | 0.0767 *** | 0.0413 *** | 0.4659 *** | 0.0944 ***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표 4-10〉은 2008년 6개 차원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관계수를 중심으로 상관성이 가장 높은 차원은 고용 빈곤과 안정성 빈곤이다(0.4093***). 상대적으로 고용 빈곤과 주거 빈곤, 사회문화적 자본 빈곤의 상관성, 그리고 주거 빈곤과 사회문화적 자본 빈곤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0〉 2008년 청년 차원 간 상관계수

(단위: %)

| 구분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
| 주거 | 0.1924 *** | 1 | | | |
| 건강 | 0.1849 *** | 0.0635 *** | 1 | | |
| 고용 | 0.0445 * | 0.0191 | 0.0427 * | 1 | |
| 사회문화적 자본 | 0.1591 *** | 0.0147 | 0.1138 *** | 0.0035 | 1 |
| 안정성 | 0.2495 *** | 0.0740 *** | 0.0798 *** | 0.4093 *** | 0.0746 ***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0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0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표 4-11〉은 최근 시점인 2018년 6개 차원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 빈곤과 안정성 빈곤의 상관계수가 0.5052으로 강화되었다. 경제력 빈곤과 다른 모든 차원과의 상관관계는 계수의 크기와 함께 2008년에 비해 작지만 모든 영역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이 강화되었다. 반면, 건강 빈곤과 주거 빈곤, 고용 빈곤, 안정성 빈곤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표 4-11〉 2018년 청년 차원 간 상관계수

(단위: %)

| 구분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
| 주거 | 0.1185 *** | 1 | | | |
| 건강 | 0.1330 *** | -0.0134 | 1 | | |
| 고용 | 0.0890 *** | 0.0511 * | 0.0039 | 1 | |
| 사회문화적 자본 | 0.0984 *** | -0.0585 * | 0.1096 *** | 0.0383 | 1 |
| 안정성 | 0.1841 *** | 0.0697 ** | 0.0038 | 0.5052 *** | 0.089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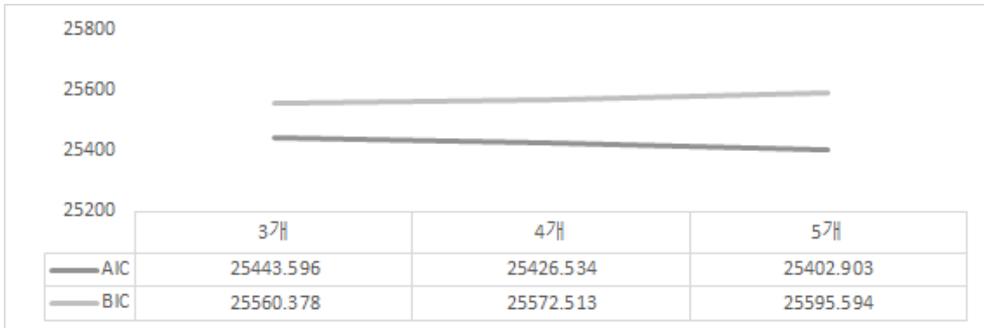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2. 200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잠재집단분석은 관찰할 수 있는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재하지 않는 잠재집단을 식별하는 기법이다(이현주, 정은희, 2014, p.8).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해 특정 유형의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을 발견하고 빈곤의 양상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반영하는 집단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보다 집단의 개수를 과소 설정하거나 과대 설정하면 분석 결과가 잠재집단의 특성을 왜곡하게 된다.

[그림 4-3]은 잠재집단분석으로 발견하는 잠재집단의 개수를 결정하는 기준 지표인 AIC와 BIC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자료를 통해 발굴하는 잠재집단의 적정 수에 이르면 AIC값과 BIC값이 증가한다. 즉, 두 개 지표 중 어느 하나라도 증가하기 직전 지점이 적정 잠재집단 개수이다. 아래 그림에서 BIC값이 잠재집단 3개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2008년 분석자료를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적정 수는 3개이다.

[그림 4-3] 2008년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잠재집단모형 적합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잠재집단분석은 관측할 수 있는 요인, 즉 6개 차원이 빈곤할 확률을 계산하여 그 패턴이 유사한 집단을 분류한다. 2008년 청년 다차원 빈곤의 잠재집단을 구분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첫 번째 집단은 6개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으므로 저빈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69.1%인데, 2008년 전체 청년 중 64.4%가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 집단은 경제력이 빈곤할 확률이 100%인 경제력빈곤 집단이다. 이 집단의 경우, 주거가 빈곤할 확률은 57.5%이고, 사회문화적 자본이 빈곤할 확률은 56.8%, 건

강이 빈곤할 확률은 41.7%로 비교적 높다. 즉, 경제력이 빈곤한 청년은 주거와 사회문화적 자본, 건강이 함께 빈곤할 확률이 높다.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20.0%인데, 2008년 현재 전체 청년 중 25.6%가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마지막 집단은 고용이 빈곤할 확률이 78.7%로 높고, 안정이 빈곤할 확률은 100%인 고용·안정성빈곤 집단이다. 즉, 고용이 빈곤하면 안정성이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10.9%인데, 2008년 현재 전체 청년의 10.0%가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표 4-12〉 200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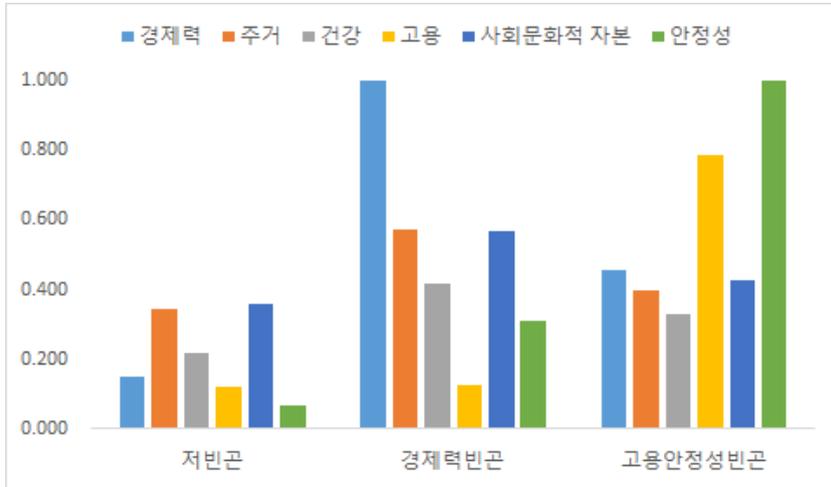
| 구분 | | 저빈곤 | 경제력빈곤 | 고용안정성빈곤 |
|-------------------|----------|--------------|--------------|--------------|
| 영역 확률 (×100=%) | 경제력 | 0.149 | 1.000 | 0.457 |
| | 주거 | 0.344 | 0.575 | 0.396 |
| | 건강 | 0.218 | 0.417 | 0.332 |
| | 고용 | 0.119 | 0.128 | 0.787 |
| | 사회문화적 자본 | 0.359 | 0.568 | 0.429 |
| | 안정성 | 0.066 | 0.309 | 1.000 |
| 집단 확률 (×100=%) | | 0.691 | 0.200 | 0.109 |
| 집단 분포 (%) | | 64.4 | 25.6 | 10.0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0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 [그림 4-4]는 2008년 기준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별 개별 차원이 빈곤할 확률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높이가 높을수록 빈곤할 확률이 높다. 저빈곤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개별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경제력빈곤 집단은 경제력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우세하고, 고용·안정성빈곤 집단은 고용 차원과 안정성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우세하다.

[그림 4-4] 200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의 차원 빈곤 확률

(단위: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0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잠재집단분석 기법으로 분류한 2008년 빈곤 잠재집단별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력빈곤 집단을 보면 남성의 24.4%가 이 집단에 해당하는 데에 비해, 여성은 26.6%가 이 집단으로 분류된다. 19-24세 청년의 25.7%가 이 집단에 해당하지만 25-29세 청년의 25.5%, 30-34세 청년의 25.6% 또한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청년의 33.7%, 도시 청년의 27.4%, 수도권 청년의 26.6%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서울 거주 청년의 19.2%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는 데에 비해 비중이 높다. 교육수준별로 일반계 등 기타 고등학교 졸업 청년의 34.6%, 실업계 및 특성화고 졸업 청년의 30.0%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대졸 이상 청년 19.1%에 비해 비중이 높다.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 월세 거주 청년의 53.9%, 전세 거주 청년의 29.2%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자가 거주 청년 11.0%에 비해 비중이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비경제활동 청년의 34.0%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다른 유형의 청년에 비해 비중이 높다. 가구 내 지위에 따라 1인 가구 청년의 38.8%, 가구주 혹은 배우자인 청년의 30.0%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인 청년 20.6%에 비해 비중이 높다. 가구소득별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 청년 69.7%, 중위소득 50~150% 수준인 중간층 청년 29.8%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는 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 고소득층 청년은 3.4%에 그친다.

〈표 4-13〉 200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저빈곤 | 경제력빈곤 | 고용안정성빈곤 | 전체 |
|------------|-----------------|-------------|-------------|-------------|-------|
| 전체 | | 64.4 | 25.6 | 10.0 | 100.0 |
| 성별 | 남성 | 66.9 | 24.4 | 8.7 | 100.0 |
| | 여성 | 62.2 | 26.6 | 11.2 | 100.0 |
| 연령대 | 19~24세 | 59.7 | 25.7 | 14.7 | 100.0 |
| | 25~29세 | 65.9 | 25.5 | 8.6 | 100.0 |
| | 30~34세 | 67.2 | 25.6 | 7.2 | 100.0 |
| 지역 | 서울 | 70.7 | 19.2 | 10.1 | 100.0 |
| | 수도권 | 62.4 | 26.6 | 11.0 | 100.0 |
| | 도시 | 62.7 | 27.4 | 9.9 | 100.0 |
| | 농어촌 | 60.2 | 33.7 | 6.1 | 100.0 |
| 교육수준 | 고졸이하(실업계, 특성화고) | 57.3 | 30.0 | 12.8 | 100.0 |
| | 고졸이하(일반계 등 기타) | 51.2 | 34.6 | 14.3 | 100.0 |
| | 대졸이상 | 74.6 | 19.1 | 6.4 | 100.0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80.4 | 11.0 | 8.6 | 100.0 |
| | 전세 | 62.6 | 29.2 | 8.3 | 100.0 |
| | 월세 | 26.9 | 53.9 | 19.2 | 100.0 |
| | 기타 | 39.2 | 55.3 | 5.5 | 100.0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임금근로자 | 76.1 | 23.7 | 0.2 | 100.0 |
|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 36.9 | 17.2 | 45.9 | 100.0 |
| | 특수고용직 | 26.7 | 19.0 | 54.3 | 100.0 |
| | 비임금근로자 | 79.4 | 20.6 | 0.0 | 100.0 |
| | 비경제활동인구 | 66.0 | 34.0 | 0.0 | 100.0 |
| | 실업자 | 67.3 | 16.8 | 15.9 | 100.0 |
| 가구 내 지위 | 1인가구 | 49.2 | 38.8 | 12.0 | 100.0 |
| | 가구주/배우자 | 63.4 | 30.0 | 6.6 | 100.0 |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67.5 | 20.6 | 11.9 | 100.0 |
| | 기타 | 53.0 | 35.3 | 11.7 | 100.0 |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11.9 | 69.7 | 18.4 | 100.0 |
| | 중위소득 50~150% | 59.3 | 29.8 | 10.9 | 100.0 |
| | 중위소득 150% 이상 | 91.0 | 3.4 | 5.6 | 100.0 |

주: 200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볼드체는 전체보다 높은 경우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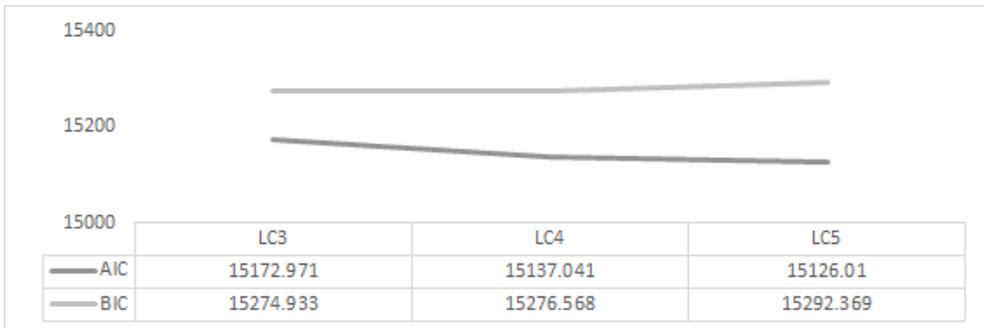
고용·안정성빈곤 집단을 보면, 여성의 11.2%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남성 8.7%에 비해 비중이 높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청년 14.7%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는 반면, 25-29세 청년은 8.6%, 30-34세 청년은 7.2%가 이 집단으로 확인된다. 거주지역에 따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중 11.0%,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0.1%,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 9.9%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은 6.1% 정도에 비

해 비중이 높다. 교육수준별로 일반계 등 기타 고등학교 졸업 청년의 14.3%, 실업계 및 특성화고 졸업 청년의 12.8%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대졸 이상 청년 6.4%에 비해 비중이 높다.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 월세 거주 청년의 19.2%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자가 거주 청년 8.6%, 전세 거주 청년의 8.3%에 비해 비중이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54.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의 45.9%, 실업자의 15.9%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다른 유형의 청년에 비해 비중이 현저히 높다. 가구 내 지위별로 1인 가구인 청년의 12.0%,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인 청년의 11.9%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가구주 혹은 배우자인 청년 6.6%에 비해 비중이 높다. 가구소득별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 청년 18.4%, 중위소득 50~150% 수준인 중간층 청년 10.9%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는 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 고소득층 청년은 5.6%에 그친다.

3.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림 4-5]는 2018년 분석자료를 활용해 식별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적정 개수를 결정하기 위한 AIC와 BIC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BIC값이 잠재집단 3개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2008년과 동일하게 2018년 분석자료를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적정 수는 3개이다.

[그림 4-5] 2018년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잠재집단모형 적합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의 잠재집단을 구분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6개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으므로 저빈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52.5%인데, 2018년 전체 청년 중 62.3%가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 집단은 건강이 빈곤할 확률이 64.5%로 상대적으로 높아 건강빈곤으로 분류하였다.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25.2%인데, 2018년 현재 전체 청년 중 17.8%가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마지막 집단은 고용이 빈곤할 확률이 71.5%, 안정성이 빈곤할 확률이 69.0%, 경제력이 빈곤할 확률이 57.0로 높아 복합빈곤으로 분류하였다. 이 집단의 경우 사회문화적 자본이 빈곤할 확률이 39.2%, 주거가 빈곤할 확률 또한 33.3%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 집단에 속할 경우, 건강 차원을 제외한 모든 차원이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 한 청년이 이 집단에 배정될 확률은 22.4%인데, 2018년 현재 전체 청년의 19.9%가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표 4-14〉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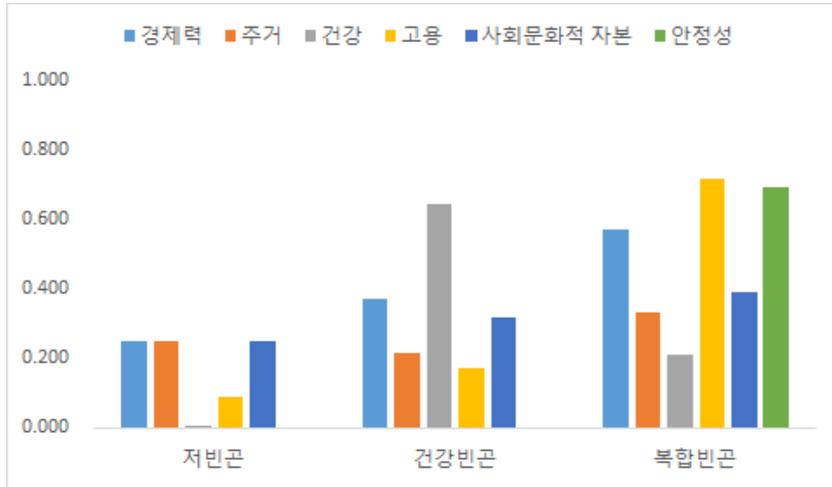
| 구분 | | 저빈곤 | 건강빈곤 | 복합빈곤 |
|-------------------|----------|--------------|--------------|--------------|
| 영역 확률 (×100=%) | 경제력 | 0.249 | 0.369 | 0.570 |
| | 주거 | 0.249 | 0.215 | 0.333 |
| | 건강 | 0.005 | 0.645 | 0.211 |
| | 고용 | 0.087 | 0.169 | 0.715 |
| | 사회문화적 자본 | 0.250 | 0.318 | 0.392 |
| | 안정성 | 0.000 | 0.000 | 0.690 |
| 집단 확률 (×100=%) | | 0.525 | 0.252 | 0.224 |
| 집단 분포 (%) | | 62.3 | 17.8 | 19.9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 [그림 4-6]은 2018년 기준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별 개별 차원이 빈곤할 확률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높이가 높을수록 빈곤할 확률이 높다. 저빈곤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개별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건강빈곤 집단은 건강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우세하고, 복합빈곤 집단은 고용 차원과 안정성 차원, 경제력 차원이 빈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모두 우세하다.

[그림 4-6]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의 차원 빈곤 확률

(단위: %)



주: 기준년도 기준임.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2018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잠재집단분석 기법으로 분류한 2018년 빈곤 잠재집단별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빈곤 집단을 보면 여성의 20.6%가 이 집단에 해당하는 데에 비해, 남성은 15.4%가 이 집단으로 분류된다. 30-34세 청년의 21.4%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19-24세 청년 15.4%, 30-34세 청년 16.9%에 비해 비중이 높다. 지역별로는 도시 청년의 19.8%, 수도권 청년의 17.2%, 서울 청년의 16.8%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농어촌 거주 청년의 13.1%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는 데에 비해 비중이 높다. 교육수준별로 대졸 청년의 20.1%, 일반계 및 기타 고등학교 졸업 청년의 16.9%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실업계 및 특성화고 졸업 청년 11.6%에 비해 비중이 높다.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 자가 거주 청년의 19.2%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월세 거주 청년 16.4%, 전세 거주 청년 16.3%에 비해 다소 비중이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실업 청년의 46.6%, 비경제활동 청년의 21.2%, 상용직 임금근로자 17.8%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다른 유형의 청년에 비해 비중이 비교적 높다. 1인 가구 및 가구주 혹은 배우자 청년이 각각 18.8%,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인 청년 17.3%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가구 내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가구소득별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 청년 28.2%, 중위소득 50~150% 수준인 중간층 청년 19.8%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는 반

면, 중위소득 150% 이상 고소득층 청년은 9.2%에 그친다.

〈표 4-15〉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저빈곤 | 건강빈곤 | 복합빈곤 | 전체 |
|---------|-----------------|-------------|-------------|-------------|-------|
| 전체 | | 62.3 | 17.8 | 19.9 | 100.0 |
| 성별 | 남성 | 63.3 | 15.4 | 21.4 | 100.0 |
| | 여성 | 61.2 | 20.6 | 18.2 | 100.0 |
| 연령대 | 19~24세 | 62.5 | 15.4 | 22.1 | 100.0 |
| | 25~29세 | 62.2 | 16.9 | 20.9 | 100.0 |
| | 30~34세 | 62.1 | 21.4 | 16.5 | 100.0 |
| 지역 | 서울 | 59.6 | 16.8 | 23.6 | 100.0 |
| | 수도권 | 64.3 | 17.2 | 18.5 | 100.0 |
| | 도시 | 62.3 | 19.8 | 17.9 | 100.0 |
| | 농어촌 | 61.8 | 13.1 | 25.2 | 100.0 |
| 교육수준 | 고졸이하(실업계, 특성화고) | 60.4 | 11.6 | 28.0 | 100.0 |
| | 고졸이하(일반계 등 기타) | 47.3 | 19.6 | 33.1 | 100.0 |
| | 대졸이상 | 65.7 | 20.1 | 14.1 | 100.0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68.0 | 19.2 | 12.8 | 100.0 |
| | 전세 | 64.8 | 16.3 | 18.9 | 100.0 |
| | 월세 | 48.3 | 16.4 | 35.3 | 100.0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임금근로자 | 77.2 | 17.8 | 5.0 | 100.0 |
|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 25.6 | 9.9 | 64.5 | 100.0 |
| | 특수고용직 | 4.6 | 10.0 | 85.3 | 100.0 |
| | 비임금근로자 | 80.6 | 14.2 | 5.2 | 100.0 |
| | 비경제활동인구 | 73.4 | 21.2 | 5.4 | 100.0 |
| | 실업자 | 16.3 | 46.6 | 37.2 | 100.0 |
| 가구 내 지위 | 1인가구 | 51.8 | 18.5 | 29.7 | 100.0 |
| | 가구주/배우자 | 68.4 | 18.5 | 13.1 | 100.0 |
| | 자녀/자녀의 배우자 | 61.3 | 17.3 | 21.5 | 100.0 |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32.9 | 28.2 | 39.0 | 100.0 |
| | 중위소득 50~150% | 57.4 | 19.8 | 22.8 | 100.0 |
| | 중위소득 150% 이상 | 84.7 | 9.2 | 6.2 | 100.0 |

주: 2018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볼드체는 전체보다 높은 경우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복합빈곤 집단을 보면, 남성의 21.4%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여성 18.2%에 비해 다소 비중이 높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 청년 22.1%, 25~29세 청년 20.9%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30~34세 청년 16.5%에 비해 다소 비중이 높다. 거주지역에 따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 중 25.2%,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중 23.6%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18.5%,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 17.9% 비해 다소 비중이 높다. 교육수준별로 일반계 등 기타 고등학교 졸업 청년의 33.1%, 실업계 및 특성화고

졸업 청년의 28.0%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대졸 이상 청년 14.1%에 비해 비중이 높다.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 월세 거주 청년의 35.3%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자가 거주 청년 12.8%, 전세 거주 청년의 18.9%에 비해 비중이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85.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의 64.5%, 실업자의 37.2%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다른 유형의 청년에 비해 비중이 현저히 높다. 가구 내 지위별로 1인 가구인 청년의 29.7%,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인 청년의 21.5%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어 가구주 혹은 배우자인 청년 13.1%에 비해 비중이 높다. 가구소득별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 청년 39.0%, 중위소득 50~150% 수준인 중간층 청년 22.8%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는 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 고소득층 청년은 6.2%에 그친다.

제4절 소결

2008년 대비 2018년 청년의 전반적인 다차원 빈곤의 심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지만 고용 차원의 빈곤율은 2008년 19.4%에서 2018년 24.6%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 기준 빈곤의 심도가 깊은 청년 집단(빈곤한 차원의 개수가 4 이상)에는 상대적으로 남성, 서울 및 수도권 거주, 고졸 이하, 전세 및 월세 거주,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1인 가구 및 저소득 청년이 다수 분포해 있다.

2008년 청년의 빈곤 양상을 반영한 잠재집단분석 결과, 저빈곤(64.4%), 경제력 빈곤(25.6%), 고용·안정성 빈곤(10.0%)의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제력 빈곤 집단에는 여성, 19-24세, 수도권·도시·농어촌 거주, 고졸 이하, 전세 및 월세 거주, 비경제활동인구, 1인 가구 및 가구주·배우자, 저소득층이 다수 분포해 있다. 고용·안정성 빈곤에는 여성, 19-24세, 수도권 거주, 고졸 이하, 월세 거주,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저소득층이 다수 분포해 있다.

2018년 청년의 빈곤 양상을 반영한 잠재집단분석 결과, 저빈곤(62.3%), 건강 빈곤(17.8%), 복합 빈곤(19.9%)의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강 빈곤 집단에는 여성, 30-34세, 도시 거주, 대졸 이상, 자가 거주,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1인 가구 및 가구주·배우자, 저소득층이 다수 분포해 있다. 복합 빈곤 집단에는 남성, 19-24세 및 25-29세, 수도권·농어촌 거주, 고졸 이하, 월세 거주,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실업자, 1인 가구 및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그리고 저소득층이 다수 분포해 있다.

다차원 빈곤 접근을 활용하여 청년이 경험하는 빈곤 양상의 변화와 잠재집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함의는 이러하다. 첫째, 빈곤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경제력 혹은 고용 중심의 빈곤에서 건강이 빈곤하거나 복합적으로 빈곤한 집단으로 빈곤 유형이 달라진다. 따라서 2008년에는 정책 대상 청년에게 특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던 반면, 2018년에는 복합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저빈곤 집단을 제외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을 구성하는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변화하였다. 2008년 경제력 빈곤 집단과 고용·안정성 빈곤 집단을 구성하는 청년의 특성이 종사상 지위(와 가구 내 지위)를 제외하고 유사하였으므로, 청년 정책 대상 집단을 표적화하는 데에 있어 종사상 지위를 주로 고려할 수 있었다. 2018년에는 건강 빈곤 집단과 복합 빈곤 집단을 구성하는 청년의 특성이 상이하여 정책 대상 집단을 차별하여 표적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정책대응 검토 및 정책제언

제1절 경제력

제2절 주거

제3절 건강

제4절 고용

제5절 사회문화적 자본

제6절 안정성

제 5 장

정책대응 검토 및 정책제언

제1절 경제력

1. 현황

다차원 빈곤 영역 중 경제력을 구성하는 지표는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과 순자산 기준 빈곤율이다. 소득과 자산의 빈곤율은 측정에 있어서 청년 개인 또는 청년가구주 가구를 떼어서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청년이 속한 가구에 귀속되는 소득과 자산으로 측정이 된다. 따라서 부모 혹은 부양자와 같이 동거하는 청년의 경우는 자신의 소득이 과대평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청년의 경우는 그 소득이 과소평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의 측면에서 경제력의 취약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제력 영역의 취약한 청년집단의 경우는 부모와 동거 가구원과 공유하는 경제적 자원 자체의 결핍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들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계 고졸 이하, 1인 가구, 미혼,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전세 거주자, 비수도권 도시 및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의 소득빈곤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생애주기상 일시적으로 소득부족이 일어나는 시기, 즉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소득원을 확보하는 시기까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보다는 일자리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소득 가구에 속한 청년으로서 아동, 청소년기를 빈곤한 상태로 지내온 청년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소득지원 방식과 더불어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정책대상으로 상정하고 접근하고자 한다.

빈곤청년의 빈곤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부모의 빈곤이 존재한다. 즉, 빈곤의 대물림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초보장 장기수급자(4년 이상 수급) 청년의

70.2%가 아동, 청소년기 생활보호제도 수급 경험이 있다는 통계(김태완 외, 2019)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청년층 탈수급 유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은 나름의 성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제한된 선정기준과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까다로운 지급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짧은 적립기간에 따라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립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저임금 구조, 그리고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체계에서 작동했던 숙련형성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의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기 힘든 오늘날 상황에서 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산형성과 관련하여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주식투자 열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주식에 몰리는 이유는 사회이동성 저하로 인한 계층의 고착화 상황에서 투자를 발판으로 계층 상승을 시도하려는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점점 더 '가성비 낮은 선택'이 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세대가 취업 후 가파른 임금상승과 높은 이자율에서 나오는 구매력을 바탕으로 조금의 대출(레버리지)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했었다면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이와 같은 궤적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부재한 상황이다.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월급과 저축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낮은 임금상승률에 대비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는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가 주식투자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⁵⁾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이 주식시장이 공정하다고 믿는 것 또한 주식시장에 몰리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누구나 돈만 있으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고, 위험 부담도 투자자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을 공정한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주식투자 관련 정보제공자가 많아지면서 어렵지 않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점도 작용을 한다. 그러나 주식으로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상 주식시장의 성과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이고, 부모의 인적·물적·관계 자본이 성공의 지렛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식투자

5) 박광연·최미래(2020.10.6.). [창간기획-2030 자랑스레 보고서] ①5%만 성공한다 해도...노동보다 투자가 "가성비 높다". 경향신문.

를 공정한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형성사업과 금융 문해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제언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과 이를 기반으로 생애 재무설계 능력, 위험자산 투자나 고금리 대출에 쉽게 유혹되지 않도록 금융 문해력을 지원하는 강력한 서비스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주요 현황 및 배경

-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와 40~50%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위가 협소하고,
- 적립 기간이 3년으로 제한적이고, 지급요건이 3개월 이내 탈수급 또는 공인자격증 취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빈곤 대물림 차단 또는 자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

□ 지원대상

- 저소득 청년(기준 중위소득 기준 100%까지 확대)

□ 지원내용

- 청년저축계좌사업 대상 확대(현행 최대 기준중위소득 50%에서 100%까지 단계적 확대), 적립기간 확대(현행 최대 3년에서 확대),
- 청년 금융 문해력 교육을 위한 강력한 서비스 지원 부가(가입 당시, 가입 중, 만기 후 단계별 개입)

□ 전달체계

- 현행 저축계좌 사업 전달체계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하되, 조직과 인원 확대, 종사자 전문성 강화가 전제될 필요

제2절 주거

1. 현황

청년을 위한 현행 주거정책은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방향으로 하여 다수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청년 주거정책군은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 주거수당,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등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현금급여 중심의 제도로 범주화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책군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목적으로 일자리 연계형, 역세권 리모델링, 기숙사형 등 공공주택 확충 등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 청년으로서 보호종료아동에 주목하여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다차원 빈곤 접근을 통해 주거 차원이 열악한 청년은 1인 가구, 서울 거주,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청년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대졸 이상 청년은 주거비 부담이 높다.

이행기 청년은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특정 지역에 정착하여 자립하기 위해 학업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거주지 이동이 유연할 수 있다. 정세정 등(2020, p.234)은 독립한 청년 중 학교나 학원과의 거리 또는 직장과의 거리가 독립의 이유 중 다수를 차지한다는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양질의 주거환경과 주거안정성과 함께 이동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가가 아닌 경우 계약을 통해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거안정성이 보장되는 기간은 2년이다. 2년 동안 주택 임대차 계약에 의해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청년 주거정책은 청년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과 이행기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습과 취업 기회가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이동성이 확보된 양질의 주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를 포함해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은 지불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으로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책 제언

현행 청년 대상 주거정책이 주거비 부담 경감 정책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행기 청년의 이동성을 확보하면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 박스와 같다.

□ 주요 현황 및 배경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 중 고시원·고시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거나 지하·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존재
-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을 준비하는 이행기 청년은 주거안정성과 함께 이동 유동성이 동시에 요구됨.
 - 자가가 아닌 경우, 계약을 통해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장되는 기간은 2년
- 고시원·고시텔은 단기 임대가 가능하고 통근·통합에 유리하며 주거비가 저렴하지만 설비 및 시설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함.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다수의 주거 지원은 신혼부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결혼을 결정하지 않은 청년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임.
- 또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거주지역을 이동하는 경우, 지역에 따른 청년의 주거 욕구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보호종료아동, 저소득 청년 등을 포함한 안정적인 양질의 주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자격 다양화

□ 지원내용

- 지역의 주택 공급 여건을 고려하여 일자리 연계형 주택, 역세권 리모델링 주택, 지역 청년 사회주택, 주택연금 빈 집, 공공기숙사 등 공공주택의 원천 다양화
- 공공주택 이용 시 월 단위 단기 입주 가능하도록 설계
 - 주택 단위가 아닌 공공 쉼어하우스 등 공간 단위 임대 고려 가능

제3절 건강

1. 현황

현행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의 신체 건강보다는 정신 건강에 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청년 정신 건강 가운데서도 ‘관계’의 영역에서 주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복지패널의 우울 척도를 묻는 복수의 항목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다른 세대보다 수치가 부정적인 부분은 대인 관계 부분.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 건강을 위한 전달체계는 대부분 분절적이며, 이에 대한 정보 역시 청년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들이 정서적인 불안정 상황에 있을 때, 이들이 다가갈 수 있는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가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청년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심각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살 문제가 주로 노인 자살 문제에 맞춰져온 점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자살 취약계층으로서 20대, 특히 20대 여성에 대해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앞서 평가에 근거해서 청년 건강 정책의 방향을 조금은 근본적인 입장에서 언급하자면, 1) 장기적으로는 청년의 주거, 일자리,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이 청년 건강 개선의 전제가 될 것이다. 2) 청년 정신 건강의 문제는 다른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3) 다만, 급증하고 있는 청년 자살률, 특히 여성 청년 자살률의 문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 혹은 정신과 치료의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손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다.

2. 정책 제언

□ 주요 현황 및 배경

- 여성 청년들의 자살율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임 (보건복지부, 2020).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인구가 2020년 상반기에 207명 → 올해 상반기 296명으로 43% 증가. 60대 이상 세대를 제외하면 모든 세대에서 감소한 것과 대조된 상황. 20대 여성 자살 추이가 2019년에도 크게 요동을 쳤던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

-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하되, 그 집단에 한정될 필요는 없음. 청년 집단의 정신 건강의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

□ 지원내용

- 경기도 ‘청년 마인드 케어’ (www.mentalhealth.or.kr)를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장. 해당 사업은 1인당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최대 연 36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원 내용을 정신과 상담 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담 서비스까지 포괄할지 검토 필요.

□ 전달체계

- 전달체계는 민간, 공공의 의료기관 혹은 상담기관이 될 것임. 문제는 우울, 자살생각을 하는 청년들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혹은 의료기관 사이의 연결 고리는 매우 약하다는 것. 청년 마인드 케어에 대한 정보도 부족. 이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
- 홍보에 포털을 이용. 자살 혹은 우울 청년들이 포털에서 해당 검색어를 칠

때, 자살 및 우울 등에 대한 이해와 오해, 팩트 체크 등 정확한 정보와 함께 검색 장소 주변에서 방문할 수 있는 청년센터나 의료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아래 캡처 화면 참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득력 있는 ‘반자살’ 동영상 제시 고려.

- 포털 중에는 네이버에서 부족하나마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자살 관련 내용이 제시돼 있지만, 구글과 다음에서는 관련 전화번호만 건조하게 제시함. 자살을 생각해보는 사람이라면 세 포털을 통해서 ‘자살’ 혹은 ‘우울’과 같은 검색어를 쓸 확률이 높으므로, 이 ‘길목’에서 정책적인 개입을 한다면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을 것.
- 여기에 ‘마인드 케어’나 ‘정신과 상담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아울러 일부 청년들이 정신과 상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이른테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추후에 취업을 영향을 미친다는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 있음.

[참고그림 1] 자살 검색에 대한 주요 포털들의 검색 결과 내용 (네이버, 다음, 구글 순)

N 자살

통합 지식IN 뉴스 이미지 어학사전 VIEW 실시간검색 지식백과 책 ... 검색옵션

생명사랑 캠페인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가치있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마세요!

24시간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직접상담
 자살예방상담전화 * 1393 한국생명연의전화 *
 청소년전화 *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정신건강상담전화 * 1577-0199
 한국생명연의전화 * 1588-9191

☺ **포기하지 마세요**
 · 우울증과 우울감의 차이는?
 · 우울을 예방 및 극복하는 방법은?
 · 먼저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
 · 그래도, 삶은 희망이다

💡 **어떻게 도울까요?**
 · 지인의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법
 · 삶이 힘든 2030 청년들을 위한 응원
 · 지인의 자살암시를 나타내는 말과 행동
 · 자살을 생각하는 장·노년층을 위한 메시지

반디앤루니스 베스트셀러

- 트렌드 코리아 2021
- 어떻게 말해야 할까
-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
- 마음챙김의 시
- 달리구트 품 베풀림
- 혼남매 6
- 돈의 속성
- 폴리매스
- 부의 인문학

집계기간 2020.11.02.~2020.11.08.

뉴스토픽
 뉴스 연예 스포츠

1 바이든 축하 6 전터

지식백과 학생백과



자살

🔍

로그인

통합검색
뉴스
백과사전
지도
사이트
어학사전
오피스문서
쇼핑
더보기
기간검색

상담 전화번호

| 아동 | 청소년 | 여성 | 노인 장애인 | 결혼 중독 채우 | 가족 | 자살 |
|-----------|--------------|---------------|--------|----------|----|----|
| 관련기관 | | | | | | |
| 전화번호 | | | 상담내용 | | | |
| 자살예방 상담전화 | 1393 |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 | | | |
| 청소년 전화 | 1388 |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 | | | |
|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 | | | |
| 한국상담의 전화 | 1588-9191 |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 | | | |
| 한국자살예방협회 | 02-413-0892 | - | | | | |
| 중앙자살예방센터 | 02-2203-0053 | - | | | | |

관련검색 [인급 전화번호](#), [생활정보 전화번호](#), [민원신고 전화번호](#)

뉴스 [정확도](#) · [최신](#)

[탈모 치료제 성분 '피니스테리드' 우울 자살 부작용 관련성](#)

분야별 검색어

| 드라마 | 상영중영화 |
|------------|----------|
| 1 비밀의 남자 | 6 날아라! |
| 2 구미호전 | 7 도도솔솔 |
| 3 팬텀하우스 | 8 18 어게인 |
| 4 찬란한 내 인생 | 9 스타트업 |
| 5 누가 뭐라도 | 10 슬기로운 |

같이가지 추천글

- 삶이 힘든데... '결혼 중독군'을 아시나요?
- 이 생의 이별을 아시나요?
- 발달장애인의 '코로나 블루'
- 우리 어머니, 추위에 안전할까요?



자살
✕
🗨
🗣
🔍

🔍 전체
🖼 이미지
📰 뉴스
📺 동영상
📍 지도
⋮ 더보기
🛠 설정
📄 도구

검색결과 약 53,500,000개 (0.36초)

도움말 이용 가능

오늘 상담사와 상담하기

자살예방상담전화
시간: 24시간 자세히 [알아보기](#)

1393

🌐 공식 웹사이트

피드백

twitter.com › [bbcbicker](#) › status

Laura Bicker on Twitter: "So I'm posting this once more. South ...

2020. 7. 9. — So I'm posting this once more. South Korea has one of the highest suicide rates in

제4절 고용

1. 현황

분석에 따르면, 청년은 근로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지며, 이들은 고졸 이하의 1인가구,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 종사상 지위가 취약한 청년, 월 세로 거주하고 중위소득 150%미만에 위치하는 청년들이 많다. 거칠게 보면 이들은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 임시일용직으로 일하는 내부노동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청년,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은 훈련, 창업, 취업지원 및 자산 형성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추진목표는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데 두어져 있다. 이렇게 볼 때, 고용 취약 청년 실태와 대책 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정책의 목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고용영역에서 취약한 청년들의 주 호소는 생계를 위한 불가피하고 불안정한 노동에 있는 것이다. 또 이는 1~2인 중심의 빠른 가구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 소득이 가구의 효용을 갖지 못하고 곧바로 소득지위로 반영되는 현실(노대명 외, 2020)에 구조적 원인이 있다. 고용 영역의 취약한 청년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원인은 기성세대가 가진 일자리의 양과 질을 기대할 수 없는 노동시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구 규모의 축소, 그로인한 사회안전망의 약한 대응력인 것이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그래서 청년의 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일자리 정책들이 설계, 운영되었지만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실태와 정책목표의 간극 문제, 더 근본적으로는 제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불안정하지만 지금 당장의 일을 놓을 수 없는 취약한 사람의 문제에 심각성을 두지 않은 데 있다. 청년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영역의 중점과제인 구직 활동 및 능력개발지원, 일자리 확대 및 창업지원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격차 해소 및 안전망 강화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의 문제에 대한 대책보다 산업 중심의 정책으로 짜여져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자리 정책의 지형자체가 갖는 복잡성과 이해당사자들의 성과를 담보해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동력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은 대표적인 근로연령층이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근로연령층에게 기대되어 온 사회적 역할과 이미지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소비하며 자산을 축적하는 자이다. 그러나 분석에서 보듯 고용영역에서 취약한 청년은 위험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청년이 아닌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며, 학업이 종료되지 않거나 낮은 학력을 지닌 청년들이다. 그리고 현재의 청년정책과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호, 사회보장정책은 이러한 청년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일례로 취약한 청년들은 사회보험에 가입된 비율 자체가 낮을 뿐 아니라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의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 경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 즉, 이들의 일은 사회보험 의무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나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하는 시간과 기간이 일시적인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서베이 자료로는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단번에 마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한 편에서는 노동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별도의 소득보장정책과 자산형성제도가 논의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사회로의 이행을 생애과업으로 하는 청년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노동이 갖는 의미 그 자체 뿐 아니라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사회 차원에서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역량을 가진 청년층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통적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2. 정책 제언

따라서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제언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노동이라면 일자리를 우선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청년층이 고용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자체 주도의 공공 일자리 확대는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와 같은 다양한 청년들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공공은 경험을 기반으로 청년의 일을 직접 이해하고 소득을 파악하며,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따른 수동적인 정책대응이 아닌 노동시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정책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공공일자리라 하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의미 있는 일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학력이 낮거나 임시·일용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의 청년이라면, 당장 해결해야 할 생계문제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일로의 진입을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정세정 외, 2019).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공공기관 조직구조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단순 업무보다는 청년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일자리를 제공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에 의한 적극적 정책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청년에게 일을 제공한다는 측면 뿐 아니라, 취약 가능성이 높은 청년에게 일영역 뿐 아니라 각 영역의 정책이 연결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외에도 고용의 불안정성을 주 특성으로 하는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회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9~34세의 근로형태별, 연령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을 2004년~2019년에 걸쳐 분석한 정해식(2020)에 따르면 청년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특히 19~24세, 25~29세 비정규직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크게 변화가 없다. 또한 비정규직 중 15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과 재학자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정세정 외(2020)에 따르면, 일에 기반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청년은 3명중 2명이며, 연령특성에 따라서도 미가입 원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데, 초기 청년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필요성이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며, 미가입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경우에는 노동의 특성상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도 8.82%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결국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의 재편이 취약 청년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제도가 있지만 청년층은 연령 및 노동의 특성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2019년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은 30세 미만인 경우가 107만 가구로 청년층이 많았지만 근로장려세제 제도 특성상 수급안정성이 낮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노대명 외(2020)가

제안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세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근로능력자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소득에 기반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약한 청년의 노동 특성을 고려할 때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소득의 감소와 자발적 이직에 대한 부분을 사유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설계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소득지원, 자산지원과 같이 특정형태로 이뤄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적고용서비스와 취약한 청년의 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은 영역별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청년층의 특성과 앞서 언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별도의 독자적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상담,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고용영역에서 취약한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에 요구되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청년 내 존재하는 계층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고려일 것이다. 분석 결과 나타난 1-2인 가구의 취약성, 임시·일용직의 취약성과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대로 소규모 가구의 노동소득은 곧바로 소득지위로 이어지며, 이 취약한 집단들에서 노동의 단절은 빈곤으로의 진입을 의미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5절 사회문화적 자본

1. 현황

청년을 위한 현행 사회문화적 자본 관련 정책은 청년 생활 지원의 일환으로 문화활동을 지원하거나 청년의 참여를 실현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을 위한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해 공동체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문화활동 지원은 공연, 여행, 이스포츠 등 청년의 문화활동 지원이나 체육·문화시설 공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 지원은 청년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자본은 계급을 재생산하는 보이지 않는 기제이기도 하다. 김수정 외

(2020)는 청소년들의 진로 희망이 성장한 계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원가구의 계급 지위가 높은 청소년은 전문직이나 관리직을 흔하게 접하며 그러한 직업을 선호한다. 부모들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중간층 청소년들은 반(半)전문기술직을 흔하게, 전문직을 드물게 접하면서 안정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꿈을 꾀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꿈을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층 청소년들은 전문직을 접하지도 못하고 전문직을 꿈꾸는 포래도 없다. 아이돌, 운동선수, 프로게이머에 집중된 제한된 ‘꿈’을 꾸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꿈에 무관심하거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무지하다.

또한 지지체계가 없이 고립된 청년은 우울이나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정세정 외(2020, pp.199-205)는 독립한 1인 가구 청년이 다른 청년들에 비해 경제적 곤란, 생활 곤란, 정서적 곤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서울시는 청년에 대한 지역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 진입과 고용을 촉진하는 고립 청년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⁶⁾

사회문화적 자본은 공동체일 뿐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혈연과 학연, 지연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이고, 청년이 선택하기보다 주어지는 조건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차원 빈곤 접근을 통해 본 사회문화적 자본이 취약한 청년은 실업계 및 특성화고 이외 일반계 등 기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월세에 거주하거나 실업자,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은 사회적 친분관계나 여가 만족도가 비교적 낮고, 배우자가 있는 청년은 문화비 지출이 높은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문화적 자본 취약성의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청년의 사회문화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일상 속에서 문화적 기회를 누리는 청년 생활 향유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참여와 권리를 추구한다. 청년기 이후 계급을 결정하는 미래와 현재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고립된 청년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서울청년포털 고립청년 지원사업(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isol_youth_sup_busi에서 2020.11.1. 인출)

2. 정책 제안

현행 청년 대상 사회문화적 정책이 문화활동 지원이나 지역 공동체 촉진을 위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청년의 고립을 해소하고 문화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 박스와 같다.

- 주요 현황 및 배경
 - 1인 가구의 비중이 대폭 증가(2000년 15.5%→2019년 30.2%)(통계청 보도자료, 2020.8.28., p.39)
 - 20-34세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27.2%
 - 니스(NEES)* 청년 비중이 17.3%에 이름(박시내, 2019)
 - * 니스(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 아니면서 고용상태에 있지 않고 아무런 사회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
- 지원대상
 - 원가구에서 독립했거나 학업 또는 취업 등의 이유로 이주한 청년
 - 고립 은둔형 청년 발굴 및 지역 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 지원내용
 - 지역 기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고립 은둔형 청년 발굴 및 지역 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제6절 안정성

1. 현황

다차원 빈곤 영역 중 안정성은 공적연금 가입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그리고 물질적 박탈 경험 여부의 지표로 구성된다.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근로기간에 적립한 보험료를 노후에 연금으로 찾아서 쓰는 방식의 사회보험 제도이다. 청년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 변화추이를 연령집단별, 근로형태별로 살펴 보면, 정규직의 경우는 연령대와 무관하게 높은 수준에서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비정규직의 경우는 낮은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9~24세 비정규직의 경우는 오히려 가입률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인다(정해식, 2020, p.20).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청년층의 일자리 불안정성이 미래 노후소득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상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근로형태별로 가입률에 차이를 보인다. 전체 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은 2004년 61.5%에서 2018년 87.0%로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36.2%에서 43.6%로 정규직 가입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 격차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2018년 가입률을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높은 85.2%이고, 다음으로 40대 78.5%, 20대 74.3%, 50대 69.7% 등의 순으로 확인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p.38). 이처럼 20대와 30대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등 제도 운영상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을 보면 20대 12.4%, 30대 47.0%, 40대 56.4%, 50대 63.2% 등으로 나타나 청년세대는 높은 가입률에 비해 낮은 보장률을 보이고 있다(p.48). 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급여의 특성이 가입기간과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물질적 박탈의 경우는 생계에 필요한 필수적인 항목을 경제적 이유로 소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물질적 박탈을 경험한 청년의 비율이 4.4%인데, 청년 내 인구하위집단별로 상당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졸이상은 1.7%인데 반해 일반계 고졸이하는 12.5%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도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지표의 특성상 소득수준에 따라 가장 큰 격차가 존재하는데,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층의 경우 20.8%에 달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저소득 등 취약계층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 측면에서는 2021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로빈곤 인구에 대해서는 실업부조를 통한 보호

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대안적 사회보장제도로써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청년층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청년층의 다양한 이행 상황을 고려할 때 부족한 측면도 존재한다. 생산적 활동 간의 이행상태로 정의되는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s, TLM)'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소득 감소 혹은 상실의 위험이 발생한다. 고용-고용, 고용-실업, 교육훈련-고용, 부양가족 보호로 인한 휴직(소득감소), 장애·질환·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혹은 상실과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직률이 높은 청년층의 경우 고용-고용, 고용-실업, 교육훈련-고용의 이행과정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안전하고 완전한 성인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활동계좌'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 주요 현황 및 배경

- 노동시장 이행 국면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부재

□ 지원대상

- 이행기에 있는 청년 일반

□ 지원내용

- 개인활동계좌 개설, 이행 단계별 위험에 대응한 지원. Youth Card와 연계 활용
 - 고용-고용, 고용-실업: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예정) 대상범위 확대(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포함)
 - 교육훈련-고용: 학교에서 일자리로(school-to-work) 이행 과정 지원
 - 고용보험, 실업부조 등 수급 조건 확대(구직활동 의무에 타임뱅크 참여, 지자체 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인정)



국내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2020a). 청년의 삶 개선방안.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2020b).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 김기현, (2016). 청년 취업 취약계층 실태와 정책과제. 제3차 청년정책포럼 발표문.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권향원, 김창환, 박미선, 성재민, 이철선, 최한수, (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 김문길, 김태완, 임완설,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성아, (2018). 다차원 빈곤의 변화와 세대 간 비교, 2018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김세진, (2019).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사회복지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차영화, 최셋별, (2020). 불평등한 미래: 청소년의 '꿈', 지위표식이 되다. 한국사회학, 54(1), 101-138.
- 노대명, 김안국, 전병유, 강병구, 신영석, 우해봉, 한정림, 김기태, 양난주, 함영진, 이철, 조성은, 최요한, 이지혜, 황안나, 김태준, 김정아, 임종현, 이정우, 윤현희, 장근영, 이장원, 김동배, 박정열, 김동현, 양재진, 최영준, 남영민, 이창곤, 한귀영, 조현경, (2020).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 사회보장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광연·최미광(2020.10.6.). [창간기획-2030 자낱세 보고서] ①5%만 성공한다 해도...노동보다 투자가 "가성비 높다". 경향신문
- 박시내, (2019). 청년층의 사회활동 참여와 니스(NEES) 특성 분석, 대전: 통계개발원.
- 보건복지부, (2020) 2019년 사망원인통계 중 자살 관련 설명. 보도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 변금선, 김기현, 하형석, 이용해, (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 이현주, 정은희, (2014). 다차원적 접근을 이용한 한국 빈곤집단의 유형화와 특성분석, 사회복지정책, 41(2), 1-25.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소득보장과 사회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

정세정,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김기태, 주유선, 강예은, 최준영, 송아영, 김용환,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2020). 청년의 사회보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0년 6월 통권 제284호, 19-32.

통계청 보도자료, (2020.8.28.).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록센서스 방식. 대전: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사용자 지침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문헌

Alkire, S., & Foster, J. (2011).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7), 476-487. doi:10.1016/j.jpubeco.2010.11.006

European Union (2018). *Youth Strategy 2019-2027*.

United Nations (2018). *Youth2030: The United Nations Youth Strategy*.

데이터베이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웹페이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work.go.kr/>). 2020년 10월 5일에 접속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0년 10월 5일에 접속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2020년 10월 6일에 접속

서울청년포털 고립청년 지원사업(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isol_youth_sup_busi)에서 2020.11.1. 인출)



1. 제3장의 부표

〈부표 3-1〉 연도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단위: 점, %)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구성 요소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47 | 0.039 | 0.019 | 0.030 | 0.011 | 0.034 | 0.014 | 15.3 |
| 2009 | 0.137 | 0.036 | 0.016 | 0.028 | 0.011 | 0.033 | 0.014 | 14.5 |
| 2010 | 0.133 | 0.036 | 0.017 | 0.027 | 0.010 | 0.029 | 0.014 | 14.3 |
| 2011 | 0.133 | 0.037 | 0.016 | 0.028 | 0.011 | 0.030 | 0.012 | 14.4 |
| 2012 | 0.133 | 0.037 | 0.015 | 0.029 | 0.012 | 0.028 | 0.012 | 14.5 |
| 2013 | 0.135 | 0.037 | 0.015 | 0.029 | 0.012 | 0.029 | 0.012 | 15.9 |
| 2014 | 0.124 | 0.036 | 0.013 | 0.027 | 0.012 | 0.025 | 0.011 | 14.1 |
| 2015 | 0.125 | 0.037 | 0.012 | 0.028 | 0.014 | 0.025 | 0.010 | 14.3 |
| 2016 | 0.122 | 0.036 | 0.011 | 0.030 | 0.014 | 0.024 | 0.009 | 14.5 |
| 2017 | 0.114 | 0.026 | 0.010 | 0.030 | 0.015 | 0.025 | 0.009 | 14.3 |
| 2018 | 0.127 | 0.036 | 0.011 | 0.032 | 0.015 | 0.026 | 0.009 | 14.7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146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부표 3-2> 2008~2018년 연령집단별 소득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 비율

(단위: %)

| 연도 | 청년 (19-34세) | | | | 중장년 (35-64세) | 노인 (65세 이상) | 소득빈곤 (=100) |
|------|----------------|----------------|----------------|-------|--------------|-------------|-------------|
| | 초기 청년 (19-24세) | 중기 청년 (25-29세) | 후기 청년 (30-34세) | | | | |
| 2008 | 187.3 | 193.6 | 177.0 | 192.6 | 115.8 | 46.4 | 100.0 |
| 2009 | 199.0 | 193.3 | 185.7 | 224.9 | 116.0 | 45.9 | 100.0 |
| 2010 | 174.0 | 206.3 | 143.0 | 182.8 | 120.6 | 44.6 | 100.0 |
| 2011 | 169.9 | 160.8 | 168.4 | 185.2 | 117.5 | 45.1 | 100.0 |
| 2012 | 174.8 | 171.3 | 162.6 | 192.3 | 114.2 | 45.4 | 100.0 |
| 2013 | 149.1 | 128.1 | 177.2 | 156.9 | 107.4 | 43.9 | 100.0 |
| 2014 | 150.7 | 126.5 | 185.8 | 160.9 | 129.0 | 42.5 | 100.0 |
| 2015 | 171.3 | 163.1 | 241.5 | 141.7 | 118.7 | 42.3 | 100.0 |
| 2016 | 142.9 | 134.9 | 181.4 | 128.3 | 112.4 | 44.1 | 100.0 |
| 2017 | 135.0 | 124.1 | 159.0 | 131.9 | 113.5 | 37.2 | 100.0 |
| 2018 | 171.0 | 145.8 | 225.3 | 171.0 | 114.3 | 42.9 | 100.0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임.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소득빈곤 대비 다차원 빈곤 배율은 다차원빈곤 점수를 소득빈곤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계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3> 2018년 청년 연령집단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단위: %)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구성 요소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초기 청년 (19-24세) | 0.105 | 0.036 | 0.012 | 0.009 | 0.020 | 0.019 | 0.010 | 7.21 |
| 중기 청년 (25-29세) | 0.102 | 0.035 | 0.014 | 0.010 | 0.015 | 0.017 | 0.010 | 4.52 |
| 후기 청년 (30-34세) | 0.096 | 0.026 | 0.011 | 0.015 | 0.014 | 0.022 | 0.009 | 5.61 |
| 청년 전체 (19-34세) | 0.101 | 0.033 | 0.012 | 0.011 | 0.017 | 0.020 | 0.009 | 5.92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임.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소득빈곤 대비 다차원빈곤 배율은 다차원빈곤 점수를 소득빈곤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계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4〉 연도별 청년 성별 분포

(단위: 명)

| 연도 | 남성 | 여성 | 전체 |
|------|--------|--------|--------|
| 2008 | 1,237 | 1,371 | 2,607 |
| 2009 | 1,162 | 1,302 | 2,464 |
| 2010 | 1,082 | 1,232 | 2,314 |
| 2011 | 1,068 | 1,230 | 2,298 |
| 2012 | 1,150 | 1,072 | 2,222 |
| 2013 | 1,109 | 1,001 | 2,110 |
| 2014 | 1,066 | 954 | 2,020 |
| 2015 | 1,010 | 901 | 1,910 |
| 2016 | 951 | 863 | 1,814 |
| 2017 | 950 | 828 | 1,778 |
| 2018 | 925 | 781 | 1,707 |
| 전체 | 11,709 | 11,535 | 23,244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5〉 연도별 청년 성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단위: 점, %)

〈남성〉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19 | 0.030 | 0.020 | 0.013 | 0.013 | 0.028 | 0.014 | 6.8 |
| 2010 | 0.101 | 0.030 | 0.016 | 0.009 | 0.010 | 0.023 | 0.014 | 6.2 |
| 2015 | 0.101 | 0.034 | 0.011 | 0.009 | 0.016 | 0.022 | 0.009 | 6.8 |
| 2018 | 0.106 | 0.033 | 0.012 | 0.011 | 0.017 | 0.022 | 0.010 | 6.4 |

〈여성〉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24 | 0.034 | 0.021 | 0.014 | 0.012 | 0.029 | 0.014 | 6.3 |
| 2010 | 0.111 | 0.033 | 0.019 | 0.010 | 0.013 | 0.023 | 0.014 | 6.0 |
| 2015 | 0.104 | 0.033 | 0.014 | 0.011 | 0.015 | 0.020 | 0.011 | 5.1 |
| 2018 | 0.097 | 0.032 | 0.012 | 0.012 | 0.016 | 0.017 | 0.008 | 5.3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148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부표 3-6〉 연도별 청년 교육수준 분포

(단위: 명)

| 연도 | 고졸 이하 (실업계, 특성화고) | 고졸 이하 (일반계 등 기타) | 대졸 이상 | 전체 |
|------|----------------------|---------------------|--------|--------|
| 2008 | 1,075 | 365 | 1,168 | 2,607 |
| 2009 | 979 | 299 | 1,186 | 2,464 |
| 2010 | 895 | 253 | 1,166 | 2,314 |
| 2011 | 909 | 246 | 1,143 | 2,298 |
| 2012 | 885 | 262 | 1,075 | 2,222 |
| 2013 | 867 | 250 | 993 | 2,110 |
| 2014 | 818 | 362 | 840 | 2,020 |
| 2015 | 768 | 234 | 908 | 1,910 |
| 2016 | 623 | 227 | 964 | 1,814 |
| 2017 | 518 | 225 | 1,035 | 1,778 |
| 2018 | 447 | 218 | 1,041 | 1,707 |
| 전체 | 8,785 | 2,941 | 11,518 | 23,244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7〉 연도별 청년 교육수준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단위: 점, %)

| 〈고졸 이하(실업계, 특성화고)〉 | | | | | | | | |
|--------------------|--------|--------|-------|-------|-------|----------|-------|-------|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35 | 0.036 | 0.019 | 0.016 | 0.015 | 0.030 | 0.017 | 7.2 |
| 2010 | 0.118 | 0.034 | 0.017 | 0.009 | 0.013 | 0.026 | 0.017 | 6.6 |
| 2015 | 0.112 | 0.039 | 0.010 | 0.009 | 0.016 | 0.025 | 0.013 | 7.3 |
| 2018 | 0.118 | 0.041 | 0.009 | 0.009 | 0.022 | 0.022 | 0.014 | 7.9 |
| 〈고졸 이하(일반계 등 기타)〉 | | | | | | | | |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66 | 0.053 | 0.027 | 0.018 | 0.013 | 0.035 | 0.022 | 12.7 |
| 2010 | 0.161 | 0.059 | 0.022 | 0.017 | 0.013 | 0.033 | 0.018 | 16.9 |
| 2015 | 0.146 | 0.059 | 0.014 | 0.016 | 0.020 | 0.024 | 0.013 | 14.7 |
| 2018 | 0.154 | 0.051 | 0.015 | 0.021 | 0.023 | 0.034 | 0.014 | 11.2 |
| 〈대졸 이상〉 | | | | | | | | |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097 | 0.023 | 0.020 | 0.011 | 0.010 | 0.025 | 0.009 | 4.0 |
| 2010 | 0.086 | 0.023 | 0.016 | 0.009 | 0.010 | 0.019 | 0.010 | 3.3 |
| 2015 | 0.086 | 0.023 | 0.014 | 0.010 | 0.013 | 0.018 | 0.008 | 2.7 |
| 2018 | 0.085 | 0.025 | 0.013 | 0.011 | 0.013 | 0.016 | 0.006 | 3.9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8〉 연도별 청년 가구 내 지위 분포

(단위: 명)

| 연도 | 1인 가구 | 가구주/배우자 | 자녀/자녀의 배우자 | 기타 | 전체 |
|------|-------|---------|------------|-----|--------|
| 2008 | 158 | 883 | 1,468 | 99 | 2,607 |
| 2009 | 173 | 731 | 1,467 | 92 | 2,464 |
| 2010 | 167 | 607 | 1,469 | 72 | 2,314 |
| 2011 | 147 | 569 | 1,515 | 68 | 2,298 |
| 2012 | 125 | 577 | 1,456 | 65 | 2,222 |
| 2013 | 109 | 517 | 1,430 | 53 | 2,110 |
| 2014 | 97 | 374 | 1,483 | 66 | 2,020 |
| 2015 | 83 | 451 | 1,320 | 57 | 1,910 |
| 2016 | 103 | 472 | 1,183 | 56 | 1,814 |
| 2017 | 134 | 502 | 1,093 | 49 | 1,778 |
| 2018 | 152 | 514 | 993 | 48 | 1,707 |
| 전체 | 1,447 | 6,196 | 14,877 | 724 | 23,244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9〉 연도별 청년 가구 내 지위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단위: 점, %)

〈1인 가구〉

| 연도 | 다차원 빈곤 | 지위별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45 | 0.054 | 0.030 | 0.016 | 0.013 | 0.017 | 0.015 | 8.2 |
| 2010 | 0.128 | 0.054 | 0.027 | 0.007 | 0.011 | 0.014 | 0.014 | 8.4 |
| 2015 | 0.145 | 0.064 | 0.020 | 0.009 | 0.018 | 0.018 | 0.015 | 11.7 |
| 2018 | 0.135 | 0.066 | 0.018 | 0.010 | 0.017 | 0.012 | 0.011 | 7.1 |

〈가구주/배우자〉

| 연도 | 다차원 빈곤 | 지위별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25 | 0.036 | 0.026 | 0.013 | 0.007 | 0.032 | 0.011 | 5.4 |
| 2010 | 0.102 | 0.034 | 0.023 | 0.009 | 0.007 | 0.023 | 0.008 | 3.7 |
| 2015 | 0.094 | 0.035 | 0.017 | 0.009 | 0.010 | 0.018 | 0.005 | 3.8 |
| 2018 | 0.091 | 0.032 | 0.013 | 0.010 | 0.012 | 0.017 | 0.006 | 4.7 |

〈자녀/자녀의 배우자〉

| 연도 | 다차원 빈곤 | 지위별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16 | 0.027 | 0.016 | 0.014 | 0.016 | 0.028 | 0.016 | 6.9 |
| 2010 | 0.104 | 0.027 | 0.014 | 0.010 | 0.013 | 0.024 | 0.016 | 6.5 |
| 2015 | 0.102 | 0.031 | 0.010 | 0.010 | 0.017 | 0.022 | 0.012 | 5.9 |
| 2018 | 0.098 | 0.026 | 0.010 | 0.012 | 0.019 | 0.022 | 0.010 | 5.5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기타는 가구주나 배우자,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외 지위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150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부표 3-10〉 연도별 청년 혼인상태 분포

(단위: 명)

| 연도 | 유배우 | 미혼 | 기타 | 전체 |
|------|-------|--------|-----|--------|
| 2008 | 878 | 1,697 | 33 | 2,607 |
| 2009 | 747 | 1,695 | 22 | 2,464 |
| 2010 | 630 | 1,665 | 20 | 2,314 |
| 2011 | 616 | 1,659 | 24 | 2,298 |
| 2012 | 603 | 1,601 | 18 | 2,222 |
| 2013 | 546 | 1,549 | 15 | 2,110 |
| 2014 | 406 | 1,600 | 14 | 2,020 |
| 2015 | 465 | 1,428 | 17 | 1,910 |
| 2016 | 469 | 1,330 | 14 | 1,814 |
| 2017 | 511 | 1,252 | 14 | 1,778 |
| 2018 | 525 | 1,164 | 17 | 1,707 |
| 전체 | 6,396 | 16,640 | 208 | 23,244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11〉 연도별 청년 혼인상태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단위: 점, %)

〈유배우〉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20 | 0.034 | 0.025 | 0.012 | 0.006 | 0.033 | 0.010 | 5.1 |
| 2010 | 0.099 | 0.033 | 0.022 | 0.008 | 0.007 | 0.023 | 0.008 | 3.9 |
| 2015 | 0.090 | 0.031 | 0.017 | 0.009 | 0.009 | 0.018 | 0.005 | 3.2 |
| 2018 | 0.089 | 0.031 | 0.012 | 0.010 | 0.013 | 0.017 | 0.006 | 5.5 |

〈미혼〉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21 | 0.031 | 0.018 | 0.014 | 0.016 | 0.026 | 0.016 | 7.0 |
| 2010 | 0.107 | 0.030 | 0.015 | 0.010 | 0.013 | 0.023 | 0.016 | 6.8 |
| 2015 | 0.107 | 0.034 | 0.011 | 0.010 | 0.017 | 0.022 | 0.012 | 6.8 |
| 2018 | 0.107 | 0.033 | 0.012 | 0.012 | 0.019 | 0.020 | 0.011 | 6.2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기타는 이혼/사별/별거 등을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12〉 연도별 청년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명)

| 연도 | 상용직 임금근로자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 특수고용직 근로자 | 비임금 근로자 | 비경제 활동인구 | 실업자 | 전체 |
|------|--------------|----------------|--------------|------------|-------------|-----|--------|
| 2008 | 890 | 508 | - | 115 | 958 | 136 | 2,607 |
| 2009 | 815 | 523 | 35 | 105 | 910 | 76 | 2,464 |
| 2010 | 753 | 500 | 32 | 106 | 875 | 47 | 2,314 |
| 2011 | 780 | 471 | 20 | 105 | 881 | 41 | 2,298 |
| 2012 | 737 | 481 | 16 | 98 | 847 | 45 | 2,222 |
| 2013 | 664 | 410 | 21 | 82 | 859 | 74 | 2,110 |
| 2014 | 585 | 355 | 18 | 67 | 947 | 48 | 2,020 |
| 2015 | 591 | 386 | 14 | 73 | 798 | 48 | 1,910 |
| 2016 | 637 | 362 | 12 | 93 | 641 | 70 | 1,814 |
| 2017 | 693 | 358 | 24 | 89 | 539 | 75 | 1,778 |
| 2018 | 713 | 343 | 34 | 93 | 462 | 62 | 1,707 |
| 전체 | 7,858 | 4,697 | 226 | 1,026 | 8,716 | 722 | 23,244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13〉 연도별 청년 종사상 지위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단위: 점, %)

〈상용직 임금근로자〉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구성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087 | 0.025 | 0.021 | 0.010 | 0.000 | 0.024 | 0.006 | 2.3 |
| 2010 | 0.075 | 0.026 | 0.017 | 0.008 | 0.001 | 0.018 | 0.005 | 1.6 |
| 2015 | 0.069 | 0.024 | 0.014 | 0.009 | 0.001 | 0.017 | 0.003 | 0.7 |
| 2018 | 0.066 | 0.025 | 0.013 | 0.009 | 0.001 | 0.015 | 0.003 | 1.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구성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201 | 0.038 | 0.023 | 0.015 | 0.049 | 0.029 | 0.045 | 6.4 |
| 2010 | 0.177 | 0.037 | 0.020 | 0.010 | 0.045 | 0.026 | 0.042 | 5.5 |
| 2015 | 0.195 | 0.042 | 0.015 | 0.011 | 0.065 | 0.022 | 0.036 | 5.6 |
| 2018 | 0.179 | 0.041 | 0.015 | 0.009 | 0.065 | 0.022 | 0.030 | 6.0 |

〈특수고용직 임금근로자〉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구성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62 | 0.036 | 0.016 | 0.009 | 0.018 | 0.026 | 0.056 | 0.0 |
| 2010 | 0.157 | 0.027 | 0.022 | 0.008 | 0.021 | 0.024 | 0.055 | 0.0 |
| 2015 | 0.207 | 0.044 | 0.017 | 0.018 | 0.032 | 0.036 | 0.061 | 3.6 |
| 2018 | 0.196 | 0.027 | 0.010 | 0.020 | 0.066 | 0.010 | 0.061 | 2.5 |

152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비임금근로자〉

| 연도 | 다차원 빈곤 |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088 | 0.024 | 0.015 | 0.010 | 0.000 | 0.031 | 0.008 | 7.6 |
| 2010 | 0.088 | 0.031 | 0.020 | 0.006 | 0.000 | 0.026 | 0.005 | 8.4 |
| 2015 | 0.073 | 0.028 | 0.009 | 0.009 | 0.000 | 0.025 | 0.002 | 7.6 |
| 2018 | 0.068 | 0.020 | 0.013 | 0.008 | 0.000 | 0.025 | 0.003 | 5.9 |

〈비경제활동인구〉

| 연도 | 다차원 빈곤 |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11 | 0.037 | 0.019 | 0.017 | 0.000 | 0.032 | 0.007 | 9.2 |
| 2010 | 0.087 | 0.032 | 0.015 | 0.011 | 0.000 | 0.025 | 0.005 | 9.3 |
| 2015 | 0.080 | 0.036 | 0.010 | 0.010 | 0.000 | 0.023 | 0.003 | 9.2 |
| 2018 | 0.087 | 0.040 | 0.008 | 0.015 | 0.000 | 0.024 | 0.003 | 13.2 |

〈실업자〉

| 연도 | 다차원 빈곤 |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67 | 0.035 | 0.018 | 0.016 | 0.056 | 0.033 | 0.010 | 14.7 |
| 2010 | 0.181 | 0.051 | 0.016 | 0.014 | 0.056 | 0.032 | 0.008 | 23.7 |
| 2015 | 0.161 | 0.048 | 0.015 | 0.015 | 0.056 | 0.023 | 0.005 | 19.2 |
| 2018 | 0.172 | 0.041 | 0.014 | 0.025 | 0.056 | 0.031 | 0.005 | 5.2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자활근로, 공공근로를 포함함.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14) 연도별 청년 주거 점유형태 분포

(단위: 명)

| 연도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전체 |
|------|--------|-------|-------|-------|--------|
| 2008 | 1,386 | 620 | 422 | 179 | 2,607 |
| 2009 | 1,302 | 594 | 435 | 133 | 2,464 |
| 2010 | 1,270 | 501 | 415 | 129 | 2,314 |
| 2011 | 1,257 | 487 | 437 | 116 | 2,298 |
| 2012 | 1,194 | 488 | 414 | 127 | 2,222 |
| 2013 | 1,185 | 402 | 405 | 117 | 2,110 |
| 2014 | 1,169 | 342 | 398 | 110 | 2,020 |
| 2015 | 1,105 | 334 | 351 | 121 | 1,910 |
| 2016 | 1,064 | 286 | 367 | 97 | 1,814 |
| 2017 | 1,020 | 288 | 365 | 104 | 1,778 |
| 2018 | 968 | 281 | 366 | 91 | 1,707 |
| 전체 | 12,921 | 4,623 | 4,376 | 1,324 | 23,244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15) 연도별 청년 주거 점유형태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단위: 점, %)

〈자가〉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086 | 0.014 | 0.007 | 0.013 | 0.013 | 0.028 | 0.011 | 4.8 |
| 2010 | 0.066 | 0.012 | 0.005 | 0.009 | 0.010 | 0.021 | 0.009 | 4.7 |
| 2015 | 0.066 | 0.015 | 0.004 | 0.009 | 0.013 | 0.018 | 0.007 | 4.2 |
| 2018 | 0.068 | 0.012 | 0.004 | 0.011 | 0.016 | 0.019 | 0.007 | 3.9 |

〈전세〉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41 | 0.031 | 0.051 | 0.014 | 0.010 | 0.025 | 0.011 | 6.3 |
| 2010 | 0.134 | 0.035 | 0.048 | 0.008 | 0.011 | 0.023 | 0.011 | 6.3 |
| 2015 | 0.139 | 0.035 | 0.045 | 0.011 | 0.017 | 0.020 | 0.010 | 5.8 |
| 2018 | 0.124 | 0.031 | 0.045 | 0.010 | 0.017 | 0.012 | 0.009 | 3.0 |

〈월세〉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98 | 0.081 | 0.022 | 0.015 | 0.018 | 0.035 | 0.030 | 12.7 |
| 2010 | 0.178 | 0.075 | 0.018 | 0.010 | 0.014 | 0.029 | 0.031 | 9.1 |
| 2015 | 0.173 | 0.080 | 0.011 | 0.011 | 0.020 | 0.031 | 0.021 | 11.2 |
| 2018 | 0.157 | 0.077 | 0.009 | 0.013 | 0.020 | 0.026 | 0.014 | 12.9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154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부표 3-16〉 연도별 청년 가구 소득수준 분포

(단위: 명)

| 연도 | 중위소득 50% 미만 | 중위소득 50~150% | 중위소득 150% 이상 | 전체 |
|------|-------------|--------------|--------------|--------|
| 2008 | 170 | 1,776 | 662 | 2,607 |
| 2009 | 138 | 1,688 | 638 | 2,464 |
| 2010 | 141 | 1,588 | 584 | 2,313 |
| 2011 | 150 | 1,594 | 554 | 2,298 |
| 2012 | 137 | 1,552 | 534 | 2,222 |
| 2013 | 153 | 1,414 | 542 | 2,110 |
| 2014 | 137 | 1,407 | 476 | 2,020 |
| 2015 | 115 | 1,342 | 454 | 1,911 |
| 2016 | 123 | 1,287 | 404 | 1,814 |
| 2017 | 120 | 1,246 | 411 | 1,778 |
| 2018 | 101 | 1,218 | 388 | 1,707 |
| 전체 | 1,485 | 16,111 | 5,647 | 23,243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17〉 연도별 청년 가구 소득수준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단위: 점, %)

〈중위소득 50% 미만〉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282 | 0.133 | 0.027 | 0.031 | 0.017 | 0.046 | 0.028 | 100.0 |
| 2010 | 0.262 | 0.128 | 0.025 | 0.024 | 0.016 | 0.043 | 0.021 | 100.0 |
| 2015 | 0.257 | 0.137 | 0.018 | 0.021 | 0.019 | 0.042 | 0.016 | 100.0 |
| 2018 | 0.256 | 0.143 | 0.017 | 0.030 | 0.018 | 0.032 | 0.018 | 100.0 |

〈중위소득 50~150%〉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28 | 0.033 | 0.021 | 0.014 | 0.014 | 0.030 | 0.016 | 0.0 |
| 2010 | 0.111 | 0.032 | 0.018 | 0.010 | 0.013 | 0.024 | 0.015 | 0.0 |
| 2015 | 0.109 | 0.035 | 0.013 | 0.010 | 0.016 | 0.023 | 0.011 | 0.0 |
| 2018 | 0.107 | 0.033 | 0.012 | 0.012 | 0.019 | 0.021 | 0.010 | 0.0 |

〈중위소득 150% 이상〉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066 | 0.004 | 0.016 | 0.008 | 0.009 | 0.022 | 0.006 | 0.0 |
| 2010 | 0.056 | 0.006 | 0.014 | 0.005 | 0.006 | 0.016 | 0.009 | 0.0 |
| 2015 | 0.052 | 0.005 | 0.009 | 0.006 | 0.013 | 0.011 | 0.008 | 0.0 |
| 2018 | 0.046 | 0.004 | 0.012 | 0.004 | 0.009 | 0.013 | 0.004 | 0.0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기타는 가구주나 배우자,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외 지위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18〉 연도별 청년 거주지역 분포

(단위: 명)

| 연도 | 서울 | 서울 외 수도권 | 도시 | 농어촌 | 전체 |
|------|-------|----------|-------|-------|--------|
| 2008 | 621 | 751 | 1,072 | 162 | 2,607 |
| 2009 | 596 | 717 | 1,001 | 151 | 2,464 |
| 2010 | 539 | 692 | 935 | 148 | 2,314 |
| 2011 | 537 | 678 | 937 | 147 | 2,298 |
| 2012 | 497 | 664 | 904 | 158 | 2,222 |
| 2013 | 470 | 640 | 853 | 147 | 2,110 |
| 2014 | 447 | 618 | 800 | 155 | 2,020 |
| 2015 | 413 | 582 | 762 | 153 | 1,910 |
| 2016 | 396 | 564 | 717 | 137 | 1,814 |
| 2017 | 383 | 565 | 692 | 137 | 1,778 |
| 2018 | 370 | 544 | 653 | 139 | 1,707 |
| 전체 | 5,269 | 7,015 | 9,325 | 1,635 | 23,244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3-19〉 연도별 청년 종사상 지위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 빈곤 추이

(단위: 점, %)

〈서울〉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21 | 0.025 | 0.026 | 0.014 | 0.013 | 0.027 | 0.016 | 5.5 |
| 2010 | 0.112 | 0.027 | 0.024 | 0.010 | 0.013 | 0.021 | 0.015 | 6.5 |
| 2015 | 0.114 | 0.032 | 0.019 | 0.011 | 0.018 | 0.021 | 0.012 | 6.3 |
| 2018 | 0.112 | 0.031 | 0.019 | 0.013 | 0.017 | 0.018 | 0.011 | 5.9 |

〈서울 외 수도권〉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27 | 0.033 | 0.021 | 0.014 | 0.014 | 0.031 | 0.014 | 5.9 |
| 2010 | 0.109 | 0.033 | 0.019 | 0.008 | 0.012 | 0.023 | 0.016 | 5.8 |
| 2015 | 0.112 | 0.036 | 0.012 | 0.010 | 0.015 | 0.022 | 0.012 | 4.7 |
| 2018 | 0.097 | 0.029 | 0.010 | 0.011 | 0.017 | 0.022 | 0.009 | 2.9 |

〈도시〉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20 | 0.036 | 0.017 | 0.014 | 0.012 | 0.028 | 0.014 | 7.4 |
| 2010 | 0.097 | 0.031 | 0.012 | 0.010 | 0.011 | 0.024 | 0.012 | 5.9 |
| 2015 | 0.092 | 0.033 | 0.010 | 0.009 | 0.014 | 0.020 | 0.008 | 6.7 |
| 2018 | 0.095 | 0.034 | 0.011 | 0.011 | 0.016 | 0.017 | 0.008 | 6.9 |

156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농어촌〉

| 연도 | 다차원 빈곤 | 다차원 빈곤 | | | | | | 소득 빈곤 |
|------|--------|--------|-------|-------|-------|----------|-------|-------|
| |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0.117 | 0.037 | 0.017 | 0.009 | 0.009 | 0.031 | 0.014 | 7.8 |
| 2010 | 0.122 | 0.041 | 0.016 | 0.013 | 0.007 | 0.027 | 0.014 | 7.1 |
| 2015 | 0.095 | 0.032 | 0.008 | 0.009 | 0.011 | 0.021 | 0.012 | 6.6 |
| 2018 | 0.118 | 0.043 | 0.011 | 0.009 | 0.019 | 0.024 | 0.014 | 13.0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다차원 빈곤 점수는 6개 하위 차원 점수의 합이나 영역에 따라 응답값이 있는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다차원 빈곤 점수의 합이 영역 점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소득빈곤은 기준년도 중위 가구 처분가능소득 50% 미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2. 제4장의 부표

〈부표 4-1〉 연도별 청년 중첩빈곤 분포

| 연도 | K=0 | K=1 | K=2 | K=3 | K=4 | K=5 | K=6 | 전체 |
|------|-------|-------|-------|-------|-------|-----|-----|--------|
| 2008 | 380 | 784 | 668 | 446 | 240 | 70 | 19 | 2,607 |
| 2009 | 408 | 792 | 643 | 351 | 189 | 73 | 7 | 2,464 |
| 2010 | 474 | 714 | 548 | 322 | 188 | 62 | 7 | 2,314 |
| 2011 | 419 | 709 | 568 | 366 | 157 | 70 | 10 | 2,298 |
| 2012 | 406 | 700 | 569 | 331 | 156 | 52 | 8 | 2,222 |
| 2013 | 393 | 677 | 518 | 301 | 159 | 50 | 12 | 2,110 |
| 2014 | 414 | 630 | 469 | 328 | 138 | 37 | 4 | 2,020 |
| 2015 | 418 | 561 | 456 | 297 | 133 | 39 | 5 | 1,910 |
| 2016 | 391 | 579 | 434 | 260 | 114 | 33 | 3 | 1,814 |
| 2017 | 413 | 540 | 449 | 263 | 88 | 23 | 1 | 1,778 |
| 2018 | 354 | 571 | 388 | 261 | 100 | 33 | 1 | 1,707 |
| 전체 | 4,470 | 7,256 | 5,709 | 3,526 | 1,663 | 543 | 76 | 23,244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

〈부표 4-2〉 연도별 차원별 청년 빈곤율

| 연도 | 경제력 | 주거 | 건강 | 고용 | 사회문화적 자본 | 안정성 |
|------|------|------|------|------|-------------|------|
| 2008 | 35.1 | 39.8 | 26.7 | 19.4 | 44.7 | 21.7 |
| 2009 | 32.6 | 36.3 | 19.5 | 19.6 | 44.4 | 22.0 |
| 2010 | 34.3 | 34.8 | 19.1 | 16.5 | 40.5 | 22.3 |
| 2011 | 34.9 | 33.2 | 21.7 | 17.8 | 45.2 | 20.4 |
| 2012 | 33.8 | 31.9 | 20.5 | 21.8 | 40.2 | 21.1 |
| 2013 | 33.5 | 32.8 | 20.2 | 20.2 | 42.1 | 20.6 |
| 2014 | 36.0 | 27.5 | 19.8 | 18.2 | 44.1 | 18.4 |
| 2015 | 36.5 | 27.4 | 20.1 | 23.0 | 40.2 | 16.6 |
| 2016 | 35.0 | 24.2 | 24.4 | 23.3 | 35.8 | 15.3 |
| 2017 | 26.8 | 25.3 | 22.4 | 23.9 | 38.4 | 15.3 |
| 2018 | 34.8 | 25.9 | 22.2 | 24.6 | 35.3 | 15.4 |

주: 기준년도 기준임. 각 연도 횡단면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각 연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저자 분석.